

2023 KODDI 연구요약집



발 간 사

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해를 거듭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해 KODDI 연구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분야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현장 및 연구자들의 참고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3년 KODDI 연구요약집'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중 31건의 연구내용을 본 연구요약집에 담았습니다. 2023년도는 장애인복지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초통계·자료', '건강·안전', '고용 및 직업재활', '사업 및 서비스 평가', '서비스', '이동권', '활동지원 및 자립', '편의'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역할 정립 방안 연구,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분석,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등을 수행하여 환경과 정책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이 수행한 모든 연구가 관련분야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실행 가능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연구·개발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요약집에 수록된 모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주신 연구진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장애계, 학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경혜

독자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개발 및 자립지원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별 정책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 및 선정하여 ‘기초통계·자료’, ‘건강·안전’, ‘고용 및 직업재활’, ‘사업 및 서비스 평가’, ‘서비스’, ‘이동권’, ‘활동지원 및 자립’, ‘편의’ 분야에 대한 시사성 있는 주제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수립 및 집행하며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노력의 성과를 모은 「2023 KODDI 연구요약집」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보고서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의 [자료실] - [연구보고서] 게시판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의 [개발원소개] - [조직도]를 참고하시어 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에 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33-0600

팩스 : 02-416-9567

목 차

I 기초통계·자료

1. 2023 장애통계연보 3
2.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13
3.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 23
4. 2023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9
5.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37

II 건강·안전

6.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 방안 연구 47
7.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체계 연구 55
8.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63

III 고용 및 직업재활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73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81
11.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분석 연구 89
12.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업종·직무개발 ... 97



IV 사업 및 서비스 평가

- 13. 2022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109
- 14.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115
- 15.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127
-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137

V 서비스

- 17.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151
- 18.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159
- 19.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165
- 20. 개인예산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173
- 2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연구 179

VI 이동권

- 22.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개선 연구 187
- 23. 장애인 이동패턴 분석을 통한 이동권 개선 연구: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197
- 24.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이동지원을 중심으로 203

VII 활동지원 및 자립

- 25.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실태조사 연구 211
- 26.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223
- 27.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1차년도) 237
- 28.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 249
- 29.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과정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 연구 ... 255

30.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269
3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의 BF인증 확대 방안 연구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279

I. 기초통계·자료



1. 2023 장애통계연보

2023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현지원, 권준성

요약

As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diversified over time and increase depending on the stages of the life cycle,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statistics data is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accordingly. The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is to collect and release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indexe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reflection of needs for welfare in each step of the life cycle. It also collects, reprocesses, and releases administrative statistics regarding achievements of welfar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23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presents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data regarding Korea's current status of disabled people's welfare. This annual report presents not only actual conditions of needs among disabled people but also input and output indexes useful for monitoring of each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administrative data of major governmental offices rela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reflect the general achievement of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are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2023, more analysis factors were added including the number of disabled ones registered in each region and the practice rate of regular exercise. To examine the welfare lev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ach region, existing indexes were re-analyzed based on the regions. As to overseas statistics, indexes of the OECD, EU, Germany, and Japan have been updated and then compared with Korea's welfare lev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rectly evaluate how actively the government implements its policies and related services in reflection of disabled people's needs in use of The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as a basis for establishment of welfare policies.



1 연구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서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 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요연구내용

1)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

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를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들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회조사,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 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3) 세부작성원칙

- 2023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4) 2023 장애통계연보 체계(소분류 기준)

○ 국내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RPD
장애 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수,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 신규 등록장애인 수, 전체 인구대비 등록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장애영유아 현황, 장애 아동 현황,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장애 정도 심사	제1조 제2조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개수 현황,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제25조
	건강행태	장애인 흡연 상태/하루 평균 흡연량,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중강도 신체활동/근력운동 시행일수, 규칙적 운동 실천률	
	보건의료이용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 현황 및 판정 결과, 장애인 암 검진 수검 현황 및 판정 현황,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 소견 현황,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진료비 현황/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관련 기관 현황,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주 평균 이용 시간/월평균 이용	
	정신건강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감 경험률,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본 상태 및 우울증), 정신 의료기관 현황, 인구 1인당 지역 사회 정신보건 예산	
	사망	장애인 조사망률,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가족	가구구성	가구 구성, 가구 규모,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가구 규모/가구 세대 구성	제6조 제7조 제23조
	가족형성	결혼 상태, 평균 초혼 연령,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 유무,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 가구의 분포	
주거	주거	전체/장애인 가구의 주택 소유 가구 현황, 전체/장애인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 유형 현황, 주택 사용면적 현황, 사용 방 수 현황, 무주택 기간 현황,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제19조
	주택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집 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주거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교육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 수준	제7조 제24조 제26조
	보육	보육시설 이용 현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유치원	유치원 이용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RPD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학급 학생 수, 졸업생 진학 현황, 졸업생 취업 현황	
노동과 직업 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인적 구성/종사상 지위/산업/직업, 임금근로자 특성/비정규직 비율, 실업자 인적 구성/구직활동/희망 일자리 특성, 비경제활동인구 인적 구성/구직단념자 수	제6조 제26조 제27조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기업체 장애인 고용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수, 장애인기업 조직 형태,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취업관련 활동경험	지난 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 훈련 경험 현황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이용 장애인/근로장애인의 임금,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사업별 지원자 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현황,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현황,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현황	
재정	재정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소득과 소비	소득	장애인 가구 및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소득 원천별 연평균 가구 소득/소득구간별 비중	제28조
	소비	월평균 가구 지출, 연도별,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	
	빈곤	장애인 가구 및 전체 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 갭/소득 분위별 가구 소득	
문화 및 사회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생활체육 참여 형태	제29조 제30조
	사회참여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투표 미 참여 이유, 장애인 공무원 수(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사회적 고립도	
사회 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장애연금 수급 현황, 장애급여 수급 현황, 건강보험 가입 현황	제19조 제28조
	공공 부조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정신질환 의료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의료보장 현황,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RPD
	사회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예산, 지원 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 시간) 현황, 지원 현황, 수급자 수, 안정조사 실시 현황, 기본급여 이용 현황, 추가급여 이용 현황,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본인 부담금 현황,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활동지원사 등록 인원, 활동 인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지원 실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장애인 지역사회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 현황	
인권 보호	사회적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의견제출 현황,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 현황,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처리 결과/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학대폭력경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성폭력 상담소 수,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 학대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현황, 장애인 학대 피해자 현황, 장애인 학대 유형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급 현황,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설치 현황,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현황,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지수 현황,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웹 접근성 현황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재난 및 안전	장애인 응급안전망	응급출동현황	제10조 제11조 제14조	
	비의도적사망사고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RPD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 국외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교육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 16-29세 이하
	고용	장애인 고용율,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장애인 실업률
	재정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장애인복지 현금급여/현물급여/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복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EU	정신건강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인구 10만 명 당 (공공)지역사회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건강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주거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 박탈률,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 부담률, 장애인의 주거 지내 환경 문제
	교육	장애인의 학업중단율,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독일	고용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인의 실업률,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빈곤	장애인의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장애인의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 위험에 처한 비율, 장애인의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수
	교육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비율,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현황,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 영역 변화, 특수학교 현황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률/고용 현황/의무 고용 현황, 의무 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 연방 통합청 지출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프랑스	재정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복지	장애인 편입 급여 현황, 장애인 편입 급여 항목별 이용자 및 지출액
	정신건강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 급여 수급자 현황, 정신질환 관련 병원 수/병상 수/관련 환자 현황 수
	장애인구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구 현황, 시설 거주 장애인구 현황
	교육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의 가구 상황 및 교육 수준, 구직자 교육 수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고용	경제활동참여, 고용, 실업 및 구직
	재정	장애인복지 지출
	복지	장애인구 빈곤율, 성인장애수당(AAH)
	정신건강	정신건강관련 시설
일본	장애인구	일본 장애인 수,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일본 신체장애인(재택환자)/지적장애인(재택환자)/정신장애인(외래환자) 수
	교육	특별 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특별 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특별 지원학교의 재학생, 담임 교원, 학교 수, 특별 지원학교 수, 특별 지원학교 교직원 수,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특별 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특별 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특별 지원교육 관련 예산 개요
	고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독립행정법인 등의 고용 현황,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취업소개 건수, 장애인 해고 수
	재정	장애인시책 관계 예산 개요
	복지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정신건강	정신과 병원의 상황, 정신과 병원의 개황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특히 한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장애인복지를 진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2022 Panel Survey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김현지, 김태용, 현지원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panel survey is to analyze personal, family,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disabled persons' changes in their adaptation to the disability and their relation with the society and to collect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To this end, a panel of 6,121 individuals was formed for the first-year survey in 2018 and then the 5th-year survey was conducted in 2022 to establish scientific and systematic longitudinal data based on which changes in life after the incidence of disability could be explored.

For about 7 months from March to September 2022, a series of preparation steps were taken for the survey, and then for about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survey was conducted. Finally, the survey was completed on 4,904 individuals in the panel and their families.

1 연구배경

- 장애인삶 패널조사(승인번호 : 제438001호)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단자료의 구축을 목표로 2018년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장애등록



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6,121명 표본을 패널로 구축함.

- 2022년에 실시된 5차 년도 조사는 패널(장애인) 6,121명 중 4,90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원표본 유지율 80.12%).

○ 본 보고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5차 년도 전반적 조사 과정 및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함.

- 5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
- 5차 년도 조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5차 년도 무응답 특성 분석.

2 주요연구내용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한 등록장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임.

○ 조사표 구조

- 장애인과 그들의 가구원이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주요 조사 영역별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 건강·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 사회참여: 장애인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 조사표는 총 3종(패널용, 가구주용, 가구원용)으로 구성함.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TAPI)하여, 전문면접원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함.

○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 2022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조사주기는 1년으로 매년 동일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및 추적원칙

- ‘패널(장애인)’은 추적 조사 대상이며, ‘가구원’은 패널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추적 여부가 결정됨.
- ‘가구원’은 패널과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조사에 참여함. 조사참여 이력이 있는 ‘가구원’ 중 조사 시점 비동거 상태이거나, 조사 참여 의향이 없으면 추적 조사하지 않음.
- ‘패널’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가구원’은 추적 조사하지 않음.
- 본 조사는 본인응답이 원칙이며, ‘만 12세 미만의 패널’ 또는 ‘응답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응답을 허용함.

2) 2022년(5차) 조사내용

○ 5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방향

- 2022년 조사표는 가급적 동일한 설문 문항을 유지하여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단,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이용자 요구사항 및 문항 타당도를 고려하여 추가, 삭제 및 수정하였음.

○ 조사내용

〈표 2-1〉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내용
장애 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와 관련한 경험, 장애수용
	심리상태	우울 수준, 자아존중감,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충동 행동, 자살 시도 경험 및 회수
	사회관계	의사결정 주체,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가족과의 갈등 경험, 가족과의 갈등 유형, 가까이 지내는 주변 지인 수 및 만남 빈도,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어려움 상담 상대, 주로 사용하는 SNS, SNS 이용 시간 및 이용 이유, SNS 관련 평가,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20), 사회적 관계망('22)
	경제상황	가구의 월평균 수입, 월 평균 생활비,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 패널의 장애로 인해 생활비 이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자산과 부채, 가구 경제 상황 개선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수급 시기/내용
	주거	이사 이유, 주거형태, 주택 점유 형태, 주택 마련 방법, 집의 크기/방 개수, 주거 내 필수적 시설 설치 여부('21), 거주 장소 선택 요인



조사영역		내용
건강 · 의료	건강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전년 대비 건강 상태, 만성질환(질병) 유형, 운동 일수·횟수·시간, 운동하지 않는 이유, 운동 유형, 주관적 몸무게, 수면시간, 하루 식사 수/식사량, 패스트푸드 섭취 수, 식생활, 민간의료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개수, 보험 가입 거부당한 경험 및 보험 유형, 건강 및 관리를 위한 강화 사항,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 항목,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 여부·빈도·음주량,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정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22)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입원 이유, 이용 의료기관 유형, 재활치료 서비스, 병원 이용 시 주 교통수단, 병원까지 이동시간,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도, 진료 결과 설명 충분성,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여부/복용 알약 개수, 복약순응 여부('22), 복약불순응 이유('22), 건강검진받은 경험,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병·의원 진료받지 못한 경험/횟수, 치과 진료받지 못한 경험/횟수,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의료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부인과 검진 경험('22), 부인과 검진받지 않은 이유('22)
	안전	평상시 안전도, 사고 경험, 사고 종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여부,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주거환경 평가, 주택 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
자립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도움받고 있는 일상생활 유형 및 정도, 도움 제공 시간,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 및 정도, 도움 제공 희망 시간, 집안일 참여 시간, 집안일 부담 정도, 가정 내 미취학 아동 유무, 아동 양육 참여 여부/시간/유형, 아동 양육 부담 정도 및 부담 만족도,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성인 유무, 외출 정도, 외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 방법,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어려움 정도 및 이용 시 애로사항, 경제생활 관련 어려움 정도,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여부('22), 장애인 편의시설 인지 여부/이용경험/만족도('22), 건축물 용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경험/만족도('22)
	여가활동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동반자, 여행 경험 및 횟수/일수,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 반려동물 유무 및 키우는 이유
	자립생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여부,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여부 및 사용 여부,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이용 시간/만족도/불만족 이유,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충분성 및 희망 시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관/시설 이동시간, 거주 지역 생활 불편 정도 및 이유,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 정책
	교육	재학 상태, 보육시설/유치원/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중단 학년(학기), 보육시설 이용시간, 현재 학년(학기), 전공, 학교/보육시설 형태, 입학 형태, 학비 지원/부담, 등하교(등하원) 소요시간, 등하교(등하원) 시 도움 제공자, 장애인 학생지원센터 지원 경험 및 희망 지원 유형, 학교생활 적응 정도 및 문제점,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필요 여부/이용 여부/만족도, 진학/진로계획, 사교육시설 유형 및 이용시간, 친구와의 관계('22), 희망 교육수준, 향후 계획, 아르바이트 경험, 평생교육 경험 및 유형, 참여하지 않은 이유, 참여 기관,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빈도, 학비 부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희망 활동
	고용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무 종류/근로시간 제한 이유, 근로 여부,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 형태, 근로시간/희망 근로시간,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한 달 평균 소득, 재택근무 여부 및 시간, 직장 만족도, 구직/이직 경험 및 이유, 근로 가능 여부, 근로를 위해 필요한 항목, 구직 활동, 구직 애로사항, 구직하지 않은 이유, 향후 구직 의향, 자영업자 일자리(사업체) 소득

조사영역		내용
사회 참여	장애관련 서비스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인지/이용/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권	장애관련 교육(인권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 주변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 존중받을 권리, 주변으로부터 차별받는 정도, 차별받고 있는 부분, 차별 대처 방법, 괴롭힘/폭력 경험 및 빈도, 폭력 행사자, 폭력 경험/폭력 목격 대처 유형, 장애인 여성으로 차별받고 있는 정도, 인권증진 강화 사항,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지가 어려운 이유, 웰다잉/안락사 의견
	결혼생활 및 성	혼인상태, 혼인하지 않은 이유, 향후 혼인 의향, 이혼/별거/사별 경험,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 경험으로 힘들었던 점, 재혼 경험 및 이유, 결혼생활 시작 년도,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로 인해 가장 힘든 점, 재혼 의향 및 그 이유, 자녀 유무, 시댁관 및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재혼 자녀 유무,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여부, 장애가 자녀계획에 미친 영향, 자녀계획,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 임신 경험 여부,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 임신·출산·육아 검진 관련 교육 여부/교육 종류/교육 장소, 산후조리원 경험 여부, 인공수정 경험 여부, 임신중절 경험 여부/이유/강요 여부, 배우자와 갈등 여부/이유/해결 방법,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도, 성 관련 상담,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및 조치사항
	노후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준비 사항, 경제적 준비 정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노후생활 걱정, 주관적 노인 나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희망하는 노후활동, 가족과의 연락 빈도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주: 괄호는 문항이 수정된 조사년도를 의미함

3) 5차 년도 자료 구축

○ 데이터 에디팅

- 데이터 에디팅은 크게 횡단 데이터 에디팅과 종단 데이터 에디팅을 진행함.
- 횡단 데이터 에디팅의 주요 내용은 조건부 문항(Contingency Question)의 응답자 확인, 문항별 지시문 확인, 극단치 응답값에 대한 응답 재확인, 문항간 로직 확인, 기타로 응답된 경우 기타(오픈) 내용 확인 등임.
- 종단 데이터 에디팅을 통해 5차 년도 응답값이 1-4차 년도 응답값 대비 변동이 큰 경우와 종단 데이터 비교 시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함.



4) 표본유지율 및 무응답 특성 분석

○ 표본유지율

-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5차 년도 조사의 조사대상은 1차 년도 구축된 장애인 6,121명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임.
- 5차조사는 원표본 기준 4,904명 조사 완료하여, 약 80.12%의 표본유지율(=5차 년도 조사완료자/1차 년도 패널구축 6,121명)을 보임.

〈표 2-2〉 조사완료 현황

조사차수	조사완료 현황(명)			표본 유지율(%)	표본이탈	
	참여	미참여	계		조사미참여(무응답)	조사불가
1차(2018)	6,121	-	6,121	100.0	-	-
2차(2019)	5,527	594	6,121	90.30	471	123
3차(2020)	5,259	862	6,121	85.92	572	290
4차(2021)	5,024	1,097	6,121	82.08	694	403
5차(2022)	4,904	1,217	6,121	80.12 ^{주)}	664	553

주) 원표본 유지율(%) = (4,904/6,121)×100

○ 5차년도 무응답자 특성

- 조사미참여 장애인 표본은 1,217명(표본이탈률 19.88%)으로, 표본이탈 사유는 사망이 33.53%(408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사거절(강력거절 포함) 32.21%(392명), 장기비수신 15.20%(185명), 연락처 및 주소불명 6.90%(84명) 순임.

5) 5차 년도 종단가중치¹⁾

- 5차 년도 가중치 부여대상은 1-5차 연속참여자 4,585명과 5차 조사에 응답한 4,904명임.
- 5차 년도 가중치는 직전가중치를 기반으로 무응답 및 응답패턴을 고려하여 응답 확률추정모형과 최근가중치를 승계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함.

1) 「김현지, 김태용, 현지원, 권준성. (2023). 장애인삶 패널조사 데이터 품질 연구 (202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 5차 가중치는 총 2개 종류(wt5_1, wt5)로 각각 연속참여자와 5차 참여자에게 부여함.
- 응답확률 추정을 위해 당해차수 조사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고,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는 패널 특성인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대', '주택점유형태'임.
- 이때 투입되는 설명변수의 데이터는 가장 최신시점인 이전차수 자료를 활용함.
- 가중치 작성의 일관성 및 조사결과 공표 등을 고려하여 이전차수와 동일하게 장애특성 및 인구특성 변수를 투입함.
- 응답확률을 추정된 후, 그 역수를 기본가중치에 적용하여 무응답 보정하고, 레이킹 비를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산출함.

6) 장애인살 패널조사 5차 조사 결과

○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성'이 56.7%, '여성'이 43.3%임.
-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가 29.4%로 가장 높고, '지체 장애'(19.7%), '뇌병변 장애'(16.8%), '내부/안면 장애'(12.5%), '지적/자폐성 장애'(9.5%), '시각 장애'(8.6%), '정신 장애'(3.5%)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이 36.9%, '경증' 63.1%임.
- 최종학력별로는 '중/고등학교 졸업'이 55.2%로 과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이하'(19.7%), '전문대 이상'(14.7%), '무학'(10.4%) 순임
- 평균 가구원 수는 2.46명이며, '2인 가구' 비율이 38.4%로 가장 높고, '1인 가구'(21.8%), '4인 가구 이상'(20.1%), '3인 가구'(19.7%) 순임

○ 패널의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직업'은 4.11점으로 전체 항목 중 장애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건강'과 '외출/여가활동'은 전년도 대비 약 0.05점 높게 나타남.
- 패널의 장애수용 정도를 살펴보면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에 대해 2.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패널의 건강·의료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난 6개월간 패널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비율이 55.9%로, 4차 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만성질환(질병)에 대해서는 63.6%의 패널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평균 보유 개수는 1.99개임.

○ **패널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을 살펴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배우자'가 도와준다는 비율은 32.9%임.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 노후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비율이 17.8%임.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해 '부족하다'는 비율은 64.0%로 '충분하다'(36.0%) 보다 높게 나타남.
-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61점임. 항목별로는 건강(4.98점), 사회적 관계(5.58점), 주거환경(6.30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월평균 가구 소득 비중은 근로소득이 6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는 187.28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식료품비(외식비 포함)'가 66.5만원(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6.0%임.

○ **조사대상자(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성이 42.9%, 여성이 57.1%임.

3 연구활용방안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함.

- 이에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조사 준비를 하였고,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함. 최종적으로 장애인 4,904명과 가구원을 조사 완료함.

- 장애등록 초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추적 조사로 장애수용 과정 속에 겪는 변화 방향을 분석 및 예측하고, 시의적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수요를 파악함.

- 또한 조사 결과를 지속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널조사라는 여건 조성을 토대로 정책·학계의 통계 이용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

A Study on Archiving of Disability Statistics Data

김현지, 김태용, 최효임, 권준성

요약

As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service is emphasized as basic data necessary for policy making, the use rate of government-approved statistical data has continued to increase gradually. Accordingly, the demand for 'panel data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which is an example of government-approved statistical data,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has established panels among 6,121 disabled persons since 2018 and conducted panel surveys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approval no.: 438001). It also has collected and produced annual disability data through statistics news letters, Annual Reports of Disability Statistics, etc. However, the quality of such data fails to meet data users' expectation and the use rate of disability statistics data is low in general. Against this background, the regular statistics quality diagnosis result as part of 2021 Panel Survey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indicated the ne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panel data (microdat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sability statistics data archive system. To this end,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y statistics in terms of statistics produ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and suggests specific ways of establishing a disability statistics system. Specifically, existing domestic statistical systems are analyzed to derive service contents and functions to be introduced to the disability statistics data archive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l data is also analyzed to determine the necessary scope and contents of data to be available at the archive system. Finally, the statistical visualization and applicability of various types of data are examined to expand the service scope and meet many different needs of the disability statistics data archive system.

The disability statistics data archive system is expected to play the following roles in the future: First, it is to provide statistical data and microdata from the Panel



Survey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Second, it is to provide various statistical data necessary for disability-related policies. In addition, it is to function as a window between statistics producers and consumers for their smooth communication. This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making and base expansion of statistical data consumers. Ultimately, all such efforts will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disability statistics data archive system.

1 연구배경

-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장애관련 통계자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로 생산된 조사의 이용 및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삶 패널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음.
 - 장애관련 통계는 정책전문가들에게 장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자들에게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단체종사자들에게 장애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 통계를 활용하여 사회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결과 분석이 중요함¹⁾. 따라서 생애주기별 다양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의 수집·생산 및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관련 통계자료의 종합적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더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축적과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역시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장애통계의 현황 분석 및 향후 장애관련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장애인삶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생산 중인 장애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하여 장애통계의 수집 가능성을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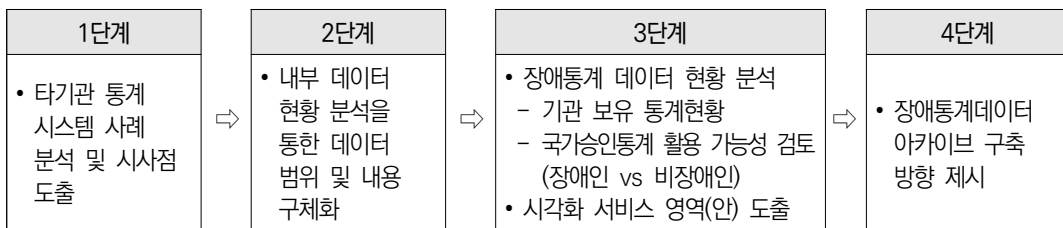
1) 허상웅 외. (2013). 전파방송 산업통계DB구축 및 관련자료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토하고,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통계시각화 영역 및 지표를 검토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내용 및 방법

- 데이터 아카이브란, 숫자와 문자 뿐 아니라 음성, 이미지 등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체계적 축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패널조사 자료, 통계표 형태의 수치자료, 관련 보고서 및 메타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장애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 진행함.



[그림 3-1] 연구흐름도 및 주요내용

2) 결과 및 시사점

- (1단계) 타기관 통계시스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8종의 타기관 통계시스템 (본문 표 II-2-1 참조)을 통계포털의 체계, 기능 및 특징, 예산 측면에서 검토.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쉬운 레이아웃,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 시각화 기능의 고도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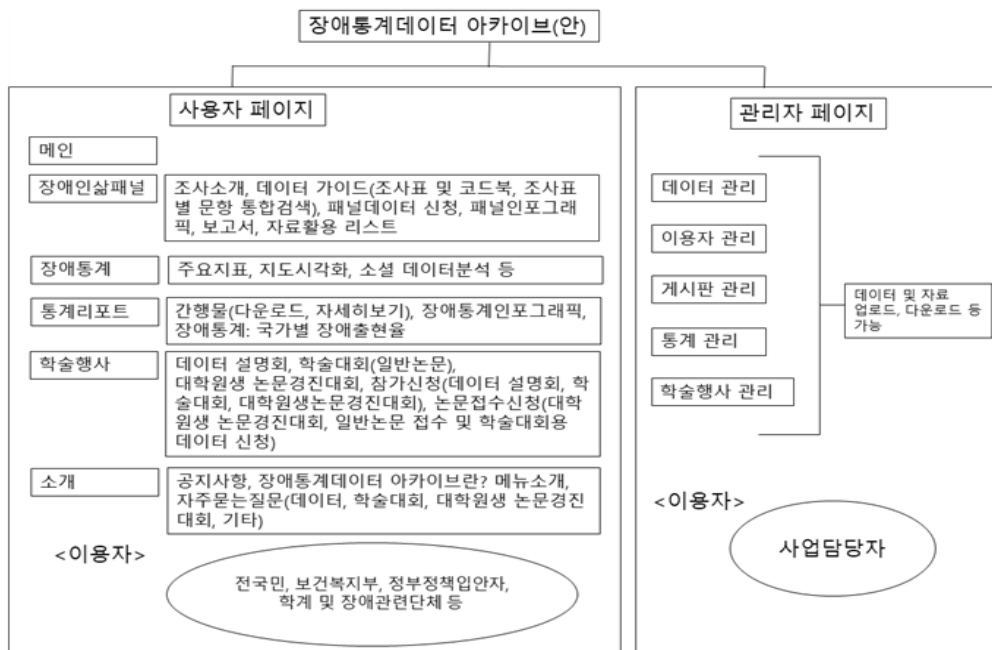


○ (2단계) 활용 가능한 내부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장애통계 수집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현황, 서비스확대 및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콘텐츠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보유한 통계자료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확보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검토.
-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삶 패널조사, KODDI 통계 뉴스레터,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등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①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교 통계, ② 장애유형별 통계, ③ 시도별 통계가 ④ 시계열적 수집 및 서비스, ⑤ 해외통계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임.

○ (3단계) 2차 자료 분석 및 장애통계 시각화 서비스 영역(안) 도출

- '장애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11명의 장애 및 통계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최종 '주요 통계 영역(안)'은 ① 장애인구, ② 건강 및 보건, ③ 교육, ④ 경제활동 및 일자리 정책, ⑤ 소득과 소비, ⑥ 주거 및 재난안전, ⑦ 여가



[그림 3-2]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종합체계도(안)

및 사회참여, ⑧ 접근성, ⑨ 차별과 학대, ⑩ 재정과 복지자원 의 10개의 영역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1개의 통계지표를 선정함(본문 표 IV-3-8 참조).

○ (4단계)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방향 제시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의 목적과 방향을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통계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하면서, 이용자의 목적과 편의에 맞는 장애통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의 주요 서비스 분류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장애통계, 토예리포트, 학술행사, 소개로 구성
- 장애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장애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시각화 서비스 지표(안)을 구성함. 1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진행, 시각화 영역 및 지표(안)을 마련함.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영역과 101개 지표의 시각화 서비스(안)을 구성함(본문 표 V-2-4 참조).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장애에 구애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에 웹접근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접근성 있는 장애통계 데이터 아카이브를 위해 1) 플랫폼 자체의 접근성(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2) 데이터의 접근성, 3) 외부에서 유입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4) 사용자가 문의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연구활용방안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는 연속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진행해야 함. 데이터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확보 및 홍보 계획의 수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구축기, 내실화, 고도화 및 확산기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시스템 인프라, 기타 기능 등 보완·개선을 수행.



〈표 3-1〉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

연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사업목표	장애통계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초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삶패널 마이크로데이터 정보 및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변수 검색 시스템 및 다운로드 시스템 • 장애인삶패널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관련) • 장애통계지표 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계 시각화 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그래프, 지도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 • 지역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발간물 미리보기 시스템 도입
연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사업목표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내실화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국가통계 통합DB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분석시스템 구축 • 지역통계 확보 • 소셜빅데이터 분석 구축 • 시스템 안정화 및 웹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통계 확보 • 장애통계DB 시계열 정보 확장 및 신규 지표 추가 • 통계 리포트 간행물 서비스 •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통계 이벤트/ 홍보 기획 및 실시(예: 장애통계 데이터 아카이브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연도	2027년 (5차년도 ~)	
사업목표	장애통계 데이터 아카이브 고도화 및 확산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 검색기능 고도화 • 이용자 친화적 통계서비스 개발 및 확산 • 장애인삶 패널 마이크로데이터 및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통계 DB 수정 및 시계열 확장, 갱신 및 수정의 시의성 강화 및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 통계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기획 및 실시(계속) 	

○ 장애통계 데이터 아카이브는 구축기에서 고도화까지 다년간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바, 지속가능한 재정 계획 및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장애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행정(데이터 진흥 시행계획, 행안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사전협의 및 검토,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필요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취향향목 조치를 통한 보안성 확보, 웹접근성 등을 위해 IT부서의 협조가 필수임.

4. 2023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023 Index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mong Disabled Persons

조윤화, 최승훈, 박시은

■ 요약

This study re-analyzes raw materials of the status of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presents major index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cluding the economic level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member, poverty rate of disabled persons, income gap, and quintile multiplier. Major findings may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asset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person by the end of March 2022 was 386,770,000 won and the average debt was 50,240,000 won. The net asset (asset - debt) was 336,530,000 won. Second, the asset to debt ratio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member as of March 2022 was 13%, and the saving to debt ratio was 58%. Third, the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person in 2021 was 40,240,000 won, which accounted for 73.9% of the total amount of disposable income, 54,400,000 won. Fourth, in 2021, the earned income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person was 22,670,000 won, which accounted for 49.9%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s was 22.0%. Fifth, the average income of the 1st quintile among households with a disabled member in 2021 was 13,230,000 won, and that of the 5th quintile was 137,130,000 won. Sixth, in 2021, the expenditure of households with a disabled family member is was 22,210,000 won, which was somewhat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total households, 28,560,000 won. Particularly in one quintile of the entire households with a disabled one in the year of 2020, the food expenditures of households amounted to 3.77 million won, housing expenses 1.91 million won, and medical expenses 1.58 million won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among low-income level households of a low-income quintile, the percentage of living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was high. Finally, the poverty rate of disabled persons in 2021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was 39.4%, which was about 2.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15.1%.



1 연구배경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기능적 제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및 편견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취약하여 가장 쉽게 빈곤에 노출되는 집단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소득 확대와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적 확충으로 장애인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와 장애인인구의 집단 간 소득격차는 좁혀지기보다 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임
 -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소득 기준)은 4,546만원으로 전체가구 6,414만원의 70.9% 수준임
- 특히 중증장애인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와 경증장애인 중심의 일반노동시장 등은 장애정도별로도 소득격차를 보임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기준)은 심한 장애는 2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42.8%로 심한 장애의 고용률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고용률의 절반 수준임
-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와 장애인 빈곤과 불평등 같은 소득분배 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불충분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구, 전체인구, 비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비교·분석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를 산출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9~2022)를 활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함
 - 첫째, 장애인 가구 경제상황(가구소득, 가구지출, 자산, 부채, 재무건전성)을 분석함

- 둘째, 장애인 빈곤지표(빈곤율, 빈곤갭 비율)를 분석함
 - 셋째, 장애인 소득불평등 지표(지니계수, 분위배율)
 - 넷째, 행정통계로 보는 장애인 소득보장 데이터를 수집함
- 가구 경제상황의 대표적 지표로서 평균소득과 소득원천별 현황,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장애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024만원으로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인 5,440만원의 73.9% 수준임.

〈표 4-1〉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경상소득	시장소득 ¹⁾	가처분소득 ²⁾
2021	전체	6,414	5,641	5,440
	장애인 가구	4,546	3,433	4,024
	비장애인 가구	6,608	5,870	5,587
2020	전체	6,125	5,341	5,196
	장애인 가구	4,557	3,455	4,029
	비장애인 가구	6,301	5,553	5,327
2019	전체	5,924	5,270	5,019
	장애인 가구	4,246	3,280	3,732
	비장애인 가구	6,115	5,496	5,165
2018	전체	5,828	5,231	4,929
	장애인 가구	4,153	3,294	3,650
	비장애인 가구	6,024	5,458	5,078

주: 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3) 음수는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함

- 2021년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2,267만원으로 가구소득의 49.9%이며, 공적이전소득은 22.0%임.



〈표 4-2〉 소득원천별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및 증감률(2021년)

(단위: 만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가구	가구소득	1,323	3,080	5,036	7,649	14,973
	근로소득	345	1,569	3,034	5,159	10,514
	사업소득	104	520	1,013	1,493	2,668
	재산소득	88	185	263	368	1,223
	공적이전소득	600	653	647	573	528
	사적이전소득	186	154	79	56	40
	증감률	2.2	4.4	4.0	4.4	5.4
장애인 가구	가구소득	1,308	3,051	4,920	7,604	13,713
	근로소득	140	1,111	2,366	4,381	8,773
	사업소득	45	416	899	1,664	2,754
	재산소득	70	233	333	510	1,204
	공적이전소득	886	1,090	1,187	947	938
	사적이전소득	167	201	136	103	44
	증감률	2.3	5.6	1.1	4.3	3.2
비장애인 가구	가구소득	1,326	3,084	5,046	7,652	15,041
	근로소득	385	1,627	3,092	5,212	10,608
	사업소득	116	533	1,023	1,481	2,663
	재산소득	91	179	257	359	1,224
	공적이전소득	545	597	601	547	506
	사적이전소득	190	148	74	53	40
	증감률	2.2	4.3	4.2	4.4	5.4

주: 1) 소득5분위는 전체가구(장애인·비장애인가구 포함)의 소득을 기준으로 20%씩 균분한 구간을 사용함

2)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임

3) 증감률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년도 × 100

- 2021년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2,221만원으로 전체가구 2,856만원에 비해 다소 낮음. 특히 2020년 장애인 가구 내 1분위의 식료품비는 377만원, 주거비 191만원, 의료비 158만원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 및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음.

〈표 4-3〉 소비 비목별 가구지출 및 구성비(연도별)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구성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전체 가구	소비지출	2,856	2,766	2,732	100.0	100.0	100.0
	식료품비	908	868	820	31.8	31.4	30.0
	주거비	344	330	322	12.1	11.9	11.8
	교육비	288	297	314	10.1	10.7	11.5
	의료비	202	186	184	7.1	6.7	6.7
	교통비	262	254	257	9.2	9.2	9.4
	통신비	169	168	165	5.9	6.1	6.1
	기타지출	682	663	671	23.9	24.0	24.5
	중양값	2,484	2,400	2,360	-	-	-
장애인 가구	소비지출	2,221	2,205	2,077	100.0	100.0	100.0
	식료품비	715	694	659	32.2	31.5	31.7
	주거비	295	284	269	13.3	12.9	12.9
	교육비	147	160	140	6.6	7.2	6.8
	의료비	253	265	241	11.4	12.0	11.6
	교통비	198	188	188	8.9	8.5	9.0
	통신비	129	130	122	5.8	5.9	5.9
	기타지출	485	483	459	21.8	21.9	22.1
	중양값	1,780	1,758	1,630	-	-	-
비장애인 가구	소비지출	2,922	2,829	2,807	100.0	100.0	100.0
	식료품비	928	888	838	31.8	31.4	29.9
	주거비	349	335	328	12.0	11.8	11.7
	교육비	303	312	333	10.4	11.0	11.9
	의료비	197	177	177	6.7	6.3	6.3
	교통비	269	261	265	9.2	9.2	9.4
	통신비	173	173	170	5.9	6.1	6.1
	기타지출	703	683	695	24.1	24.2	24.7
	중양값	2,550	2,468	2,434	-	-	-



○ 빈곤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장애인 빈곤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39.4%로 전체15.1%의 약 2.6배 높음

〈표 4-4〉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단위: 만원, %)

구분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
2021	전체	3,207	21.1	10.7	3,171	15.1	4.9
	장애인	1,281	56.1	37.0	1,940	39.4	13.3
	비장애인	3,278	19.6	9.6	3,223	14.1	4.5
2020	전체	3,018	21.5	10.7	2,998	15.3	4.6
	장애인	1,278	54.8	36.4	1,871	39.7	12.2
	비장애인	3,081	20.1	9.6	3,038	14.3	4.3
2019	전체	2,970	21.4	10.9	2,875	16.3	5.4
	장애인	1,175	56.0	36.4	1,715	42.2	14.0
	비장애인	3,024	19.9	9.8	2,920	15.2	5.0
2018	전체	2,875	21.0	10.4	2,756	16.7	5.7
	장애인	1,245	54.6	35.1	1,674	41.5	15.2
	비장애인	2,923	19.6	9.4	2,798	15.6	5.3

주: 1) 본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용MD로 작성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재산소득에 이자비용 차감여부)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4)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였으며, 빈곤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함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구, 전체인구, 비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비교·분석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의 경제적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동 연구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

-
-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가구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과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성과를 평가하는데, 동 지표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5.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on Factors of Disabled Women in Economic Activity Depending on the Age Group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김영수, 오화영, 이선화

요약

The UN views disabled women in Korea as suffering the double discrimination of 'woman' and 'disability.' This issue also involves the concern about the fact that in terms of economic activity,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women is as low as only a half of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men. In legal perspectives, the Act on the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 takes into no consideration about disability when it comes to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s Act" takes into no account the gender when it comes to the economic activ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2021,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of disabled women was 24.1%, still remains low compared to that of disabled men (47.0%) and that of women in the entire population (53.3%). Among the elderly group, the education level was lower than that of disabled men whil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among those in their 40s or younger. The use rate of data communication devices was lower than that among disabled men. The percentage of disabled ones with difficulty in information acquisition was 90% or higher among both men and women. As to the income level of disabled women in each business sector, the business areas of the highest level were finance and insurance businesses. Those of the second highest level were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trol service businesses. Those of the third highest level were specialization, science, and technical service businesses.

This study includes FGIs a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isable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of disabled women, making job information available to disabled women



needs to be added to supportive measures for their higher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traffic inform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use transportation means more conveniently. Third, communal childcare environments need to be created.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child rearing information based on the disability type and open a window for access to such child rearing information to secure that the parents can rear a child. Paternity leaves need to be available for both woman with disabilities and her spouse and support for the childbirth of the woman with disabilities and rearing needs to be added. Finally, laws concerning women's economic activity need to be revised for their better accessibility to such activity. A Presidential enforcement ordinance regarding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women with disabilities can be a sufficient legal basis.

1 연구배경

- UN(United Nations)의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에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함.
-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우려사항은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심화되는 문제 등임.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남성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이중차별 우려가 감지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왔으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요인별 실태를 분석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 분석 및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24.1%로 2014년도에 비해 2.2%p 증가함.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3%보다 낮은 수치임.
-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21년 22.2%로 2014년 19.8%에 비해 2.4%p 상승하였으나, 남성장애인 고용률(43.8%)의 0.51배 수준임.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0.73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개선의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장애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음.
-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여부는 여성장애인 82.0%, 남성장애인 72.8%로 여성장애인(82.0%)로 남성장애인(72.8%)보다 다소 높으나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가 남성장애인이 더 높음.
- 의료시설 만족도에서 여성장애인(57.3%), 남성장애인(55.9%)로 여성장애인의 만족 비율이 1.4% 높음.

○ 여성장애인의 교육

-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비율이 3.3%로 남성장애인(11.1%)보다 1/3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심각한 수준임.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40대 이하에서 대체적으로 남성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혼인 및 출산

-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39.1%로 남성장애인(60.4%)보다 -21.3%p 낮으며, 전체인구 중 여성의 “배우자 있음”(55.2%)보다 -16.1%p 낮음.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39.9%로 남성장애인(6.6%)보다 30%p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출산 비율은 91.3%이며, 출산 연령대는 “만20~24세”가 17.1%, “만25~29세”가 34.2%, “만30~34세”가 35.8%, “만35~39세”가 8.0%,



“만40~44세”가 5.0%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정보이용

-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 84.8%이며, 컴퓨터 사용 18.2%, 인터넷 사용 24.4%로 남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이동

- 여성장애인의 외부활동 불편 정도는 “불편함(매우+약간)” 57.6%으로 남성장애인 (43.0%)보다 높음.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 (40.6%)”,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32.9%)”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 여성장애인의 대인관계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60.2%, ‘불만족(매우+약간)’ 39.9%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도(73.7%)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편임
-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경험은 동호회 활동이 2.2%, 종교 활동이 21.1%, 봉사 활동이 4.3%로 종교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만족(매우+약간)’ 87.1%, ‘불만족(매우_약간)’ 12.9%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정치활동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4.6%,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1.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3.7%로 나타남.

○ 산업별 및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 산업별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은 1순위인 금융 및 보험업의 평균 연봉 34,051천원(4,782명), 2순위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평균 연봉 26,750천원(1,219명), 3순위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연봉 32,954천원(1,269명), 4순위인 정보통신업의 평균 연봉 22,453천원(2,784명)으로 나타남.
- 직업별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사무 종사자에서는 25,303천원(31,42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는 23,792천원(14,314명)으로 나타남.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분석

○ 인구학적 요인

- ‘만나이’에서는 20대와 30대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감소함.
-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인적자본 요인

- ‘학력’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50대에서는 학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세 이상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가구요인

-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반면 30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50대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음.

○ 장애요인

-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의 경우 20대와 30대가 높았으며, 경증의 경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30대만 타인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고용지원

- ‘취업정보 우선필요’에서는 30대, 5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높았음. 반면, 20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40대는 그 외의 정보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임금보조 우선필요’에서는 40대, 50대, 70세 이상이 높았음. 반면, 20대, 30대, 60대는 임금보조를 우선하지 않아도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사회적 참여

-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3)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 업무난이도에 있어서 수행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우와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었음.
- 기능보강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출산·양육, 경제적 문제, 보조기기 기능 보강 등이었음.
- 여성장애인이 지원정책을 체감하는 정도는 출산·양육 지원에서 휴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육난이도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하여 높으나 지원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하였으며, 법이 여성 관련법과 장애인 관련법으로 나뉘어 여성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인적자본 개발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가 부족하였음.
- 고용과 일자리 지원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은 정보제공, 취업지원 등이었음.
- 여성 일자리 지원인 여성고용할당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력단절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만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양육지원에 대하여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에게 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여성장애인이 양육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고용유지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 사측에서 근로지원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급에 따라 필요할 수 있고, 사측에서 설치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만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방안

○ 여성장애인의 취업준비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에서 취업준비활동과 관련 정보 등 지원이 추가되어야 함.
 - 전공 관련 직업의 취업률과 임금수준 등의 정보들은 비장애인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이 부족함
 - 연합동아리 가입, 학회 활동, 인턴 활동 등 취업준비활동에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장애인이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이나 취업준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준비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직업훈련 지원 강화 필요

-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30대부터 50대까지는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보다 일자리 유지 욕구가 크나 50대가 직업훈련 경험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13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70세 이상은 약 10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어 직업훈련에 대한 연령대별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업무 지원 강화 필요

-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이 향상될수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이 올라가고,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타인의존도를 낮추고, 사내에 충분한 편의시설이 설치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이동권 개선이 필요함.

-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함.

○ 공동 양육 환경 조성 필요

- 부부 중 누가 양육을 하든지 양육이 가능하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양육정보가 축적되어야 하고, 양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야 함.
- 육아휴직의 사용에서도 여성장애인과 배우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추가하여야 함.

○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법의 일원화

-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정보는 성별로 제공해야 여성장애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함에 어려움이 없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수유시설과 같은 여성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출산과 양육문제도 여성에 관한 지원에 장애인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함. 해당 문제들은 여성과 장애인을 분리하여 발생한 문제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필요함.
 - 첫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관련 법 제정 고려.
 - 둘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제정 고려.
 - 셋째,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 추가하여 법 개정 고려.
 - 넷째,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법에 여성 관점을 추가하여 법 개정 고려.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네가지 방안 중 셋째,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봄.
 -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되어있기에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면 되며,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통령시행령 제정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음.

Ⅱ. 건강·안전



6.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Disaster Relief Guidelin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이수연, 조윤화, 한기명, 김미령

❖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pgrade disaster relief and safety guidelin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onsite simulations (disaster relief and evacuation plans for individual disabled person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proper response to disasters. To this end, first, there was an arrangement for a firefighter or disability expert to visit a household with a severely disabled family member and conduct a disaster relief education program in use of the existing Disaster Relief Guidelin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so 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uidelines through onsite simulations. Second, Disaster Relief Guidelin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modified based on the result of such onsite simulations (disaster relief and evacuation education for individual disabled persons), firefighter FGIs, surveys among disability experts and firefighters, opinion analysis with a written form distributed among onsite experts for each disability type.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guidelines, videos for the hearing-impaired were produced in consideration of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implementation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that was established by applying several selected indexes to a logic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plicatedly interlacing businesses. Major results may be classified into two; manual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plans. One way of improving the manual is to add contents about disaster relief zones and evacuation spaces as well as escaping from a building in consideration of the limited mobility of disabled ones. As there are multiple and incompatible disaster relief and safety manua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different governmental divis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manual needs to be unified and elaborated by focusing on practical and professional contents from each division and institution. As to policy plans, first of all, there needs to b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disaster relief mechanisms for disabled



persons living on the 11th or higher floor.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disaster relief instruments for disabled persons using wheelchai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gally bound programs regarding disaster relief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bled persons other than those in housing facilities stated in the Fire Service Act.

1 연구배경

- 중증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정보접근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재난 사고 빈도율이 가장 높은 장소가 가정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중증장애인의 96%가 시설이 아닌 집에 살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여러 기관에서는 장애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지만, 장애유형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매뉴얼이 부재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부재함.
- 또한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에서는 시설장애인 혹은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재난 안전 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로 한 공간에서 집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정작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재난 발생 시 완강기를 선택하여 대피할지 아니면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대피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이 아니기에 실질적 적용이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모의적용을 통한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를 고도화하고자 함.
 - 첫째, 기개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를 활용하여 소방관 및 장애전문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이하 II센터 직원)가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가이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둘째, 현장 모의적용(장애인 개인별 재난 대피 교육) 및 소방관 FGI, 장애전문가 및 소방관 대상 설문조사, 장애유형별 현장전문가 대상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를 개정하였음. 또한 가이드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 욕구에 기반해 청각장애인용 동영상 제작하였음.
- 셋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몇 가지 지표로 축약하여 평가하고자 논리모델에 적용하여 마련된 평가 지표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내용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교육’은 소방관과 장애전문가가 다학제팀으로 구성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때 소방관은 재난 안전 교육, 장애전문가는 교육 지원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음.
 -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총 2회의 교육을 통해 사전 및 사후를 비교하였음.
 - 본 교육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중도탈락자 2인을 제외하여 100명이며, 중증장애인의 가정방문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재난안전정보 이해 및 수행능력이 35.5% 향상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¹⁾.
- 또한 장애인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에 참여했던 소방관 5인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경험, 매뉴얼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FGI를 진행했음.
 - 분석 결과, ① 장애유형별 맞춤형 가이드 고도화, ② 재난 대비 카드 개선, ③ 재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사항 개선, ④ 재난유형 추가 및 보완 등의 개선점을 도출했음.
- 장애인, 장애전문가, 소방관, 장애계 등의 의견 조회를 통한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를 개정과 더불어 청각장애인용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했음.
 -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개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당사자, 소방관, 장애전문가 대상과 그밖에 시각, 정신, 호흡기, 신장, 척수, 청각 등 장애인 단체 및 협회의 대표자 섭외하여

1) (교육 전) 62점 -> (교육 후) 84점



질적 및 양적조사를 수행했음. 다음으로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동영상 제작에 있어 영상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전문가 37명 대상으로 내용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기반으로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개정했음.

○ 마지막으로 논리모델에 적용한 연구분석 지표들을 토대로 가정방문형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및 동영상 제작 등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든 사항에 대해 평가했음.

- 논리모델에 따른 사업 모형은 인적자원, 서비스자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봄.

〈표 6-1〉 논리모델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 사업 모형(요약)

투입(자원)		활동	산출	성과
인적자원	장애인 참여자 발굴	장애인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장애인 재난 대비·대응 취약성 발굴	장애인 재난 대비·대응 능력 향상
	소방관 및 장애전문가 발굴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의 필요성 제고
서비스 자원	정보제공 및 의뢰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등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보완사항 확인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고도화
지역사회	시범사업 참여 조직수	장애인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서울지역 공공 및 민간 네트워킹을 통한 장애인 재난 교육의 중요성 증대	장애인 재난 안전문화 확산

○ 다음으로 이에 따른 산출 및 성과지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6-2〉 성과목표 및 산출·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출 및 성과지표		측정	결과
인적자원	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비·대응 능력 향상	산출	참여자 수	• (정량) 전체 참여 당사자 수	• 중증장애인 100명
			재난 교육 참여 횟수	• (정량) 장애인의 재난안전교육 참여 횟수	• 1차(23.4.~5.) 및 2차(23.8.~9.)
			가정 내 안전 환경, 재난 안전에 대한 준비정도 점검,	• (정량) 재난 시 대비 카드 작성 수	• 1회(상반기)
				• (정량) 주거 환경 및 안전 실태 점검 횟수	• 2회(상반기, 하반기)

성과목표		산출 및 성과지표		측정	결과
		성과	재난 대비 카드 작성 등	• (정량) 재난 안전에 대한 준비 정도 점검 횟수	• 2회(상반기, 하반기)
			주거환경 및 안전실태 향상율	• (정량) 주거환경 및 안전 실태 점검 척도 결과(1, 2차 비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
			재난 및 안전 준비도 향상율	• (정량) 재난 안전에 대한 준비 정도 점검 척도 결과(1, 2차 비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
			재난 안전 지식 향상율	• (정량) 재난 대비·대응 지식 변화(1, 2차 비교)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
			재난 취약 대상자 선정	• (정량) 참여자 대상 중 극취약 대상자 도출	• 지하 거주자: 8명 •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 8명
			사업 만족도	• (정량) 전반적 만족도 설문	• 90% 이상이 만족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의 필요성 제고	산출	시범사업 참여 조직수	• (정량)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동원 외부 자원 활용 정도	• 약 53개 기관 참여
			참여 인력 수	• (정량) 전체 참여 전문가 수	• 소방관 약 50인, 장애전문가 37인
		성과	장애감수성 변화	• (정량) 소방관 및 장애전문가 대상 설문 • (정성) 소방관 대상 인터뷰	• 긍정적 변화
			장애인 안전지원 인식율 변화	• (정량) 소방관 대상 설문 • (정성) 소방관 대상 인터뷰	• 장애인의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확인
서비스 자원	재난 안전 정보제공 강화	산출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개정 사항 확인	• (정성) 소방관 대상 인터뷰	• 5인 대상 인터뷰를 통한 개정사항 도출
				• (정량) 장애전문가 대상 설문	• 당사자 100인, 장애전문가 37인 대상 설문을 통한 개정사항 도출
				• (정성) 장애계 대상 서면 의견 조희	• 시각, 정신, 호흡기, 신장, 척수, 청각장애 등의 관련 기관 7인 의견 조희를 통한 개정사항 도출
		성과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	• (정량)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5종 개정 • (정량) 청각장애인용 재난 안전 가이드 동영상 제작	•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5종 개정 완료 • 청각장애인용 재난 안전 가이드 동영상 제작 완료
지역사회 자원	장애인 재난 안전 문화 확산	산출	서울지역 공공 및 민간 네트워킹을 통한 장애인 재난	• (정량) 장애전문가 사전설명회 횟수, 소방관 사전설명회 횟수	• 장애전문가 대상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소방관 대상 2회 진행



성과목표		산출 및 성과지표		측정	결과
			교육의 중요성 증대	• (정량) 참여 장애인, 소방관, 장애전문가 수	• 소방관 50인, 장애전문가 37인, 장애인 100인
		성과	관련 사업 확산	• (정량) 확산 사례	• 재난안전교육 교재 활용

3 연구활용방안

1) 매뉴얼 개선방안

- 첫째, 향후 매뉴얼에서는 건물 탈출 외에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에 대한 내용추가가 필요해 보임.
 -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결과,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직이나 수평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으며, 가족 및 활동지원사 등이 지원하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차선책으로 대피공간에 대한 안내도 추가하여 건물 탈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음.
- 둘째,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들의 통합이 필요함.
 - 가령, 행정안전부 혹은 소방청에서 제작되고 있는 매뉴얼의 경우에는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띤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장애에 특화된 내용은 부재한 반면, 본 원의 가이드는 이와 반대로 장애에 특화된 내용과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재난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측면에서도 중구난방한 매뉴얼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혹은 기관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 하나의 고도화된 매뉴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방안

- 첫째, 고층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피난기구 마련이 필요함.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 의하면, 피난기구로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용 트랩 등이 있음. 이러한

- 피난기구는 재난발생시 대피경로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구이지만,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피난기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즉, 2022년 12월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시행령 별표 4에서는 11층 이상에는 피난기구 설치 의무가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2023년 개인별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참여자들 중에서 11층 이상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정 비중이 16.0%로 나타나 많은 이들이 고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층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는 십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만큼(소방방재신문, 2012.4.9.; 최규출·나판주·설영미, 2014),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고층을 위한 피난기구 개발을 통해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피난구유도등이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주택이 5층 이상의 아파트,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만 해당될 뿐,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장애인의 다가구용 및 영업겸용을 포함한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무려 3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배제되어 있는 주택유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함.
- 둘째,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기준이 필요함.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한계를 느꼈던 지점이 바로 수직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피방법임. 이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나, 지원자가 빠르고 수월하게 대피시켜줄 수 있는 피난용 계단이송의자나 전력이 들어간 피난용 계단이송의자 비치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해외의 경우, 전력이 들어간 피난용 계단이송의자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계단으로 대피지원할 때 올리고 내리는데 힘이 덜 듦.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수직대피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한데, 그의 일환으로 피난용 계단이송의자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상 거주시설 장애인외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한 법적의무교육 강화가 필요함. 장애인은 재난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난안전교육과 훈련이 장애인구 전체에게 제공되어야 함. 2022년 1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상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에만 한하고 있음. 또한 시설 장애인 외의 재가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훈련이 부재해 법적의무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체계 연구

A Study on the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한기명, 조윤화, 이수연

■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min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ased on collected views of disabled ones who experienced disasters and their observers. To this end, first of all, policy analysis was performed on each of the four steps of supportive projects—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storation—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ase of disasters that had been conducted in Korea. Second, actual cases of disasters that disabled persons suffered overseas and related supportive systems were analyzed (Japan, US, Sweden). Thir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15 severely disabled individuals who experienced a disaster in the past 5 years regarding difficulties that they personally found. Fourth, in-depth interviews and FGIs were conducted among 13 field experts at institutions assisting disabled persons in case of disaster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omestic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s on prevention and recovery. It turned out that over the 4 steps, this system did not appropriately consider various types of disability in addition to whether the individual involved disability. Second, the overseas case study included Japan, US, and Sweden with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case in Japan is about the local government's access to the list of individuals to be considered for proper support of their evacuation. The case in the US is about the federal government's installation of a disaster relief and support divi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active intelligence sharing and goods delivery through various online communication windows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 mainly by associ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ase of disasters. The case in Sweden is about disaster preventive activities such as various disaster scenario testing and



safety management function upgrading, commitment to such activities by strengthening roles of each state's local government, and so forth. Based on the findings stated above,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Comprehensive Safety Measu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released in 2017, but the activities of the domestic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remain fragmented for each disaster type, division, and response ste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plans and perform monitoring under the unified control among related departments. Second, while there are various institutions to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after a disaster, disaster victims who are disabled hardly receive such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There is an urgent need, therefore, to establish a coordinating system for existing psychological support institutions for disaster victims to provide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associ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Third, the disaster relief an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disability type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system to provide evacuation and prevention training for each disaster type and response step, follow-up measures, psychological support, etc.

1 연구배경

- 최근 5년간 기후 위기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해양오염사고, 이태원 압산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 이르기까지 재난 유형은 점차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 국제 사회는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2016-2030)’,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등을 통해 전 지구적·범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특히 센다이프레임워크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 판단,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 장애인의 재난 발생에 대한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화재 시 사망 비율은 57.4%로 비장애인의 사망률(12.1%)보다 약 5배 높음(보험연구원, 2018).

- 재난, 긴급 상황 대처 수준 또한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가 행동요령, 신고, 전화, 소화기 사용법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20).
-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9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음(행정안전부, 2017).
- 그러나 여전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재난안전지원체계에서 장애인을 포괄하는 수준은 명시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 처했던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첫째, 국내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문제점 등 행정적인 절차상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둘째, 대형 재난 피해가 발생한 해외 국가의 재난안전지원체계와 장애포괄 수준을 검토하고, 각 국가별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셋째, 재난 피해 유경험 장애인 당사자, 가족, 활동지원인 등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여 국내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넷째, 재난 피해가 발생한 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재난안전지원체계 내 장애포괄 수준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국내 장애인의 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재난연감(사회재난) 및 재해연보(자연재난), 화재통계연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되는 응급출동건수, 사망원인통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재난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 보았음.
 - 재난연감 및 재해연보는 전 국가 차원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에 대한 자세한 현



황을 알 수 있는 반면, 피해 현황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화재통계연감에서는 장애 여부는 추가되었으나, 지체장애, 정신장애만을 포함하고 있어 15개 장애유형을 모두 포함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 그 외 조사에서는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난취약성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재난유형과 재난대응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일반적 과정(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사업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음. 단계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예방 단계에서는 법령, 국가계획, 매뉴얼 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법령의 경우,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일부 조항이 발견되었음. 또한, 국가계획의 경우에도 부처별 주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역할을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장애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제외하면 부재함. 매뉴얼의 경우, 다양한 매뉴얼이 제작되었으나, 매우 유사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거나 활용률이 높은 상황은 아님.
-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안전체험 및 교육, 재난 안전 환경 구축 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교육은 대부분 1회성에 가까운 교육이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었음.
-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대피에 대한 활동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있음. 다만,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처방안이 필요함.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문자 이해에 대한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 시 수어 영상 제공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임.
- 복구 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심리적 지원, 의료 이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재난 발생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재해구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재난약자를 고려한 지원은 부족함.

○ 해외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방재기본계획을 통해 복지피난소의 활용 시 요배려자의 원활한

- 피난의 확보, 정보 전달에 대한 시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진 등 여러 차례의 재난 발생을 통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고, 일본방재협회에서 방재사의 양성을 통해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응체계를 살펴보았음.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인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호흡기장애인의 이동식 배터리 보급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SNS 등 각종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지원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음. 즉, 장애 특성을 고려한 물품 지원이 가능하려면,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과 물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스웨덴의 경우, 2004년 쓰나미로 인한 홍수 이후 스웨덴 재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 테스트 및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를 통해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총 21개의 주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7년 이내에 재난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15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참여자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자 5명, 2019년 울진 대형 산불 7명, 2022년 포항 한남노 태풍 피해, 2023년 7월 문경, 예천 수해 발생 피해자가 포함되었음.
 - 재난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네 이장을 통해 대피 안내를 받거나, 가구원, 이웃주민이 구출하였음. 즉, 재난 대피 시 민간 자원의 활용이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임을 확인함.
 - 재난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물품 지원,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산발적인 지원으로 지원물품이 중복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또한, 심리적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 다양한 심리지원체계(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재난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전무하였음.
-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13명의 심층인터뷰 및 FGI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참여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방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장애인 지



원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가 포함되었음.

- 현장전문가 중 장애인의 지원 경험이 없는 소방 관계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 등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장애인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3 연구활용방안

○ 첫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행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3년 또는 5년에 1번씩 정례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재난안전지원체계는 재난유형별, 부처별, 대응단계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 중 하나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동이나 노인에 비해 이해도나 우선적인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장애인의 지원 경험이 없는 소방 관계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의 경우, 재난의 4단계 전 과정까지 장애 포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1월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나 시설 이용자는 재난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소방청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 수행 등 관심이 증대됨.
- 이처럼 근거 법령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등 관계부처 합동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점진적으로 전체 재난안전지원체계에서 장애 포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둘째,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승인통계 내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유형별 현황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1의2항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재해연보, 국가화재정보통계 내 장애 유형 및 장애 수준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관계부처합동, 2017).
 -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발표된 재난연감, 재해연보에서는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화재통계연보를 통해 일부 장애유형(정신장애, 지체장애)의 발생 현황(사망, 부상)을 살펴볼 수 있음. 이는 재난유형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지며, 발생현황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꾸준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중 연령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인에 비해 장애인의 재난취약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의 재조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재난안전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삶터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존 장애인복지지원체계 내에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전체 재난안전지원체계는 지역별, 재난유형별, 대응단계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장애포괄 수준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각 기관의 전반적인 장애 포괄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유형별 대처가 가능한 기존 장애인복지지원체계 내에 전체 재난안전지원체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보다 구체적으로 미시적 지원체계에서는 1:1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가족과 활동지원사를 1차적인 지원자로 지정하고, 마을 단위로 동장이나 이장, 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하여 교육하고 이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중간지원체계는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계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연계하여 물품지원, 생계지원, 1년에 한 번씩 가정방문형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연계를 통한 상시적 재난안전대피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8.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A Manual for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Housing Facilities

조운화, 이미영, 이수연, 이혜수, 정예영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pgrade existing manuals for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specifically by suggesting a manual for preemptive systematic prevention of legal communicable diseases and response plans for each crisis level, mainly for residential facil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are facilities vulnerable to infections. The steps for manual advancement we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exist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s were analyzed. Second, each type of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defined, and then vulnerable aspects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asures for them in the quarantine procedures of such housing facilities were reviewed. Third, response guidelines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disinfection polici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urth, opinions about each type of faci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mong experts of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ifth, a meeting was held with related expert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cademic circles, medical circles,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to develop a manual.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취약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전파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음.
- 현재 감염병 대응지침은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상이한데, 본 매뉴얼은 법정 감염병 1급~4급 중 장애인에게 취약한 감염병을 중심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음.
- 또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흐름에 따라 감염병 대응 지침을 되돌아보고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감염병은 치명률과 전파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장애인거주시설 측면에서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고도화된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감염병 대응 매뉴얼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확인하였음.
- 둘째, 코로나19 외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를 파악하고, 위기경보 단계 정의 등을 검토함.
-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정의 및 장애인감염병 취약성,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단계에 따른 조치 등을 검토함.
- 넷째, 유사기관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대응지침’, 방역정책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대응 지침(7~12판) 최근 3년(‘20.6.~’23.6.)간의 자료를 검토 및 비교분석하여 거주시설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매뉴얼로 제작하였음.
- 다섯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추천으로 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별 전문가 선정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제작된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조사 및 거주시설 기관방문, 거주시설 집단감염 자체 대응지침 사례 등을 조사하였음.

- 여섯째,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수정된 매뉴얼(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학계, 의료계, 장애인단체, 장애인거주시설(분과장 등) 등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최종 검토 및 의견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발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뉴얼을 배포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1) 문헌연구

- 감염병 대응 매뉴얼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6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판이 제작되었음. 당시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이면서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였으나 초창기에 제작된 매뉴얼로 예방법, 치료방법, 돌봄서비스, 의료이용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음.
 - 2021년 4월 2판에서는 업데이트된 지자체 지침, 시설 지침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4월부터 제1급 감염병 이었던 코로나19가 제2급으로 하향 지정되었지만, 위기경보 수준은 여전히 '심각' 단계이었고, 2022년 12월 업데이트된 3판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장애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였음.
 - 최근(2023년 6월 1일 기준)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해제(일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제외), 확진자 격리 권고(5일) 등 전반적으로 지침 수준이 완화된.
-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 정의
 - 법정 감염병은 발생원인, 예방, 관리사항들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 분류기준은 1급~4급이며, 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등의 기준을 고려해서 등급별로 감염병을 분류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제1급 법정감염병과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취약하고 발생률이 높은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 폐렴구균 감염증, 수두, 성홍열 등을 살펴보고자 함. 그 외 호흡기감염병, 소화기계감염병의 임상



적 특징, 치료, 예방은 부록에서 다룸.

- 보건복지부(2019)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교육부(2021)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위기경보 단계 정의 및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살펴보았음.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안) 구성

- 장애인거주시설과 유사기관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대응지침’을 검토 및 비교분석하여 정리함.
- 대응지침 내용 중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1) 감염병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2)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3) 시설운영 세부사항, (4) 의심·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5) 행정사항을 중심으로 거주시설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재구성하여 매뉴얼(안)을 마련하였음.

2) 전문가 의견조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추천으로 약 3개월(‘23.11.~’24.1.)간 총1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는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명, 중증장애인거주시설 5명,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명, 단기거주시설 4명, 공동생활가정 2명, 거주시설 환경 1명 등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 유형(5개) 모두 기관방문 함.

○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의견은 시설유형별, 규모별, 주중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구분할 수 있었음.

- 시설유형별로는 첫째, 의료인력 유무 및 인력배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감염병 담당업무에 맞는 종사자 배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둘째, 셀프케어 여부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영유아의 경우 돌봄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셋째,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정보접근이 필요하였음. 넷째, 기타 의견으로 거주시설 이용인들의 등하교 여부, 장애영유아 면회 등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도 나타났음.
- 규모별로는 소규모시설, 30인 이하, 30인 이상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격리 공간 마련과 지원 인력 수의 차이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거주시설은 주중에만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주말 이용시설 및 365

쉽터를 포함한 거주시설 구분할 수 있음. 가장 큰 차이는 보호자 여부로 감염병 대응시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와 주중 이용시설은 거주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으로 지원 인력 수도 많지 않음.

3) 간담회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활용
 - 전국적인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성격, 발생규모, 심각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대응지침이 우선되지만, 기본적인 감염병 대응 과정을 숙지하면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의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여 미흡한 점을 추가 및 개선하고, 법정 감염병별 대응지침을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고도화함.

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표 8-1〉 매뉴얼 목차 구성

구분	내용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요	1) 목적 2) 관련 법규 3) 적용 범위 4) 매뉴얼 구성 5) 매뉴얼 활용 6) 용어 정의
	2. 장애인거주시설과 감염병 1) 장애인거주시설 정의 및 현황 2) 장애유형에 따른 감염병 취약 특성
위기유형과 감염병 관리체계	1) 위기유형 2)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3) 위기관리 기본방향 4) 주요 감염병 대응조치
	2. 장애인거주시설 감염병 관리체계 1) 감염병 일반 대응 순서 2) 감염병 일반 대응 방안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4) 감염병 사망자 대응방안



구분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1.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대응방안
	2.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응방안
	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대응방안
	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대응방안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 공기관 대응방안
부 록	1) 감염병의 발생인자
	2) 감염병의 전파경로
	3) 법정 감염병 분류기준
	4)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5) 법정 감염병별 담당부서 및 해당 관리지침
	1) 호흡기계 감염병
	2) 소화기계 감염병
	3) 기타 주요 감염병
	3.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방안

- 보건소와 시도(지자체) 상호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 필요
 -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유 역할 외에 총괄 역할 지정 및 강화 필요,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 필요, ▲ 거주시설 소독 및 방역지원 역할 강화 ▲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역할 준수(치료기관 이송 등)
- 국가차원 지원체계 구축 필요
 - ▲ 유희공간 마련 및 모니터링,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서 구체적인 업무협약과 의료서비스 연계 논의 필요(예. 촉탁의 역할, 연계병원 감염질환 확인 등)
- 대체인력 및 종사자 지원 방안 필요
 - ▲ 위기경보 경계 및 심각단계 상향시에는 대체인력 추가 증원 계획 수립 필요, ▲ 종사자 투입시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필요

- 설치규모별 자체적인 지침 대체 필요
 - ▲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태의 소규모 시설, 일반주택 규모로 격리공간 확보 어려움, ▲ 인력지원 한계로 종사자 감염시 조치사항 마련 필요
- 감염병 관리자 의무교육 필요
 - ▲ 질병관리청 동영상 자료 안내, ▲ 본 매뉴얼 실질적인 자체교육에 활용

2) 개선방안

- 장애인거주시설 및 감염병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장애인정책과 권익지원팀과 질병관리청과의 논의를 통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되어야 실효성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음.
- 평상시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전달체계와의 지원체계 구축이 되어야 함.

Ⅲ. 고용 및 직업재활



9.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Judging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Re-designation of Facilities of Goods Produced by Severely Disabled Persons

서원선, 이수용, 이혜경, 이태현

❖ 요약

Complet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in the society is realized ultimately through economic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for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ystems for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systems assist purchases of products and services from facilities of goods produced by severely disabled persons to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disabled persons working at such production facilities. At such facilities of goods produced by severely disabled persons, more than 70% of the entire workers are disabled persons (at least 10 individuals), and at least 60% of these disabled persons are severely disabled ones. To be authorized as one of such facilities, the applicant organization needs to pass the review for designation and then review for re-designation for every 3 years. However, the criteria of designation and re-designation have not been separated for 10 years since the initiation and thus a lot of administrative efforts are consumed in the process of re-designation.

This study is to distinguish purposes of designation from those of re-designation and to establish criteria appropriate for each review. To minimize administrative consumption in the review for re-designation and to reduce the workload of managers at such production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simplification of the re-designation review documentation, incentives for exemption from the re-designation requirement. To secure transparent and substantial ope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is study also suggests proposals to improve existing criteria of administrative measures, fines, and penalties.



1 연구배경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시설로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등이 신청 가능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수 최소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 이상, 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50% 이상, 직접생산 설비 가동 및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짐.
- 매년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 접수기간에 꿈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함.
-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심사목적 및 성격이 다른 심사(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사후점검)를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심사에 적용하고있어 심사자 및 피심사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표 9-1〉 각 심사대상 및 심사목적

항목	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사후점검
심사대상	신규진입시설	기지정 생산시설 (유효기간 만료대상 시설)	기지정 생산시설
심사목적	지정기준을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기준 준수에 대한 심사 실시	심사기준에 대한 상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실시

〈표 9-2〉 심사기준 혼재 예시

1. 장애인근로자 고용

- 장애인근로자 처우 및 안전 등
- 장애인근로자의 안전 등
 -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명백히 위험하거나 유해(有害)한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전체 심사 적용
 - 인체에 유해한 원부자재를 주로 사용하거나 작업공정 및 설비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중증장애인생산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체 심사 적용
 - 생산시설의 임직원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착취·학대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한 예방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시 적용
 - 생산시설의 장과 직업재활 지원 인력은 지정 이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시 적용

-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이 없어 그간 심사 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기지정 생산시설 동기부여를 위해 장애인근로자 고용증가 및 급여 향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심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 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이 없어 그간 심사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생산시설 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현행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시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표 9-3〉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나이	시설특성
참여자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가스차단기, 방향제, 소독방역)
참여자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CCTV, 조명기구)
참여자3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참여자4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DM발송, 마스크, 사무용지류, 인쇄물)
참여자5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PE봉투, 비닐봉투류)
참여자6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사무용지류, 화장지류)
참여자7	여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문서파일류, 살균소독수, 세차, 소독방역, 청소)
참여자8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피복류)
참여자9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CCTV, 인쇄물, 조명기구)
참여자10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연서비스)
참여자1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물비누, 비누, 화장품)
참여자13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참여자14	남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5	남성	5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재생토너카트리지, 판촉물인쇄, 현수막)
참여자16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기청정기, 보일러, 온수매트, 선풍기)
참여자17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약품투입기, 전화장비네트 워크연결장치,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참여자18	여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CCTV, 가구류, 배전반·제어장치)

- 자료 분석결과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관련해 4개의 주제와 12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되었음.

〈표 9-4〉 FGI 분석결과

주제	세부주제
주제1: 초기 지정 심사기준의 강화	(1) 비장애 사회적협동조합의 신규지정 제한 (2) 영리법인의 생산시설 지정 제한 (3) 다수 시설 신규 지정에 의한 과도한 경쟁 완화
주제2: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개선	(1) 재지정 중복 서류 간소화 (2) 3년인 재지정 기간 확대
주제3: 재지정 인센티브 도입	(1) 장애인 고용율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2) 매출액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3)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주제4: 시설 운영 기준 개선 및 지도 개선	(1) 사후점검 강화 (2) 설비 기준 완화 (3) 불법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 (4) 3개월인 장애인 채용 기간 확대

○ 전문가 델파이조사

-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안과 관련해 1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2회를 실시하였음.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조사 결과를 분리하여 제시하였음.

〈표 9-5〉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49 이상
서류간소화	3.38	0.82	0.07
추가서류추가재심사	3.94	0.41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00	0.59	0.87
수정문항_추가고용	3.63	0.74	0.60
채용유예	3.81	0.79	0.73
행정처분규정추가	3.88	0.99	0.87
체크리스트	3.63	1.06	0.47
행정처분강화	3.25	0.99	0.07
과징금강화	3.31	0.83	0.20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44	0.89	0.33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31	0.91	0.07



〈표 9-6〉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78 이상
서류간소화	3.56	1.0138	-0.11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33	0.5000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33	0.7071	0.78
수정문항_추가고용	3.67	0.8660	0.33
채용유예	4.22	0.9718	0.78
행정처분규정추가	3.89	1.1667	0.78
체크리스트	3.56	1.2360	0.11
행정처분강화	3.44	1.1304	-0.11
과징금강화	3.33	0.7071	-0.11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56	0.8819	0.11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22	0.6667	-0.33

〈표 9-7〉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편차	CVR
			.99 이상
서류간소화	3.67	0.52	0.33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00	0.00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17	0.41	1.00
수정문항_추가고용	4.17	0.41	1.00
채용유예	3.83	0.41	0.67
행정처분규정추가	4.50	0.54	1.00
체크리스트	4.33	0.51	1.00
행정처분강화	3.50	0.83	0.33
과징금강화	3.83	0.98	0.67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83	0.98	0.67
과태료부과기준강화	4.00	1.10	0.67

○ 재지정 행정서류 간소화

- 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지정 신청 시 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② 근로자 임금 대장 및 산정방식, 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서류를 받음.
-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계획서, ② 근로계약서, ③ 세 부품목신청서,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⑤ 장애인증명서를 받도록 함.

○ 재지정 인센티브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인센티브를 부여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Goods Produced by Severely Disabled Persons -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s, etc.

이혜경, 김동주, 오윤희, 가광달, 이태현

요약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of goods produced by severely 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purchasers or consumers including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overseas case stud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and policies to promot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To this end, overseas cases and actual records of purchases by public institutions for 5 years were analyz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39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Additionally, focus-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individuals in charge of procurement and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t public institutions, etc.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the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among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tching services between purchasing institutions and production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ways to manage preferential purchase results, prepare plans, and submit record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incentives and penalties according to the preferential purchasing performance among public institutions, etc.



1 연구배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극적 우대정책임.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목적,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의무(기관의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생산시설 지정, 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법 제정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은 47.1%로 많은 기관들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은 다양한 품목이 부족하여 구매할 품목이 없는 점, 가격대비 품질이 낮은 점 등을 언급하고 있어 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기관의 구매품목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 생산시설과 같은 공급자적 관점의 조사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해외사례분석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에서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법이나 계획, 조치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장애인우선조달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 등과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

음.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장애인취로시설 이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도 하나의 우선구매제도로 통합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취합에 있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구매실적은 금액과 건수, 물품과 용역(노무)를 구분하여 취합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음.

- 중국의 경우 2007년부터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구매실적을 취합함에 있어서 일본과 유사하게 조달유형(서비스, 물품, 화물)을 구분하고 있었음. 그리고 중국에서는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의 근로장애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1938년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고 있음. Ability One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과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우선구매제도 수행에 필요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의 우선구매촉진위원회와는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

○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 분석

-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선구매 비율 1%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진 기관유형은 지자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교육청이었으며 하향추세를 보이는 기관은 준정부기관과 기타특별법인으로 확인되었음. 지방공기업은 최근 5년간 1.5% 이상의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기타공공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우선구매비율이 0.4%로 나타나 기관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지역별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5억원 미만인 기관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기관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 우선구매금액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음. 다만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구간이나 50억원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 특성상 단가가 높은 품목이나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공공기관 등의 조달업무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 우선구매 비율 확대(1%→2%)에 따른 목표달성에 어려움으로 이전 보다 구매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고,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과 품목의 다양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전임직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의무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패널티, 의무비율 초과 달성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포상제도 확대), 수의계약 확대,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전국 국가 및 공공기관 1,039개소(2023년 기준) 대상 온라인실태조사
 - 주요 조사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경험(구매방법, 품목, 총구매금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 우선구매 실적취합 및 관리 방법,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관리, 구매희망 품목, 우선구매제도 관련 개선 의견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1,039개소 중 총 836개소(80.5%)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내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구매제도 인식 관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는 편(81.2%)이상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또한 43.2%의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2022년 물품구매 현황
 - 기관의 우선구매 담당자들의 83.5%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하여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물품(서비스) 구매 시 85.2%가 수의계약 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활용하였음
 - 2022년 한 해 동안 구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생산시설 직접거래(37.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1.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17.4%) 순으로 구매하고 있었음.
 - 기관에서 구입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비중은 사무 및 문구류가 89.2%로 나타났고, 인쇄 및 광고(50.5%)와 생활용품(4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향후 구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또한 사무 및 문구류가 74.3%, 인쇄 및 광고 50.8%, 생활용품 45.8%, 일회용품 41.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기관 평가’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았고, 구매하는 주된 이유 또한 평가와 관련된 우선구매 실적을 준수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45.2%의 기관에서 ‘품목의 다양성 부족과 선택의 폭 부족’으로 생산품 구매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품목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작성 관련

- 구매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집계 및 제출하는 방식은 구매담당 부서에서 각 수요 부처별 구매실적 확인 후 작성을 하거(46.8%)나 구매담당 부서에서 취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괄 작성(45.6%) 하는 두 가지 방식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집계하고 있었음.
- 실적을 작성할 때 53.9% 과반 이상의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기관 내 협업과 소통의 어려움이 35.3%로 가장 높았고, 28.2%의 기관에서 다수의 하위(소속)기관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8%의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위(소속)기관에 우선구매제도를 공유하고 구매를 독려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 우선구매계획 제출 시 구매담당 부서에서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작성하거나 총 구매 금액 대비 1%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었음.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겪는 어려움은 66.4%로 우선구매 실적 작성 때 보다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구매계획(금액)을 예측이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구매제도 개선 관련

- 90.7%의 기관에서 우선구매제도의 평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음.
- 우선구매 관련 교육을 받은 기관은 59.3%였고, 약 90.1%의 기관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음.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컨설팅은 18.5%의 소수의 기관에서 경험하고 81.5%는 경험하지 않았으며, 컨설팅을 경험한 소수의 기관 중 85.8%의 기관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가 확대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고, 우선구매 실적 달성 시 담당자 인센티브가 22.2%로 나타났음.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8.7%,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확대’ 응답이 43.9%로 높았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초과 달성 시 기관 인센티브 필요도는 73.2%로 높게 나타났고, 인센티브 방법은 구매/계약 담당자 포상이 37.7%, 우수기관 포상 32.2% 등의 순으로 응답됐음. 반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패널티는 필요 여부는 90.2%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 경우 우선구매 교육 및 컨설팅 의무 참여(50.0%), 정부업무평가 감점(3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됐음.

3 연구활용방안

1)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임. 기존의 연구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즉 생산자 중심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구매자 중심의 실태조사와 욕구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구매자 중심의 개선방안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제도 교육 강화가 필요함.
 -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 대상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장 및 직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해야 함. 2년 연속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의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및 추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교육체계 강화 필요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특별법인, 그리고 광주나 충남의 경우 타 우선구매제도 보다 우선되거나 수의계약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관유형, 지역 현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구매기관과 생산시설간의 매칭을 위한 업무수행기관 업무 강화가 필요함.
 - 지방공기업은 생활용품,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인쇄 및 광고 품목에 대한 구매 비율이 다른 기관 유형보다 높으며, 서울과 세종은 사무 및 문구류보

다 인쇄 및 광고가, 울산은 시설 및 설비 품목 구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업무수행기관에서는 생산품목별, 구매기관별, 지역별 공급과 수요 현황을 면밀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구매와 공급 균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업무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민간영역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매기관은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등으로 전담기관을 구분하고,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과 그 외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든 기관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작성, 제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각 기관에서 구매실적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특히 지자체, 교육청, 지방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하위(소속)기관이 많거나 기관 내 협업과 소통에 어려움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또한 우선구매 계획작성, 제출시에는 기타공공기관, 지방의료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서는 구매부서에서 총 구매금액 대비 1%를 일괄 작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법에 근거하여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함.
- 따라서, 우선구매계획은 전년도 총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구매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구매실적은 구매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계획과 실적이 연동되게 하고,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매실적 및 목표 작성시 품목을 제품과 용역(서비스)로 구분하고 계약건수를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선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업무담당자를 추천받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고,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미흡한 기관, 특히 지속적으로 1%를 미달성하거나 실적이 0%인 곳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3년 이상 1%를 미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기관은 전 임직원 대상 우선구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구매담당



자는 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패널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3년 이상 1% 이상을 달성하거나 지난해 실적 대비 10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관 등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포상 이외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외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기관의 종사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분석 연구

A Study on Business Support Services for Enterprises of One Severely Disabled Person

이혜경, 서원선, 김영수, 송창근, 장재호

요약

In 2020, the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ople was 29.5%, which was far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population (60.4%). The employment rate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was 19.9%, and that of moderately disabled persons was 35.0%. Severely disabled persons involve more difficulties in employment than the others. While it seems that many disabled persons start their own businesses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disability, support for businesses by one severely disabled person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at for disabled employees. As the revision to the Act On The Facilit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foundation was established for business support services for enterprises of one severely disabled person.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cope of services and detailed standards for business support services for enterprises of one severely disabled pers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types of business support services: business assistance,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guidance. Self-pay rates are suggested as follows: max. 20% for business assistance, max. 10% for communication, and max. 50% for management guidance.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gradual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and gradual expansion of support services.



1 연구배경

- 2020년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29.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0.4%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9%,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35.0%로 중증장애인이 고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거나 1인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로 종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족함.
-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인 장애인기업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됨.
- 본 연구에서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며, 업무의 범위와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국내외 지원 제도 분석과 1인 중증 장애인기업 현황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업무지원인 제도 분석
 -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임.
 - 지원범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함.
 - 지원유형은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의 세 분류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지원한도가 있으며,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음.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 사회적기업 지원은 기업당 2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함.
- 사회적기업은 월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나 1차년도는 인건비의 80%, 2차년도는 70%, 3차년도는 50%까지를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1차년도에 90%, 2차년도에 80%로 함.
- 국외 사례로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자영업 지원, 업무지원인, 보조기기, 기타 자영업 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 개인자립지불(Personal Independent Payment) 등이 있음.
- 업무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 경제인이 핵심 기업 운영 및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임.

○ 1인 중증 장애인기업 현황

- 2020년 말 장애인기업체 수는 전체 115,347개사로 추정됨.
 - 기업체 규모별 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103,794개사(90.0%)로 ‘중소기업’ 11,553개사(10.0%)보다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4,435개사(29.9%)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 22,490개사(19.5%), ‘제조업’ 20,610개사(1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875개사(8.6%)로 나타남.
 - 장애인기업의 조직형태는 ‘개인업체’가 100,239개사(86.9%)로 ‘회사법인’ 15,054개사(13.1%)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체 종사자 규모는 ‘2~4인’이 66,426개사(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이 27,777개사(24.1%), ‘5인 이상’이 21,143개사(18.3%)순으로 나타남.
 - 기업체의 평균 존속기간은 평균 16.1년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20년 이상’이 34.1%, ‘5년 미만’(19.0%), ‘5 ~10년 미만’(17.8%), ‘10 ~15년 미만’ 등의 (15.5%) 순으로 나타남.
 - 기업체 대표자 성별은 ‘남자’가 79.8%, ‘여자’가 20.2%임.
 - 대표자의 연령은 평균 연령 62.3세이며, 세부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25.6%), ‘70대 이상’(23.6%), ‘40대’(8.4%) 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73.9%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4.1% 보다 높게 나타남.



- 2020년 기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917,365개사임.
 - 조직형태는 ‘개인업체’가 87.2%, ‘회사법인’ 12.8%임
 - 권역별은 ‘수도권’ 57.1%, ‘영남권’ 23.1%, ‘충청권’ 8.8%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 28.4%, ‘교육서비스업’ 17.2%, ‘전자상거래업’ 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9%임.
- 1인 중증 장애인기업은 최근 3년간(‘20~’2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신청한 장애인기업 6,205개소 중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407개소임.
 - 평균 매출액은 전체 장애인기업이 1,005백만원이나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134백만원임.
 - 조직 형태는 전체 장애인기업은 ‘법인’ 3,205개소(52%) ‘개인’ 2,995개소(48%)로 비슷하나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우 ‘개인’ 334개소(82%) ‘법인’ 73개소(18%)임.
 - 대표자의 성별은 전체 장애인기업이 ‘남성’ 5,397명(87%), ‘여성’ 808명(23%)이고,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남성’ 339명(83%), ‘여성’ 68명(17%)임.
 - 1인 중증 장애인기업의 업종은 ‘도소매업’ 164개소 40.3%, ‘서비스업’ 101개소 24.8%, ‘제조업’ 86개소 21.1%, ‘건설업’ 32개소 7.9%로 나타남.
 - 1인 중증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240명(59%)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48명(11.8%), ‘뇌병변장애’ 35명(8.6%), ‘신장장애’ 32명(7.9%) 순으로 나타남.

2)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조사결과

○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인터뷰

-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인터뷰를 통하여 필요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서비스는 다음표와 같음.

〈표 11-1〉 업체별 필요 업무지원 서비스

업체명	필요한 업무지원 서비스
J 카페	홍보 컨설팅(SNS홍보, 지역홍보, 고객재방문 유도 전략), 환경개선(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분석(메뉴개발, 소비자 니즈 파악), 사업컨설팅(가격결정, 재고관리, 기업별 맞춤지원), 세무업무(거래 장부 기입 등), 기기 구입에 대한 협상력 강화(기기 공동구매), 법률자문(부동산 임대 자문 등), 재정지원
H 엔지니어링	판매품 공신력 확보(판매이력 확보 방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업무 자문(정책과제 자문, 조달업무 자문, 관공서 업무 자문), 자금조달(단기 자금 지원, 자금조달방법 자문), 전문인력 확보(조달청·국책사업·정부과제 등의 업무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근무환경 개선
I 벤처기업	용역 확보(조달청·나라장터 업무, 고객유치 방법), 자금조달(투자유치 방법, 자금지원), 전문인력 확보(전문 발표자 지원, AI 관련 개발자, 장애인 IT 교육), 사업주 지원(IT 관련 사업주 지원)
S 기업	단순현장 업무 지원, 자금지원(단기자금 대출 지원, 자본금 확보), 이동지원(운전자 지원, 주차문제), 행정업무(채무 변제 절차에 대한 정보), 법률 자문(거래처간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 자문)
FL 기업	장기 운영기업 지원, 수출업무(해외상표 등록, 해외 판매품 인증·등록), 세금 감면(법인세 감면, 각종 등록비 및 주민세 감면), 이동 지원(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차량 지원), 자금 지원(단기자금 조달), 지적재산권 등록
C 기업	개발지원(교재 개발, 교육완구 개발, 개발인력 지원, 외주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컴퓨팅 사고력·로봇·코딩용 교재·완구개발 인력, 앱 개발자 지원), 자금 지원(개발 자금), 트렌드 분석(변화 대응), 사업컨설팅(판매루트 개발)
SI 기업	행정업무(제품인증절차, 판매중개사이트 등록·정산), 단순업무 인력 지원(포장 및 배송, 대면업무), 세무관련업무, 사업컨설팅(품질관리, 제품선정, 트렌드 분석, 홍보), 자금지원(대출 지원), 법률자문(노무 상담), 이동지원(차량 및 동승자 지원), 상담(삶의 조언), 취업지원
JA 기업	업무인력 지원(편집, 온라인사이트 운영, TTS 파일 제작), 홍보(네이버 등 플랫폼 연결, 공공기관 신문구독), 행정업무(특허 등록, 세무관련 업무), 법률자문, 사업컨설팅, 사업주 지원(인건비 지원)
M 안마원	홍보(오프라인 홍보 방법, SNS 홍보), 사업컨설팅(가격 경쟁력, 상품특화), 정책 지원(안마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 실비보험 적용), 인력 지원(회계관리업무, 공과금 처리, 행정업무, 결제된 바우처 신청업무,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주 지원(보조기기 지원), 고용장려금, 온라인서비스 구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조사 결과

- 조사 설계

- 도출된 1인 중증장애인이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들에 대하여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장애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또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실시함.

- 조사 결과

- 조사결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1순위 단순 업무인력지원, 이동지원, 행정업무, 대면업무인력지원, 공공기관 업무 자문, 사업컨설팅, 홍보 컨설팅이며, 2순위 전문인력 지원, 법률자문이며, 3순위 상



- 품개발지원, 매입 협상력 강화, 매출 협상력 강화, 자금지원관련으로 나타남.
- 2차 델파이 조사에서 1순위 단순업무 인력 지원, 이동 지원, 행정업무, 공공기관 업무 자문, 홍보컨설팅이며, 2순위 전문인력 지원, 대면업무 인력 지원, 법률자문, 사업컨설팅이며, 3순위 상품개발 지원, 매입 협상력 강화, 매출 협상력 강화, 자금지원관련으로 나타남.
 - 적정 자부담 비율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업무보조형 17.30%, 의사소통형 12.30%, 경영지도형 24.30%로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업무보조형 18.00%, 의사소통형 11.30%, 경영지도형 25.00%로 나타났으나 이후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적정 자부담 비율은 업무보조형 20%, 의사소통형 10%, 경영지도형 50%로 경영지도형의 경우 준전문가보다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도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어 반영함.

〈표 11-2〉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우선순위 및 자부담 비율 제안

순위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영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영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1순위	업무보조형	단순업무 인력 지원, 이동지원, 행정업무	업무보조형	단순업무 인력 지원, 이동지원, 행정업무
	의사소통형	대면업무 인력 지원	의사소통형	-
	경영지도형	공공기관 업무 자문, 사업컨설팅, 홍보 컨설팅	경영지도형	공공기관 업무 자문, 홍보컨설팅
2순위	업무보조형	전문인력 지원	업무보조형	전문인력 지원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형	대면업무 인력 지원
	경영지도형	법률자문	경영지도형	법률자문, 사업컨설팅
3순위	업무보조형	상품개발지원	업무보조형	상품개발 지원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형	-
	경영지도형	매입 협상력 강화, 매출 협상력 강화, 자금지원관련	경영지도형	매입 협상력 강화, 매출 협상력 강화, 자금지원관련
자부담 비율	업무보조형	17.30%	업무보조형	18.00%
	의사소통형	12.30%	의사소통형	11.30%
	경영지도형	24.30%	경영지도형	25.00%
자부담 비율 제안	업무보조형	최대 20%		
	의사소통형	최대 10%		
	경영지도형	최대 50%		

순위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영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영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준전문가보다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도로 만족도를 높임) (경영지도형 서비스 이용 횟수가 1년에 1회 미만이 예상됨)		

3 연구활용방안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범사업 제안

- 시범사업의 주요사항 제안
 - 시범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가 직업활동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총 서비스 이용금액(자부담 있음)을 정하고, 정해진 총 서비스 이용금액(자부담 있음) 내에서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서비스들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함.
- 지원규모 및 시범사업 지역
 - 최초 시범사업에서 지원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의 용이성을 위하여 1차 시범사업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며, 1차 시범사업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타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서울 및 경기 지역 173개소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 시범사업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함.
 - 지원규모 추정예산은 서울 및 경기지역 1인 중증장애인 기업 173개소 대상 12개월 월급 2,010,580원의 80%(자부담 비율 20%)로 “173개소 × 12개월 × 1,608,464원”으로 계산하여 3,339,171,264원으로 상정함.



- 시범사업의 업무범위

- 시범사업의 업무범위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업무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1-3〉 순차별 시범사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범위

차수	영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1차 시범사업	업무보조형	단순업무 인력 지원, 이동지원, 행정업무
	의사소통형	-
	경영지도형	공공기관 업무 자문, 홍보컨설팅
2차 시범사업	업무보조형	전문인력 지원
	의사소통형	대면업무 인력 지원
	경영지도형	법률자문, 사업컨설팅
3차 시범사업	업무보조형	상품개발지원
	의사소통형	-
	경영지도형	매입 협상력 강화, 매출 협상력 강화, 자금지원관련

주. 이전 시범사업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시범사업의 업무단가

- 업무단가는 근로지원인 중 일반근로지원인이 시급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단가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을 제안함.
- 업무지원인의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중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에 기준하여 업무단가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업무지원인 서비스 중 경영지도형은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로 업무지도형과 의사소통형과 달리 높은 업무단가가 요구되기에 다른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컨설턴트 업무단가를 제시하여 유사한 수준의 업무단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12.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업종·직무개발

A Proposal of a Public-Private Joint Project of Job Creation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Vocational Development for New Business Areas

김기룡, 김가영A, 김가영B, 노유나, 박해주

요약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hievement of public-private joint projects of job creation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to develop new business areas and appropriate jobs in expected expansion of similar projects. To this e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diversified perspectives including the following: related cases at home and abroad, current status of project operation, survey among interested entities, financial/non-financial achievement, cost/benefit, interviews with experts, etc.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to improve current projec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mproving the specialty of cafe operation by restructurizing the cafe business of 'I Got Everything' and the supportive role of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second, adjusting the direct employment standard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for each store in a more realistic and flexible manner; third, increasing the operation efficiency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cafe 'I Got Everything' around the country; and fourth, finding and systematically managing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3 business areas (convenient store, resource recycling, and hospital) and 12 related jobs other than cafe businesses in consideration of future business expansion based on the following elements: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 profit creation, nationwide market expansion, potential creation of many job offers, no need for specialized techniques or careers.



1 연구배경

-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 역시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김기룡 외, 2020),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카페 I got everything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양적, 질적 도약을 위한 사업 방향성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현행 사업이 카페라는 단일 업종과 직무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영역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과 장애인 근로자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2 국내외 장애인 고용 정책 및 유사사례 분석

1) 국내외 장애인 고용 및 정책현황

-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 장애인통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6.4%이며,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약 4.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로 '장애인의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일본의 '장애인 고용 상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모두 고용장애인 수와 실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률이 법정고용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 미국은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로 장애인법과 재활법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제도, 장애 청년 고용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나 일자리 창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국내외 유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 카페 I got everything과 유사한 카페 업종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로 국내 19개, 해외(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6개 사례를 조사함.
 - 국내 사례 중 강남 서초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늘봄카페',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의 커피 전문 브랜드인 '히즈빈스 커피', 사회적협동조합 스윗이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카페스윗'을 중점 분석함.
 -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의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과 커피 로스터리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한 'ASPIRE Coffeeworks(어스파이어 커피웍스)', 정신 및 인지 장애인의 고용 및 훈련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Cafe Joyeux(카페 조와이유)', 고객과의 대면 및 신체 접촉을 최소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Bear Paw Cafe(베어파우 카페)', 중국의 'Hinichijou(비일상)' 카페 등의 사례를 중점 분석함.
- 사례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공공과 민간,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둘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카페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조직의 참여, 셋째, 카페 운영과 장애인 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 시스템 확충, 넷째,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통한 소비자 구매력 증진 등을 제시함.



3 현행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성과분석

1) 사업 이해

-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카페 I got everything 브랜드를 구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점포 개소 시 인테리어 시공비 등이 포함된 지원금, 지정 상표와 영업표지, 표준화 매뉴얼, 직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점포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점포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함.
- 2023년 3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카페 I got everything 점포는 전국 75개소이며,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의 경우는 61.3%,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41.3%가 분포하고 있음.\
 - 카페 I got everything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73개소 기준 총 267명으로 그 중 직접고용 중증장애인은 224명(84.3%)에 해당하며,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74.1%), 정신장애(8.5%), 자폐성장애(7.1%), 청각장애(6.7%),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1.8%) 등으로 다양함.
 - 개소 이후 3년 이내 점포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기준 달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고용의무 기준을 100% 달성한 점포는 30개소 중 9개소(30.0%)에 그침.

2)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의 운영 현황 및 근로환경,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장애인 근로자, (근로자의) 주보호자, 카페 이용 고객,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등 총 5개 집단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함.
 - 장애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는 현재 카페 I got everything에서 근무하고 있는 49명(전체 근로자의 18.4%)의 근로자로부터 취업 경로 및 현 직장 선택 사

- 유, 급여 및 근무 형태, 근로 환경 및 직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과 관련한 응답을 수집함.
- 후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는 현재 카페 I got everything 장애인 근로자의 후보호자 13명으로부터 근로 전후 가족 구성원의 지원 현황, 후보호자가 생각하는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 및 필요한 서비스 등과 관련한 응답을 받았음.
 - 카페 이용 고객 대상 설문조사는 카페 I got everything에 방문한 일반 고객 150명이 장애인 접촉 경험 및 태도, 카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등과 관련해 응답함.
 - 선정기관 20곳과 위탁운영기관 24곳에서 사업 운영 관련 및 장애인 근로자 관련 설문 문항에 응답함.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운영 현황을 고려한 현행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기준의 조정,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지원 방안 마련, 셋째, 사업의 장애인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및 카페 이용 고객의 장애인 인식 개선 효과를 강조하여 민간 영역으로 우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델 확대, 넷째, 카페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마지막으로 카페 매출 향상을 위한 메뉴 개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3) 비용편익 분석

-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운영 점포의 재무적 성과(매출 현황)와 비재무적 성과(장애인 고용 현황) 및 사업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
- 재무적 성과 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연매출액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특징임.
 - 연계주체별로는 선정기관이 공공인 경우의 매출액이 민간인 경우보다 약 1.8배 이상(2022년 기준)이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위치한 점포가 중소도시에 위치한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점포 규모별로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평균 매출액이 소규모 및 중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2019년 이후로 연평균 매출과 월평균 매출이 다른 규모의 점포와 달리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비재무적 성과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분석 대상 점포 76개소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총 247명으로 점포당 평균 채용 인원은 3.3명으로 나타남. 2020년까지 개소 점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용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은 2021년보다 점포 수가 증가했음에도 전체 채용 규모 및 점포별 평균 채용 규모가 감소함.
- 사업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카페 I got everything 개소 시 지원한 인테리어 지원 비용을 비용 항목으로 하고, 편익 항목으로는 크게 1) 카페 I got everything 에 근로했던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 성과, 2) 근로자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소득세, 부가가치세) 성과, 3) 장애인 근로자 대상 일상 지원 투입 시간 감소로 인한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여 분석함
- 사업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할인율 4.5%를 적용한 후의 총 비용은 약 48억 5천만 원, 총 편익은 약 73억 3천만 원으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1.51로 나타남.

4) 성과분석 종합

- 첫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카페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해 프랜차이즈사업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되, 카페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거점 기관이 카페 I got everything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운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점포별 재무 성과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기관 담당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과도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 넷째,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이외 다양한 양적, 질적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결과를 내외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창업시장 현황

- 장애인 창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시장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를 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장애인 기업인 경우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 창업기반 시설 확충 등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창업의 성공 요인을 다룬 선행 연구들로 이원희(2010), 오동훈·김창완(2017), 조세형(2019), 정동열(2019) 등을 살펴보았으며, 창업관련 자격증 등 창업 요인 및 창업 자금 요인, 장애유형에 맞는 창업 아이템,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 교육 및 아이템 발굴 지원 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2) 국내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현황

- 정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7가지 유형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실업급여 유지 및 지원을 포함.
-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 등 정부 지원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국내 장애인 창업 시장 현황 조사 및 국내외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례 검토 결과, 이를 토대로 첫째,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이 연계된 체계 구축, 둘째, 채용 대상자에게 적합한 업무 환경 조성 노력, 셋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 부문의 일자리 관심 증대,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 일자리 중요성 등을 확인하였음.



3) 개별 심층 면접

-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업종·직무 개발과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범사업 후보 업종에서 발굴할 수 있는 세부 직무와 해당 업종의 시장 내 확장성을 확인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업종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개별 심층 면접을 수행함.
- 7개 업종 전문가 심층 면접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직무 개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 검토 등의 중요성을 파악하였음.

4)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업종 직무 개발

- 창업시장 현황, 국내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현황 및 사례 조사, 전문가 개별 심층 면접 등을 토대로 카페 업종을 제외하고 11개 업종, 109개 이상의 직무가 후보군으로 선별됨.
- 후보 업종 및 직무는 첫째, 시장 가능성, 고용 확장성, 보호된 시장,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연구진 검토 결과 도출된 5개의 업종은 수익성, 실행 가능성, 직무 적합성, 일자리 질 등 사업 운영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차 검토가 이루어짐.
- 최종적으로 3개 업종(편의점 업종, 자원순환 업종, 병원 업종) 및 업종 내 관련 직무 12개를 발굴.
- 편의점 업종은 1인 가구 및 작은 용량의 상품 소비 증가 현상과 맞물려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 장애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응대 및 청소, 상품 검수 및 진열 등의 직무는 장애인이 특정 기술이나 경력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 및 장애인 업무 적합성 측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신규 업종으로 선정됨.
- 편의점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유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 I got everything 점포 공간의 일부를 활용한 카페 연계형과 일반 편의점 창업과 유사한 형태인 신규 점포 개소형 등 2가지 형태로의 운영을 제안함.

○ 자원순환 업종은 폐장난감의 수리를 통한 재활용 및 분해를 통한 페플라스틱 자원화와 반품된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재상품화하는 업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장난감을 다루는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감 증대, 장애 유형과 크게 상관없는 업무 특성 등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됨.

- 해당 업종 내 장애인 적합 직무는 리퍼브 업종의 경우 분류 및 검품, 재상품화, 물품 판매 등이 있으며 장난감 업사이클링 업종의 경우 수거, 분류 및 검품, 재상품화, 물품 판매 등이 포함되며,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은 업사이클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병원 업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산업에 해당되며, 매우 다양한 직무를 가진 업종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이 높고, 일부 특정 장소를 제외하면 장애인 근로자에 쾌적하고 안정성이 높은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 업종으로 선정됨.

-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의료기관의 모집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업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협력 병원과 예비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병원 분야 장애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참여자들에게 병원 업종의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것을 강조함.
- 특정 기술 및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병원 내 장애인 적합 직무는 환자 이송 업무, 의료 기기 세척 및 소독, 위생 용품 관리, 홍보 업무 보조 등이 제안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제안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담당 역할은 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 주체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 조사 수행,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업종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있음.
- 또한 사업 시작 후 운영기관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 장



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함.

- 이 외에 인프라와 시설을 지원하고 사업 홍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통해 우수 일자리 사례로의 발전과 민간에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

5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의 유사 사례, 사업 운영 현황,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운영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카페 이외의 신규 업종 및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 제안하였음.
- 한편 연구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첫째,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근로자 후보호자의 응답 수가 적어, 해당 응답 결과가 후보호자 그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함.
 - 둘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한 내부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규 업종 및 직무 개발 부분에서 업종의 우선 순위 및 판단 기준별 점수 등 정량적인 평가 및 직무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과 항목 이외 다양한 사회적 성과 항목을 발굴하며, 신규 업종 확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업 운영 지침 및 평가 체크리스트 등의 개발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사업 및 서비스 평가



13. 2022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2022 Evaluation on Governmental Subsidy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김영수, 서원선, 이상준

■ 요약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supports for disabled persons to independently act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ociety. Particularly, government subsidies are made available to facilitate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operation of assoc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subsidies for assoc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ne practical and substant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disabled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long with non-disabled persons in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includes an evaluation on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t use of government subsidies granted to assoc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evaluation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such assoc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validity, reliability, and business value of their business plans and thus to help them operate their businesses autonomously. Evaluation results showed various business values and contents of each associ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s well as active participation of many disabled persons in businesses. However, most businesses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maintained the same contents and methods just as before. Further development of capabilities and consulting are required for assoc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lan and operate various businesses.



1 연구배경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및 제8조(법인 사무의 감사·감독)에서도 장애인단체 평가,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단체의 신뢰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 매년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지표 또는 평가기준을 소폭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사회적 윤리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윤리 관련 책임성 제고.
 - 2021년부터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 조정.
 - 2023년부터 예산 규정 강화(상금 및 현금 지급 사업 지양, 정부정책 투쟁 사업 지양 등).
-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평가 결과

- 장애인단체 추진 사업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관별로 서면 평가를 실시함.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비학계) 12인 및 공무원 1인을 평가위원(보조사업자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서 검토 및 서면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은 2019년 평가까지는 9인(학계 4인, 현장전문가 4인,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및 내부연구진 논의 후 평가위원(보조사업자선정위원) 구성함.

○ 2022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결과 평가

- 2022년에 실시한 사업 내용을 기초로 결과 평가를 실시함.
- 사업영역(100점 만점)은 평균은 83.17점(표준편차[이하 SD]=10.65)로 나타남.
- 사업영역의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수행의 적절성'(30점)과 '사업성과의 적절성'(30점)에 관한 평균(총점 60점)은 47.53점(SD=4.85), '재정관리 및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40점)에 관한 평균은 35.64점(SD=7.96)으로 나타났음.
- '사업수행의 적절성' 영역에서 ① 수행과정의 적절성은 1-1-1번 사업목표는 4점 만점 기준 평균 3.81점(SD=0.51)으로 나타났고, 1-1-2번 사업 수행 방법은 6점 만점 기준 평균 4.96점(SD=1.15)으로 나타났고, 1-1-3번 인력 구성은 6점 만점 기준 평균 4.95점(SD=1.16)으로 나타났고, 1-1-4번 홍보 전략은 4점 만점 기준 평균 3.48점(SD=0.88)으로 나타났음. ② 수행관리의 적절성은 1-2-1번 모니터링 실시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50점(SD=0.96)으로 나타났고, 1-2-2번 모니터링 반영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37점(SD=0.98)으로 나타났음.
- '사업성과의 적절성' 영역에서 ① 사업성과 달성수준은 2-1-1번 성과 목표 달성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93점(SD=1.77)으로 나타났고, 2-1-2번 사업결과와 목적의 부합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8.46점(SD=1.74)으로 나타났음.
- 성과활용의 적절성은 2-2-1번 사업 성과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7.67점(SD=2.11)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계획 평가

- 2023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총점 100점 기준 76개 사업의 평균은 76.87점(SD=7.19)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배점)은 평균 28.59점(SD=5.80)으로 나타났고, 실현가능성(20점 배점)은 평균 14.58점(SD=2.89)으로 나타났음.



- 투입비용의 적절성(20점 배점)은 평균 14.79점(SD=3.95)으로 나타났고, 투입비용의 효과성(10점 배점)은 평균 6.93점(SD=1.55)으로 나타났음.
-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10점 배점)은 평균 7.28점(SD=1.56)으로 나타났음.

2) 시사점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다양성 확보

- 평가 대상 29개 단체의 76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반복됨.
-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함.

○ 인건비 및 사업비 분리 지원

-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한 것은 사업의 다양성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단체 측면에서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보전이 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국고 지원

- “소비자물가조사”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임을 감안할 때 2023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한 화폐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연구활용방안

○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즉 장애인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보전이 된다면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소구

모 단체의 경우 이를 추진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계획에 장애인당사자 참여 보장

- 장애인 당사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 상당수의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당사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확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장애인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에 의하여 장애인 당사자 채용이 한정적이라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와의 연관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14.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양숙미, 황익태, 김민, 정지웅

❖ 요약

This study is to monetize cost benefit analysis data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pply jobs of existing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reclassifies them based on the NCS and derives ways of development. Specifically, this study includes sec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terature review, cost benefit analysis, job appropriateness analysis, and FGIs and consultation for job reclassific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literature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w that elderly disabled ones in their 60s or older are involved. As to disability types, mental disability accounted for a largest portion (32.6%). In view of the aging and aggrav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adjust policies for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lease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accordingly. As to participation types of executing organizations, the number of participant private organizations is increasing. Therefore, profession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supports for such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future.

The general cost to benefit ratio of job creation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1.48, which indicates that the economic validity is secured. The economic effectiveness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proj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factors that affect such difference in effectiveness among project types and to find out ways to further improve the economic validity.

While many different jobs have been created for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nts in them have reported no or declining achievements.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42 reclassified jobs. These are mainly under 5 categories: environmental arrangement, business assistance, office administration, culture and art, and education and guidance. With this categorization, it is possible to conduct pract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o utilize it as a basis for judgment on capabilities of job applicants. As above-stated vocational analysis data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helping disabled job applicants find and join more various ordinary business entitie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vity)은 한 사회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그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정도를 나타냄.
- 직업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써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능동적 행위자이며 기여자가 될 수 있는 전환점임.
- 역사적으로 주류의 일반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러 시책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그 상태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음.
- 2006년 ‘Able 201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질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1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일자리 유형의 세분화, 일자리 확대, 고용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하였음. 효과성과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비용효과성 분석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무 재분류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금번 종합평가(2020-2022)에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다뤄진 비용 및 편익 분석의 분석항목을 고도화 및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기존에 개발된 직무들을 유사성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1)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실적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③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추진 전달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업 유형은 ①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②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③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2023년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22년보다 2,000명(7.2%) 증가한 29,546명임.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장,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2년 연속 참여자 등은 참가가 제한됨. 단,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예외 되어 2년 초과 참여 가능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사업에서 정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배치담당자 대상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 금번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2022년으로 참여자 측면, 수행기관 측면, 일자리 유형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분석하였으며, 동 기간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변화추이를 함께 분석함.
-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2020년 12,450명(55.1%), 2021년 13,796명(55.7%), 2022년 16,990명(56.0%)이었으며, 여성은 2020년 10,159명(44.9%), 2021년 10,977명(44.3%), 2022년 13,340명(44.0%)으로 나타남.



- 연령은 2020년-2022년 모두 60세 이상(38.9%, 41.4%, 42.7%)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장애유형은 2020년-2022년 모두 지체장애(35.4%, 35.3%, 34.4%) 와 지적장애(25.1%, 24.7%, 25.7%)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참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0년 14,390명(63.6%), 2021년 15,499명(62.6%), 2022년 19,008명(62.7%)으로 분석됨.
- 3년간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가 12,295명(15.8%)이었으며, 서울(9,114명, 11.7%), 전남(6,403명, 8.2%) 순임.
- 수행기관은 시·군·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점점 민간 수행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를 보면 일반형 일자리는 2020년도 8,150명, 2021년 9,233명, 2022년 11,250명이 참가하였고, 복지일자리는 2020년도 12,781명, 2021년 13,724명, 2022년 16,816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화형 일자리에 2020년 1,678명, 2021년 1,816명, 2022년 2,264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6년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종합만족도는 큰 변화폭 없이 2017년을 제외하고 86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참여자의 고령화, 정신적 장애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 인구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연속 참여제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일반형일자리는 신규유입자를 위해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고, 복지일자리는 고령장애인의 참여가 원활하도록 기존대로 운영하거나 참여제한의 기간 및 횟수를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행기관 중 장애 관련 민간 위탁기관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민간기관의 업무 증가 측면을 고려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지원이 필요함.
- 복지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어 있으나 일부 직무는 참여자 실적이 전무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직업적 독특성을 고려한 직무 재분류가 필요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수요인원 추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4-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참여인원 및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인원	5,716	7,669	9,443	11,011	15,364	17,549	19,778	22,609	24,773	30,300
증감률	-	34.2	23.1	16.6	39.5	14.2	12.7	14.3	9.6	22.3

2) 장애인일자리사업 비용편익분석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하여,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경제적 효과성을 따져보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실시하였음.
- 비용-편익분석의 분석관점은 비참여자, 참여자, 전체 사회 입장으로 설정할 수 있음. 사회 전체입장은 참여자 입장과 비참여자 입장을 총괄한 측면을 의미함. 본 분석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시산함.
- 분석대상 사업의 비용, 편익 중 계량화되지 못하는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분석을 위한 투입에서 제외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의 비용-편익분석을 회계적 관점에서 화폐가치화 하여 실시함.
- 본 분석에서는 2022년 1개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모든 유형(일반형, 복지, 특화형)을 대상으로 함. 본 분석에서 투입된 비용과 편익요소는 아래와 같음.

〈표 14-2〉 본 분석에서 투입된 비용과 편익의 요소

요소		비용, 편익의 귀속	데이터확보방안
비용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사회 비용	개발원 보유
	지자체 부담금	중앙정부·사회 비용	개발원 보유
	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비	중앙정부·사회 비용	개발원 보유
	사업관리비	지방정부·사회 비용	개발원 보유
편익	조세 수입 증가	사회 편익	추정
	일자리사업 경제가치 창출	참가자·사회 편익	추정
	의료비 절감	참가자·사회 편익	추정
	주간보호비용 절감	참가자·사회 편익	추정
	보호자 경제활동 가치 창출	참가자·사회 편익	추정



○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비는 1.48로 비용대비 편익이 더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3〉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비

비용 편익 요소		액수(원)
비용	국고보조금	183,943,000,000
	지자체 부담금	192,288,500,000
	전문관리체계비	1,351,000,000
	사업관리비	21,000,000
	비용 계(c)	377,603,500,000
편익	조세수입 증가	31,146,683,268
	일자리사업 경제가치 창출	355,090,605,000
	의료비 절감	4,662,873,540
	주간보호비용 절감	88,856,974,080
	보호자 가치 창출	78,564,660,480
	편익 계(b)	558,321,796,368
비용/편익		1.48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는 1.24,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는 1.47, 일반형 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비는 1.29로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4〉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사업의 비용-편익비

(단위: 원)

비용 편익 요소		일반형_전일	일반형_시간	일반형_전체
비용	국고보조금	92,423,000,000	22,080,000,000	114,503,000,000
	지자체 부담금	104,542,000,000	25,171,000,000	129,713,000,000
	전문관리체계비	678,816,117	162,170,238	840,986,355
	사업관리비	11,417,126	2,748,948	14,166,074
	비용 계(c)	197,655,233,243	47,415,919,186	245,071,152,429
편익	조세수입 증가	15,847,471,980	3,408,462,072	19,255,934,052
	일자리사업경제가치 창출	174,086,403,000	41,419,098,000	215,505,501,000
	의료비 절감	1,170,099,918	559,452,582	1,729,552,500

비용 편익 요소		일반형_전일	일반형_시간	일반형_전체
	주간보호비용 절감	28,944,928,320	12,877,562,880	41,822,491,200
	보호자 가치 창출	25,592,233,920	11,385,953,280	36,978,187,200
	편익 계(b)	245,641,137,138	69,650,528,814	315,291,665,952
비용/편익		1.24	1.47	1.29

○ 복지 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는 1.81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5〉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비용-편익비

비용 편익 요소		액수(원)
비용	국고보조금	45,806,000,000
	지자체 부담금	49,786,000,000
	전문관리체계비	336,429,796
	사업관리비	5,437,174
	비용 계(c)	95,933,866,970
편익	조세수입 증가	9,232,387,584
	일자리사업 경제가치 창출	106,159,408,000
	의료비 절감	2,585,258,208
	주간보호비용 절감	29,790,055,680
	보호자 가치 창출	26,339,470,080
	편익 계(b)	174,106,579,552
비용/편익		1.81

○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비용-편익비는 0.99,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의 비용-편익비는 2.90로 나타남. 특화형 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비는 1.88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편익 대비 비용은 높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특화형 일자리사업 전체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6〉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 사업의 비용-편익비

(단위: 원)

비용 편익 요소		일반형_전일	일반형_시간	일반형_전체
비용	국고보조금	15,486,000,000	8,149,000,000	23,635,000,000
	지자체 부담금	3,871,500,000	8,918,000,000	12,789,500,000
	전문관리체계비	113,739,506	59,851,688	173,591,194
	사업관리비	422,810	973,943	1,396,753
	비용 계(c)	19,471,662,316	17,127,825,631	36,599,487,947
편익	조세수입 증가	1,405,503,036	1,252,858,596	2,658,361,632
	일자리사업경제가치 창출	17,672,508,000	15,753,188,000	33,425,696,000
	의료비 절감	184,024,386	164,038,446	348,062,832
	주간보호비용 절감	0	17,244,427,200	17,244,427,200
	보호자 가치 창출	0	15,247,003,200	15,247,003,200
	편익 계(b)	19,262,035,422	49,661,515,442	68,923,550,864
비용/편익		0.99	2.90	1.88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특화형 일자리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비가 다소 낮은 편임.
 - 복지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수익률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인 비용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여부 등의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활동으로 임금소득이 창출되고, 그로 인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경제적 타당성의 간접적 효과로는 참여자들의 의료비 절감, 사회서비스 비용감소, 장애인 참여자의 가족 경제활동 증가 효과도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재분류 및 성과지표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함.
- NCS는 기업의 수요중심 인력 채용에 적합하며, 교육기관의 교수계획과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하며, NCS 개발과 학습모듈은 현장적용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직무교육으로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
- NCS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 복지일자리 직무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대면 5인, 서면 5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주요 질문은 NCS 기반으로 42개 복지일자리 직무에 대한 재분류와 적합도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둠.
- 현장실무자 대상 FGI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4-7〉 현장전문가 인터뷰 결과 주제별 구성

구분	주제
NCS분류 의견	1. 일자리 직무와 현장 업무의 차이가 존재함 - 책자에 언급된 직무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단순한 분류로 가야 함 - 일자리 직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NCS 분류 제시보다 단순한 분류로 가야 함
	3. 세분류를 넘어 능력 단위까지 구분 필요함 -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능력 단위까지 구분 필요함
	4. 일자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NCS 코드부여 이전에 직무재분류 필요
일자리관련 의견	5. 전이를 위한 지원 필요 - 낮은 취업 가능성을 보이는 일자리의 경우 전이를 위한 계획개발이 필요함
확대가능성이 높은 직무	6. 확대 가능성 높은 직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 템플스테이 업무보조 - 문화예술활동



○ FGI와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42개 직무에 대한 NCS 분류결과는 아래와 같음.

- 분석된 42개 복지일자리는 최초 사무직종 10개, 서비스 직종 15개, 노무직종 17개임. FGI를 통하여 ‘환경정리’ 14개, ‘업무보조형’ 15개, ‘사무행정’ 5개, ‘분류’ 4개, ‘문화예술’ 2개, ‘교육 및 지도’ 2개로 재분류됨.

기존분류	재분류
사무직종 10개 서비스직종 15개 노무직종 17개	환경정리 14개 업무보조형 15개 사무행정 5개 분류 4개 문화예술 2개 교육 및 지도 2개

- 직무재분류를 활용하여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채용공고의 정보와 실제 업무 간 갭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됨.
- 직무재분류는 현장에서 일자리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채용·배치하기 위하여 인재 선발과 채용 시 능력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의 학력이 아닌 직종의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능력 및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직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됨.
- 단,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할 업무보다 많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업무 수행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제한점이 존재함. 이러한 제한점을 낮추기 위해 “능력단위”를 제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NCS 기반 직업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용한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1:1 훈련 외에도 적절한 장애인 구직자를 선정하여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참여기관에 대한 직무분석 시에도 NCS가 기반이 된다면 직업 및 고용관련 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 현장에서는 장애인 참여자를 교육하고 배치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부족함. NCS는 교육·훈련을 개발하기 위한 준거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분류-직무분석에 적합함.

3 장애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

-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요도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참여 유연화가 필요함. 최고령 장애인 2년 이상 참여제한에 대해 유연한 참여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형 일자리는 신규 진입자를 확대하고, 민간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해 현재처럼 엄격하게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복지일자리는 현재 참여제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NCS 분류체계를 직무분석자료와 직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하기에 용이함. 민간시장으로 통합 및 전이고용을 강화하여 향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 구직자가 일반사업체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됨.
-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화형 일자리의 편익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화폐화 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외의 사회적 편익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편익의 성과지표를 개발함. 경제적 효과성 이외에도 일자리사업의 충실성, 직무만족도, 사회참여 확대, 취업률 등의 성과지표를 확대 등 사회적 가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15.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이준우, 임승희, 임수정, 박종미, 이진영, 이문오, 서성제

요약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for enhanc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disabilities through comprehensive education. It involves examining the operational systems of similar mandatory education programs, conducting surveys on education operations, and developing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 surveys on the operation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expert Delphi surveys, various metric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 development plan for enhancing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was sequentially presented with 9 short-term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7 mid-term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and 3 long-term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In conclusion, the following six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First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the operational and management systems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which are currently operating in a dual manner. Second, integration of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with similar disability understanding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manage workplac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re necessary. Thirdly, expanding the target audience for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Act is necessary. Fourthly, professionalization of instructor training and management is required. Fifthly, upgrading educational materials used i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various educational methods are necessary. Lastly, a diverse approach to educational methods is needed.



1 연구배경

- 2023년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제도로써 시행된 지 16년을 맞는 시점으로 법정의 무교육으로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수행기관과 강사, 교육 대상, 교육내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제고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시급함.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전문강사 110명, 소속강사 202명 총 31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9명(60.6%)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183개임.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학력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은 45세이고, 67.8%가 겸직이 아닌 전업 강사이며, 63.9%가 장애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42.1%가 장애가 있음. 평균 강사경력은 5.9년이며, 인식개선 교육기관 소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교육횟수는 44.1회(월평균 3.7회)이며, 총 교육시간은 93.5시간(월평균 7.8시간)으로 나타남.

-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강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강의한 기관 유형은 B유형이 가장 많았고, C유형이 상대적으로 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 응답 강사들이 실시한 교육방법은 대면 강의를 가장 많았으며, 교육내용은 장애인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법과 제도 및 자립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남. 사용하는 교구는 장애체험교구(46.8%)와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교구(37.0%) 비중이 높았으나, 표준교안 사용 비중(48.1%)과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응답자 중 32.2%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적절한 교육 횟수로는 과반수 이상이 연 2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한 시간은 1시간~2시간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9명이 대면 강의식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4점 중반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발전을 위해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의무교육 대상기관 설문조사 결과

- 2022년 전국 법정 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가입기관명부를 표집틀로 사용함. 전국 기관 유형을 A, B, C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기관 유형별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정하였



으며, 조사목적에 고려하여 각 집단규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함. 최종 수집된 자료는 263개(131.5%)로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256개임.

- 응답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이 67.6%(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해당하는 B유형은 16.8%(43개소), 유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은 15.6%에 해당하는 40개소임.
- 응답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었으며,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높았고, 법정 의무교육의 필요 인식 정도는 A유형과 C유형이 B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실시한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획 중인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강사 섭외 현황은 지인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섭외하는 비율이 41.8%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75.8%에서 63.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간과 강의자료 및 교재, 교육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경우 직원의 경우 모든 기관 월평균 2.6시간, 학생 및 유치원생의 경우 0.5시간인 반면, 희망교육시간의 경우 성인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유치원생 및 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황과 희망시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또한 희망하는 교육 횟수는 연1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5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에 대한 교육 및 강의만족도와 긍정적 답변 비율이 다른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교육방법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41.0%에 달함.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법과 유사교육의 차이점,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남.

○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Zoom) 접속을 통해 2차에 걸쳐 실시된 초점집단인터뷰는 ‘유사법정의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짐.
- 강사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점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이며, 단점은 정보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 교육의 효과성 측정은 무의미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간단한 만족도 중심의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과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으로 인한 효과저하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가족 및 의무교육기관의 장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시간을 3-5회기로 확대, 강사양성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 교육관련 행정 및 강사비 일원화, 쌍방향 평가 필요 등으로 요약됨.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로 범주화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지며,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영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면, 법정의무교육의 피로감이 높아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며,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율적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실적관리 연계 필요, 인센티브 필요로 요약되었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 범교과학습으로 편성으로 범주화됨.



○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

-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개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평가지표는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 총 4개 영역에 총 39개의 지표로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2) 시사점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 439명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에 대한 실증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교육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강사와 교육담당자로부터 심층적인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문헌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 전문가 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1) 정책방안

-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피로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법정교육 중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들이 많으며, 특히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중복된 내용들이 다른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장애이해교육을 통합하고,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유사교육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각 주관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조율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각 교육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대상자 측면에서 유사교육 수강에 대한 피로감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 측면에서 강사양성 및 관리의 편의와 표준화된 교재개발과 적용으로 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와 일원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022년 9월 채택된 UN CRPD 최종전해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회참여와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은 전 국민의 장애인식이 개선되고 장애가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의무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사 교육과 내용이 중복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한계 등으



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UN CRPD 최종권해에서 제시한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장애인 가족과 돌봄 제공자, 활동지원사, 간병인 및 사법 종사자 등) 등을 포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점증적인 대상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전문적인 강사 관리 측면에서 강사양성과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함.

-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양성과정과 강사양성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또한, 각 운영주체 별로 양성과정 전문인력과 교재 및 교구, 양성교육 기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다원화된 양성과정 운영으로 인해 강사의 전문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도 확인됨.
- 이에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 점검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강사인준기준과 교육 교재 및 교구의 표준화를 통해 강사양성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강사파견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사 섭외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및 보급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강사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강사 응답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업 비중과 비교하여 평균 강의횟수는 월평균 3.7회이며, 강사비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다름으로 인해 평균 강사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라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의시수와 적정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차별성과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에서 제시된 강사 매칭 서비스 및 관리를 통한 강의시수 확보와 관련된 다수 의견과 연동되는 결과임.

○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교재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 실태조사 결과 및 FGI 결과에서 동일하게 교육 교재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먼저 강사양성 교재의 경우 최근 이슈와 장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이론과 정책 및 제도를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또한, 강의교재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연령별, 기관별 특성이 다양하고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재로 재편되어야 함.
-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교육내용에 대한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장애인식 조기교육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령대를 고려한 교재·교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 교재의 고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교육방법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유아부터 성인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상기관별 특성도 다양함. 따라서 단일한 교육방법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이에 강의형에서 체험형과 문화예술 공연 및 캠페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넘어 장애공감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활용방안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예정.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층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대상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름. 따라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령별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됨.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령기 교과과정으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먼저 교육부 차원에서 범교과 편입을 통한 교과개발을 후속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es for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김가원, 이지수, 이혜수, 이현승

요약

Since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was designated as an obligation bound by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than 46,000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al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local firms, public corporations,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schools, etc. have been required to conduct such program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responsible for inspecting results of each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performance scoring sheet and proclaiming the results to the press, etc. Additionally, the Minister may require evaluation agencies to reflect such education inspection reports in evaluation results. For substantialization of such education program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apply diversified methods for inspection and evaluation such as specialized instructor system and education method. Institutions that fail to meet requirements are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and support for their managers in charge.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uch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continues to be emphasized.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alu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institutions specified by Article 25-6 of the above-stated Act, analyze indexes of similar legally obligated education programs, establish evaluation indexes for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and propose ways to introduce effective index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was analyzed in addition to 5 main legally obligated education programs and other similar cas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esent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as well as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evaluation indexes was



verified with improvement plans proposed.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indexes to substantia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that evaluated institutions applies, based on results of benchmarking various evaluation model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derived evaluation indexes, a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opinions about the appropriatenes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rom 10 individuals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evaluated institutions, and industrial evaluation organizations. Additional opinions about the weights of indexes were also collected from an expert group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dexes.

A mid/long-term approach is necessary to facilitate participation in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in the society and to promote such systems based on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for each step to promote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based on the short-term index proposal and mid/long-term index proposal.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update the contents in refle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and requirements of institutions concerned. The future study needs to examine how to improve the operation system and indexes for the mid/long-term promotion of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systems.

1 연구배경

- 사회적 장애인식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 조성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등 46,000여개 기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2007년, 2015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강사제 도입, 이러닝센터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뿐 아니라 장애인식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실시 결과 점검제도는 실적배점표에 따라 교육 기본계획 수립여부, 참여율, 교육 방법 및 활용,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며,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및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관 참여유인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실적 점검 제도를 고도화하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분석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관당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이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특히 교육 이수율 연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횟수가 연 1회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임에 따라 복잡한 평가지표를 통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현재로는 단순지표를 통한 실적점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적지표에 대한 고도화보다는 대면교육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적점검 제도 외 기관들의 교육 확대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표 체계의 경우 교육계획 수립의 경우 약 90% 이상 기관이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교육 실시 부분에서는 교육성과를 점검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임. 또한 비대면 교육 실시 기관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점 지표의 경우 유형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교육계획의 경우 지표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제도의 수립 여부만으로 점수가 부여됨에 따라 90% 이상의 기관이 제도수립을 완료한 시점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상황임. 장기적으로 계획의 적정성 또는 계획 수립 외의 제도적 관점에서의 기반조성 노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대면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요성이 높은 지표로 별도로 구분하여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기관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가점 지표는 지표별 가중치 차등 또는 유형별 차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 후속조치의 경우 실적점검표 기준 70점 미만 또는 대면교육 미실시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관리자 특별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며 공표 및 타 평가 연계도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도 활성화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진기관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유사 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점검하고 제도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외 외부 공표 및 타 평가 연계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유사제도 사례 분석

- 교육 실적 점검제도의 경우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교육의 경우에는 강사 자격에도 제한을 둬으로써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교육, 안전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적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부처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실적점검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역시 과태료 부과, 부처 평가 연계 등의 강제적 제도 유인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평가지표 Framework의 경우 대부분의 유사 교육 실적점검제도의 경우 결과 보고서를 통해 평가하거나 교육계획과 실시 결과(직급별 참여율 등) 등의 단순화된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도 단기간은 현 지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지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모델 적용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진기관 선정기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과 마찬가지로 이수율, 실적 미제출 여부, 교육 미이수 기관 등이며, 일부 제도의 경우 전체 기관 중 하위 10%,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부진기관 관리 방안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리자 특별교육 외 이행계획서 제출, 부진지표 타 평가 연계(권익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 언론 공표 등이 있음.
- 행안부 안전교육 평가의 경우 우수기관 및 사례에 대한 외부 공개로 기관이미지 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한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타 평가 연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계량점수로 반영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평가지표 고도화 이후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학교나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의 연계보다는 가점 부여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사례분석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화된 성과관리 평가지표 마련 후 이를 경영평가 등에 연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는 평가지표 보완, 가중치 수정, 부진기관 후속조치 강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관들의 제도 유입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 교육 평가를 위한 방법론인 커크패트릭 4단계 평가모델, CIPP Model의 경우 교육의 효과성 제고, 수준 향상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교육 횟수가 증가하거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경우 이들 모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실적점검, 성과관리목적의 평가가 필요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의 경우 만족도, 이해도, 기여도 등의 일부 지표는 활용 가능할 것임.
- PDCA, System 모형의 활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PDCA의 경우 단편적인 제도의 성과관리보다는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 운영의 성과관리 등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성과평가에 적절한 모형임에 따라, System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식교육제도의 실효성 확대, 효과성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성과관리가 추진하게 될 경우 System 모형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측정하기 위한 만족도, 이해도, 기여도 등의 지표를 성과(Outcome)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적정성 검증

- 지표 적정성 관점에서 기관 의견수렴 결과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교육 방법 및 활용’ 영역임.
 - 연구진이 제시한 단기개선안에서의 교육방법 및 활용 영역에 교육 방법 지표를 추가한 개선안이 적절한 방향이었음이 검증됨.
 - 교육방법에 사이버 연수, 체험형 활동 지표 추가 요구가 도출되었으므로 교육방법의 측정지표로 반영하도록 하였음.
- 교육 계획수립, 교육 참여 부분에 대한 배점 확대 요구가 높아 가중치 배분을 위한 전문가 자문시 기관의 요청사항을 안내함.
- 유형별 특이사항으로 도출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참여 대상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유형 B, C 기관 담당자들이 교육참여 대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음.
 - 이에 유형 B, C의 경우 교육참여 대상을 임직원과 학생 참여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표 개선에 반영함.
 - 유형 A의 경우 교육방법 중 사이버 연수, 비대면 교육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요청이 많아 향후 중장기적인 제언으로 대면교육의 실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반영함.
- 가점 지표 관련 의견으로는 교육 의무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지표 등과 같은 지표는 유형 B, C 해당 기관이나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상 달성이 어려움. 기관 특성, 수준을 반영하여 가점지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기관 의견수렴 결과 중장기 개선안에서 강조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교육 인프라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교육 성과 영역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기관이 달성하기 좋은 성과는 인프라 영역이지만, 제도의 목적성과 성과관리 체계 모형을 반영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은 교육성가로 판단됨. 이후에 추진된 전문가 의견 역시 교육성과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배분함.
- 각 영역별로는 교육 인프라 영역에서는 자원 배분과 제도 홍보에 관련된 측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성과 영역에서 장애인식개선을, 교육이해도 등에 대한 측정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 평가 대상 기관에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성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됨.

○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로드맵 도출

-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단기개선안 최종안

- 평가지표 관점에서는 단기안에서도 교육성과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성과 항목을 추가하고 대면교육의 가중치의 일부인 5점을 배분함. 다만 시행 초기에는 과거 추이나 현황 분석이 어려워 세부내용에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참여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5점을 부여하고 동일한 경우는 2점, 감소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또한 대면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성이 높은 지표로 교육품질 영역에 별도 지표로 추가함. 향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는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후속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함.
- 유형별 차별화로는 연구진에서 검토한 교육참여 대상에서 기관장을 제외하고 가점지표로 전환하는 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임에 따라, 유형 B, C를 통합하고 가점 지표에서 유형 B, C 특성상 달성하기 힘든 교육 관련 제도화 지표와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지표를 제외하도록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중장기개선안 최종안

- 중장기개선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영역의 경우 Input, process, outcome 3단계가 Input, process, output, outcome의 4단계로 수정되었으며, Input 영역은 교육계획 수립여부, 자원배분, 제도 수립, 제도홍보 여부 등을 측정함. 자원배분에서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 부분 점검은 제외하도록 수정함. Process 영역은 교육방법, 강사수준, 교육형식으로 구성되며, 강사수준에는 단기안의 가점지표인 장애당사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지표로 추가로 포함됨. Output 영역에서는 기존 process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대상별 이수율과, Outcome 영역의 교육만족도 지표를 측정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Outcome 영역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해도, 장애인식개선율, 교육 참여인원 증가율 등을 측정함.



2) 시사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단기적으로는 평가 참여기관의 확대 등 교육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양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지표 보완, 가점지표 수정, 가중치 개선 등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과 부진기관 관리 방안 개선, 점검결과 공개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지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수준, 평가방법 지표 도입이며, 가점지표 개수 축소 및 가중치 감소 등의 개선 필요.
 - 또한 부진기관 선정기준 재설정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외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고 부진기관 공개 등의 노력 필요.
- 중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유형별 차별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군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적으로 대면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원격교육, 비대면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대면기준을 확대하고, 점검결과 공개를 기관 자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장애인개발원 실적점검시스템 등에 기관별 교육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관련 정보 공유를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부진기관 관리뿐 아니라, 우수기관에 포상, 전문가 컨설팅, 성과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Logic Model 도입을 통한 Input-process-output-outcome 관점에서의 실적점검을 추진하고, 평가단 등을 활용하여 실적점검 방식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계획과 실시, 이분법적으로 실적점검을 진행하는 단기개선안과 달리 중장기개선안에서는 교육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자원배분, 관련 제도 마련, 교육제도 홍보 등 기반 마련을 위한 평가영역과 장애인식제도의 최종 성과인 교육이해도, 장애인식개선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평가지표의 체계성, 객관성, 적정성 등의 검증된 이후에는 계량화된 평가점수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처 업무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하거나 우수 점수를 획득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평가 등에 관련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에 대 인식 제고 필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나 타 평가연계,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기관들에게 강제적 참여를 유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점검결과 공개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우수기관, 부진기관을 공개하거나,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직원, 고위공직자 이수율 등의 기관별 교육현황을 게시할 수 있음. 이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일부 기간(결과 공개 후 1개월 등) 동안 전년도 교육실적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도 활용 가능함.
- 제도 홍보 방안으로는 공문, 안내 책자,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하여 개발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캠페인, 타 교육, 국민참여 행사 등의 보건복지부, 개발원 추진 중인 정책사업, 이벤트 등과 연계한 홍보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처 업무평가 등 타 평가와의 연계는 기관들이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의 의무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지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체계가 고도화된 이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평가체계 고도화

-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평가지표 현행화,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군 재설정 및 대면점검, 정성지표 활용 등을 통한 실적점검 방식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현행화의 경우 세부지표 단계까지 도출된 상황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 시 평가항목(계획수립, 교육참여, 교육품질, 가점)의 가중치 배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임.
- 평가군 재설정의 경우 유사 평가제도의 평가대상 및 유형 구분 결과 교육실적점검의 경우 유형별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 주제별 특이사항으로 인해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유형은 학생 포함 여부로 구분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고위직 참여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형 구분보다는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50인 미만 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표 또는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실적점검 방식의 경우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제도와 같이 부실기관의 경우 평가단을 활용하여 대면점검을 통한 현장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을 추가해볼 수 있으며, 평가단을 통해 교육계획 적정성, 제도 홍보, 장애인식개선 성과 등의 지표를 정성화하여 평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BP 평가 및 공개

- 우수사례 발굴 및 공개는 기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참여 기관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평가단에 국민참여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교육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수사례의 기준은 교육방법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 체험형 교육과정 발굴 등 교육방법의 고도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 평가단 활용 등을 통해 교육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 사례집, 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어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음.

○ 부진기관 관리체계

-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부진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이를 위하여 부진기관 기준을 재설정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진기관 공표, 컨설팅, 연속 부진기관 패널티 부여, 현장점검 등 관리방안을 고도화하여 참여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음.
- 부진기관의 선정기준은 현재 전년도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교육 미실시 기관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교육 미실시 기관으로 평가체계 개선안에 대면교육 관련 평가지표가 포함되었으므로 이 기준을 제외 가능함.
- 부진기관의 관리방안 고도화를 위해서는 부진기관 공표, 차년도 교육계획 의무 제출, 부진기관 컨설팅, 연속부진기관 패널티, 현장점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당해연도 부진기관 대상으로는 언론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및 게시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계획을 반영한 차년도 교육계획서 제출 요구하며, 실적점검표 기준 평균 이하 영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연속 부진기관에 대한 연차별 별도 관리를 통해 연속 부진기관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2개년 연속 부진기관의 경우에는 실적배점표 총점 기준 5점 감점, 3개년 연속 부진기관의 경우에는 전문 평가단을 활용하여 교육 계획 수립여부, 교육 실시횟수, 교육방법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활용 가능할 것임.

○ 인센티브 제공방안

-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성과공유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 우수기관의 기준은 실적배점표 합계 90점 이상, 전년도 대비 20점 이상 향상 기관, 교육방법 고도화 우수사례 선정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언론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및 게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장애인개발원장 포상, 우수사례 사례집, 공유회 등을 통한 우수성과 확산 및 성과 홍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제도관리 강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참여 확대 뿐 아니라 교육 품질제고, 성과지표 관리 등 체계적 제도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제도를 추진, 운영하는 장애인개발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전문강사 Pool 관리 강화, 강사 역량평가 등 활용하여 수준 높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콘텐츠/플랫폼/방식 다변화, 우수사례 적극 공유 등의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도 필수적임. 교육만족도, 장애인식개선도 등의 Outcome 속성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초기에는 개발원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이후 성과지표의 산식, 측정방법 등이 체계화 된 이후에는 기관별로 확산하여 향후 중장기개선안에서 활용하도록 함.



3 연구활용방안

1) 개선방안

- 본 연구는 유사 교육 실적점검제도, 교육평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성과 체계를 도출하였으나, 관련된 대내외 환경과 기관들의 요구사항 등이 계속하여 변화됨에 따라 본 평가지표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중장기 평가지표 개선안은 세부지표 단계까지만 도출된 상황으로 향후 후속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분화된 지표 및 가중치 배분이 필요할 것임.
- 이 연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활성화 및 성과 관리체계 구축의 초기단계 연구로 향후 지표 고도화, 전문가 평가단 매뉴얼, 평가체계 고도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제시된 평가지표의 단기, 중장기 개선안의 효율적 반영을 위한 운영제도, 절차 개선, 시스템적 인프라 구축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V. 서비스



17.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Disability-inclusive Climate Response Policies

이혜경, 조성민, 이선화, 이태현

■ 요약

Many countries around the globe including Korea suffer disaster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s, and this climate crisis requires each country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realization of green society and carbon neutrality. Particularly among vulnerable classe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sters cause more difficulties and inequality in terms of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disregard in countermeasur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s and difficulties that disabled persons face in the climate crisis, which are currently highlighted in the global society.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ies for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risis.

'The study on how disability communities respond for the carbon neutral green society' in 2022 was followed by 'the study for disability-inclusive climate response policies.' Both studies aim to facilitate positive changes in disability communities and raise awareness of climate changes in our society and thus to contribute to policy changes through their proactive research. To fulfill above-stated purposes, this study examines reports regarding climate respons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t home and abroa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disability communities to examine perceptions on climate changes, global changes, and related policies as well as problems and challeng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s and responses to them. Focus group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among disability communities and academic circles to collect opinions on disability-inclusive climate response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promotion on changes in the global society and domestic polici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s. Second, it is necessary for



disability communities including disability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s and strengthe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s. Third, a legal found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basis for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for climate changes. Finally, disabled person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seriousness and problems of climate changes over our society particularly among disabled persons and measures for resilience to climate changes. In the solidarity amo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GOs under the Ministry, and disability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ally make known difficulties and needs of disabled person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s, to collect related agenda, and to make and monitor policies.

1 연구배경

-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고, UN 기후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홍수, 감염병, 재난 상황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식량, 식수 안정성 위협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감소 등의 간접적 영향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속 직·간접적인 영향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됨. 기상악화로 인한 노후 건축물 피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한 먹거리 값 상승 피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법에서 모든 수준의 기후 행동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애인 포함 기

후 정책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UN, 202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감소를 위한 노력,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에서의 차별 및 배제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국내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 인식 수준 및 대응 방안 조사결과

- 조사를 통해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하고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의 차별 및 배제,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들을 확인하고자 했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6.3%가 심각하다(매우심각+심각)다고 응답하였고,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97.5%(많은 영향+어느 정도 영향)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심각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많이노력+노력하는 편)라는 응답이 34.6%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우려하고 있었고,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37.0%)가 가장 많았음.
 - 탄소중립의 의미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한 인식정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장애인복지단체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로는 사회전체의 참여 유도,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걱정된다(매우걱정+다소걱정)고 응답함.
 - 또한 기관이나 응답자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할 때 특별히 배제된다고 느끼는 영역으로는 SDGs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장애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나 별도 프로그램 부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한편,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매우관심+다소관심)는 비율이 21.0%에 불과하였고,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노력에서도 노력한다(많이노력+노력)는 응답이 16.0%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으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방안 모색, 장애계의 기후적응능력 향상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지원 및 보호,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장애계의 참여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제화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또한 탄소중립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에서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기후위기에 의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원회 및 관련기관 등에 장애를 포함하여 정책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장애계 대상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서 기관이나 단체,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기후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존

중 강화, 접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시사점

○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의 개념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시켜 장애인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포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장애포괄적 기후 대응 정책’이란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함.

○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과제

-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녹색성장기본법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은 기후 취약계층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법이나 제도에 장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거나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첫째,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건강, 이동, 정보, 생계, 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장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함께 확인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장애가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 기관 및 단체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영역에 따른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적 측면에서 언급하고 장애인의 권리기반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주체별 역할과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평등 영역과 관련됨. 따라서 건강, 정보, 이동, 생계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되며, 구체적 상황과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및 단체 차원에서는 정보,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영역과 관련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고, SDGs에서처럼 장애를 cross cutting 이슈로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7-1〉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개인적 차원	기후 변화에 대한 학습	건강, 정보, 이동, 생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 상황 인지·학습
기관 및 단체 차원	교육 / 역량강화	정보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 제공 장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정책 아젠다 형성	제도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의 국내외 불평등 사례 수집 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아젠다 형성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정부 차원	취약계층 관점 고려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	기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입안 시 다층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고려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 제도	기후 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 매뉴얼 제작 및 배포(시각자료, 점자, 쉬운글 자료 등)
	정책 결정 시 장애인 참여 확대	정보, 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취약계층 범위 확대

3 정책제안

○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 및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수준 향상 도모.

-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변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수준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둘째, 장애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 등 장애계가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력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젠다를 형성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



에 장애인의 포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염두해 둔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정에 장애인 권리기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장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의 제13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고 하며 취약계층을 언급할 뿐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해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참여 보장방안을 마련한 국가가 드물긴 하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언급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과 문제점, 특히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조하는 조치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조직(NGO)와 장애계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의 어려움과 장애계의 욕구사항을 제안하고 함께 아젠다를 형성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해야함.

18.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Professionalism of Personal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조윤화, 서동명, 김용진, 이지호, 정제형, 한기명, 이윤경, 김미령

❏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ecialized care-giv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systems at home and abroad, upgrade such continuing education systems, and derive implications of such efforts into general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s and specialized workforce training plans. To this end, caregiver curricula in Japan, Germany, Sweden, etc. were examined. Additionall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disabled persons, personal assistants, and institutions that provide such assistant servic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 Germany, specialized personal assistant curricula were applied as part of regular curricula and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while in Japan, specific curricula were designated for each assistance service provider. Particularly, curricular were systematized according to specific supportive methods such as communication, medical support, etc. In contrast, disabled ones in Sweden can choose to use a personal assistant with no for any special education or training. Applicants need to be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no special license or certificate is required. The following are result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conducted among disabled ones, personal assistant, and service providing institutions: First, the focus needs to be on practical lessons rather than theoretical education to strengthen personal assistants'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rricula in a way that upgrades the service quality substantially especially for occasions where support for constant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Second, when supportive service is provided to a disabled person with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various additional supports such as education expense and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will be necessary for smooth communic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lans (drafts) to improve the specialty of personal assistants. The short-term plan (draft) aims to upgrade the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nd to add continuing education to the current standards. The mid-term and long-term plans (drafts) are to strengthen the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standards. Specifically, the mid-term plan (draft) consists of “the current system + newly introduced in-depth course + continuing education” while the long-term plan (draft) is to complete the certification course plus the in-depth course and continuing education course.

1 연구배경

-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됨
 -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예산(1조 9천억원)을 차지하며, 활동지원사 수도 3배 이상 증가함
- 활동지원사 연령 분포가 고령화되고 있어, 다양한 장애유형 및 요구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낮은 진입장벽, 활동지원사 교육체계의 문제, 보수교육 및 심화과정의 부재 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평가체계의 한계,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및 처우 등이 개선이 필요함
 - 낮은 진입장벽 및 보수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야 함
 - 장애유형별 보수교육 활성화: 장애유형별 특수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함
 - 평가체계 강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이에 국내외 돌봄제공자 전문인력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분석하여, 보수교육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체적인 양성교육체계와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 첫째, 이론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 돌봄노동의 가치와 현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돌봄제공자 및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국내 유사돌봄제도 보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셋째, 국외 활동지원제도 관련 전문인력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넷째, 당사자 또는 가족, 종사자(활동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득한 보수교육의 문제점 및 실태와 전문성에 대한 욕구를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다섯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수교육 내용과 전문양성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실현하도록 구체화 함

○ 당사자 및 질적조사 결과

- 첫째,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을 강화하고, 상시적 의료적 처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의료 행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활동지원사의 처음 매칭 시 개인별 특성과 전문적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위해 최소 1주일에서 1개월의 실습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실습은 의사소통과 시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가능한 전임자나 선임 활동지원사 등이 참관하여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실습이 가능한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습에 대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품질을 높여야 함
- 셋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할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비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



- 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교육과정과 수당을 연계하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이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교통수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연구활용방안

- 돌봄제공자 전문인력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편체계의 장단기 개편 방안 제안
 - 단기안은 보수교육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행 기준에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임.
 - 중기안은 “현행+심화과정 도입+보수교육”으로 특히 심화과정은 행동지원과정, 복합적요구지원과정, 건강지원과정, 의사소통지원과정 총 4개 과정으로 구분함.
 - 장기안은 자격증화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심화과정과 보수교육 세 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회과정은 앞선 4개 과정을 의미함.

〈표 18-1〉 제도적 단기·중기·장기안

구분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
		보수교육체계 고도화	양성교육체계 및 자격기준 강화	
		현행 + 보수교육 강화	현행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자격증화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기본 과정	활동지원 사 자격	교육 수료(현행 유지)	교육 수료(현행 유지)	- 국가고시통과(자격증화) • 이론 및 실기 과목 강화, 실습기관 연계 강화, 서비스 내용 등 전면 재편 및 확대(건강지원과정 등 심화과정 내용이 다소 포함됨)

구분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
		보수교육체계 고도화	양성교육체계 및 자격기준 강화	
		현행 + 보수교육 강화	현행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자격증화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자격 이수 기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활동지원서비스 교육기관 역할 강화 - 실기 및 실습 강화
심화 과정	심화과정 체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과정 수료 : 수료증 발급 - 심화과정 체계 : 이론+실기(실기 중심) • 1) 행동지원과정 : 정신·발달장애인 중 가산수당 대상 등/20시간 • 2) 복합적요구지원과정:중증뇌병변·와상·척수장애 등/20시간 • 3) 건강지원과정(감염위험이 있는 석션, 비위관, 위루관, 도뇨관, 관장 등)/20시간 • 4) 의사소통지원과정 : 발달·뇌병변·시청각장애/각 10시간 	좌동
	심화과정 전달체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교육기관 및 장애인 단체 에서 사업 실시 • 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자, 활동지원사, 당사자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심화과정 교육 실시 	좌동
보수 교육 과정	보수교육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정: 법정보수교육 4~5개, 행정 교육 등 - 선택과정: 장애특수성에 따른 교육 ※ 평가 시 : 법정교육 과 행정교육은 최대 5점 인정 ※ 장애특수성에 따른 교육은 최소 3점 이상 	좌동	좌동
	보수교육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정: 보건복지인재원 등 - 선택과정: 활동지원교육기관 • 실습과정및 콘텐츠 개발 사업 (신규), 온라인 활용 등 특화사업 실시 (예, 뇌 	좌동	좌동



구분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
	보수교육체계 고도화		양성교육체계 및 자격기준 강화	
	현행 + 보수교육 강화		현행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자격증화 + 심화과정 도입 + 보수교육
		병변 장애인 지원 방법, 이동지원, 감각장애, 정신장애 이해 등)		
건강 지원 서비스 가능여부		허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 심화과정 중 '건강지원과정' 수료시 지원 가능 • 활동보조급여에 '건강지원' 추가 	허용 (좌동)
기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수료자: 활동보조급여 중 '건강 지원'을 제외한 활동 지원 가능 - 활동보조급여 중 '건강지원'의 경우 '건강지원 심화과정' 수료시 지원 가능) <p>* 서비스 이용자가 가산수당 대상자이고, 심화과정 수료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의 3배 추가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수료자: 활동지원급여 모두 가능(건강지원 포함) - 심화과정 수료자: 심화과정 수료자는 준관리자 자격 부여 <p>* 서비스 이용자가 가산수당 대상자이고, 심화과정 수료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의 3배 추가 지급</p>

19.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Care Giver Service for Elderly Disabled Persons

조윤화, 이종남, 오윤지, 한기명, 박시은, 이윤경

❏ 요약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for elderly disabled person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standard for those aged 65 or older and ways to develop new related service items. To this end, the concept of 'elderly disabled persons' was reviewed,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of elderly disabled persons suffering 'disability' and 'aging' at the same time were analyzed. The following ar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ndividuals whose disability was declared after they were 65 of age were older than those whose disability was declared before they were 65 on average. Therefore, the need for support was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x and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x. Second, as to the ratio of those using a daily activity assistant or supportive care service, that of elderly disabled persons whose disability was declared after the 65th year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se disability was declared before the 65th year. Third, elderly persons whose disability was declared after the 65th year tended to be relatively negative about their health conditions. The qualitative research result shows that elderly disabled persons in the blind spot of the personal assistant system were suffering from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of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the face of severe constraints on their daily activity. Particularly, elderly disabled persons were experiencing different constraints on their daily activity from younger disabled persons. In the case of elderly disabled persons who have lived as a 'disabled person' for their entire life after declaring the disabilities before the 65th year, the initial disability when they were younger was mild but as they were aging, the disability deteriorated to the severe level. Despite such constraints in daily activity, elderly disabled persons have no other option but present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current institutionally limited circumstances. This is because, when they become



65 years of age, the available service is changed from the supportiv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at takes no disability into account. Particularly, field experts view it as necessary to establish new service standards for elderly disabled persons by classifying care services so that elderly disabled persons aged 65 or older can be granted the proper and fair service regardless of when they declared the disability. Finally, neither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nor welfar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ailed to consider elderly disabled persons properly. It is necessary, therefore, for both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aged an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ay more attention to developing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lderly disabled persons.

1 연구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 65세 기준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신규서비스 발굴 등을 제안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장애’와 ‘노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장애인구의 특성을 분석함.
- 국내 고령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제도가 병행 유지되고 있는 프랑스,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사례조사 실시함.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장애인의 개념과 복지서비스 욕구의 차이, 고령장애인의 연령 등의 문제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 정리.
-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 이용의 차이,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복지욕구 비교.
- 프랑스와 일본의 고령장애인 돌봄 관련 서비스 연령 기준, 서비스 내용 등 분

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정책방향 제안.

- 고령장애인 당사자 및 종사자 대상 현재이용 서비스 및 욕구 조사, 정책방향 제안.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의 방향과 복지서비스의 지원 주체 및 방향을 논의, 정책방안 및 신규서비스 제안.

○ 본 연구의 고령장애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 장기요양제도 간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알아보기 위해 만 65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함.

○ 현재 국내 고령장애인 돌봄정책은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노인돌봄정책 내에 포괄하고 있음.

- 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34.9%,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21.1%가 수급 중이며, 그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약 8천여명(0.6%) 정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시설급여 서비스(59,215명, 4.2%)와 유사하게 장애인거주시설 1,368명(0.1%)에 입소한 경우가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도 되어 있어 장기간 입원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

○ 즉, 고령장애인은 대부분 노인돌봄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수의 고령장애인이 장애인돌봄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노인복지정책 내에서 장애와 관련한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도 노화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1인(장애인 당사자 15인, 요양보호사 1인, 사회복지사 2인, 사회복지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은 일상생활 제약이 심각할수록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음.



- 일반적으로 고령장애인은 비고령장애인과 다른 일상생활 제약을 경험함.
- 만 65세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장애인은 젊을 때는 일차장애가 경증수준이었으나, 노화될수록 그리고 장애특성상 장애가 악화되어 중증이 되었음.
- 일차장애 및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등이 발생하거나, 낙상과 같은 생활 사고를 많이 경험함.
- 고령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제약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은, 만 65세에 도래 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애인의 고려가 부족한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임.
-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토대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9-1〉 심층인터뷰 결과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장애특수성이 고려된 공적 돌봄체계 필요	장애와 노화로 배가되는 생활제약 그리고 우울함	노화 및 장애로 인한 일차장애 악화
		장애 및 노화로 인한 사고, 65세 이후에 발생한 사고
		추가 질환 및 만성질환 등 증가
		움직임의 힘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고령장애인 돌봄의 기피	계속 바뀌는 요양보호사
		중증 장애정도 일수록 돌봄 기피
	돌봄지원 부족으로 가족의 해체 및 경제적 힘듦의 경험	무너져 가는 가계 경제 가족의 해체
장애특수성이 부족한 노인복지 서비스	부족한 방문요양 급여량 및 자부담 문제	가사 중심 요양서비스 및 부족한 병원 이동지원 서비스
		사회참여의 제한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절대적 부족
		자부담의 부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지원, 욕구들의 상충	장애이해 및 감수성이 낮은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수준과 당사자 욕구 간 갈등
		노인 돌봄과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욕구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적 문제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기준에 따른	65세 이후 일차장애 악화, 2차 장애 등 집에 방치된 삶
		활동지원제도 시행 시 65세가 넘는 고령장애인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재편 요구	사각지대	65세 이전, 요양급여 수급 그러나 65세 이후 활동지원 신청 불가
		재활병원 및 요양병원의 활동지원제도 정보 부족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지원 시기 놓침
		장애정도가 유사하지만 친구는 활동지원대상자, 나는 요양급여대상자
		장애정체성이 강한 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집 밖 활동을 위해 지원 필요
		복지관, 사회 활동 등 욕구
	신규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요구	장애유형끼리 생활하는 고령 장애인 시설 마련 필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필요
		노인돌봄 영역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
		노인돌봄정책 보다는 장애인돌봄정책에서 지원 필요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총 7인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현황 및 현 돌봄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사함.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진입 통로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서비스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고령장애인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령화된 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이라는 진입 통로가 장애인인지 노인인지의 구분보다는 권역별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밀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함.

〈표 19-2〉 FGI 결과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장애에 대한 준비 없이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전문기관에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증가
		장애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공간과 여건
	장애에 대한 교육 부재	노인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인 장애인에 대한 접근
고령장애인에 대한 준비가 없는	고령장애인의 서비스의 사각지대	장애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재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장애인복지서비스		고령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부재(제한) : 아동 치료 및 청(소)년 중심인 장애인복지관
	고령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마련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령 장애인의 발생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요구
고령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마련	돌봄제도간의 상충	동일한 서비스의 다른 이름으로 인한 급여 차이
		출발의 목적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돌봄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차이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마련	제도가 아닌 돌봄 구분 필요
		영역별 서비스에서 읍면동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제도 선택 기회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조정 - 사회적 존재에서 '생활지원대상'으로 전환

3 연구활용방안

- 노인돌봄서비스들의 제도적인 특징들은 고령장애인의 요양서비스, 사회참여 지원, 이동지원 등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음. 결과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돌봄 기피와 서비스 제공자의 잦은 변경 등을 낳았음. 장애관련 특화서비스 필요성 또한 제기됨.
- 장애정체성이 높은 만 65세 이전 장애등록 장애인에게는 노인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병급 필요성이 제기됨.
-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연령 제한 폐지) : 고령장애인 지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만65세 이상 중 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고령장애인을 모두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시키기 보다 만65세 이전 등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중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적용과 추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아래의 법적 변화가 필요함.

- 둘째, 노인돌봄서비스의 장애 특화서비스 필요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 시간 확대 고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형 서비스 구축 필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 대상 장애 관련 교육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내 장애여부 실태 파악 필요.
- 셋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의료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설 전환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외에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의료 및 생활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 함. 현재 집단이 함께 사는 거주시설의 형태가 아닌 장애유형별로 고령의 삶을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모델을 마련해야 함.
- 넷째, 고령장애인 특성을 살린 고령장애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령장애인 복지법률(가칭) 필요 : 현재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장애인 가구의 특성들인 노노가구의 특성, 1인 장애노인가구의 안전, 건강실태, 주거실태,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 개인예산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sonal Budget Scheme Application: Focusing on Direct Employment

조윤화, 김용진, 김민, 이호선, 박시은

❖ 요약

In 2023, a study on personal budget scheme simulation was conducted in Korea. The personal budget project was conducted for about 100 individuals. However, without clear standards and sufficient contents for direct employment, no direct employment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personal assistants or various other types of human resources. This study summarizes issues about direct employment of care givers in private sectors, which is the biggest challenge when it comes to a Korean type of personal budget scheme model. Additionally, this study presents details about infrastructures for direct employment of care givers and their assignment system.

The personal budget scheme is an institutionalization of self-directed support. This is a major exampl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s to strengthen the consumer sovereignty. In the context of the personal budget scheme, direct employment means to directly employ personal assistants or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and to assign roles of handling salaries, taxes, insurances, etc. This study distinguishes direct employment with no interagency involved from direct employment through an interagency. The case study examined assignment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under the direct employment systems of Germany, Australia, and the UK.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among service users and their families, it was difficult or unable to systematically find a personal assistant. Therefore, policies are required to substantially apply direct employment as an alternative as part of the personal budget scheme.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 shows that direct employment of personal assistants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as highly likely when supports from various institutions were secured. Additionally, there were



significant needs for direct employment of personal assistants or family members and medical service assistants. Particularly in the survey on whether to permit direct employment of a family member, the majority (76.2%) stated: 'It should be permitted.' The reason was that even if there is a care giver, the family's assistance is still necessary.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tandards for the scope and service fee of family members permissible for direct employment.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platform for direct employment where applicants can select care services and assistants.

1 연구배경

- 본 연구는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형 구축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민간에서의 돌봄제공인력 직접고용 방안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돌봄제공인력 직접고용을 위한 인프라와 전달체계 등 세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직접고용에서의 쟁점(가족 내 허용 기준, 단가, 품질관리 및 노무관리 인프라 등) 검토
 - 당사자 대상 활동지원 직접고용에 대한 의견 및 쟁점관련 의견 질적·양적 조사
 - 전문가 대상 돌봄인력 기준, 인프라, 품질유지 방안 세부 기준을 등 자문

2 주요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0-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 개인예산제 직접고용에서의 쟁점 도출	- 문헌연구
- 국외 개인예산제 직접고용의 이용 상황과 제반 제도들에 대한 사항 분석	- 문헌연구·국외 사례 조사
- 직접고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지원사항 분석	- 질적 및 양적연구
- 실증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항 도출	- 질적연구(현장전문가 의견조사)

○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형 구축 시 쟁점이 되는 민간에서의 돌봄제공인력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확인하고 직접고용 시 쟁점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조사함.

- 당사자 및 가족 질적조사 결과, 현재의 제도상에서 활동지원사의 연계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연계가 안 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에게 특히, 개인예산제도상의 직접고용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예산제도의 직접고용을 찬성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도의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함.

○ 양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예산제 도입과 지원인력의 직접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고용 욕구 및 관련 고려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만 6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다수가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주로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받고 있었음. 주로 사회활동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중 약 30%의 응답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도 가족의 지원이 필요했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그 주된 이유로 적절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꼽았음.
- 참여자의 절반 수준이 실제 활동지원사를 1개월 이상 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음. 판정받은 활동지원 시간이 적거나 신체상태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주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활동(야외활동 및 운동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로 했음.
- 활동지원사 및 전문인력의 직접고용에 대한 의사는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전제했을 때 높게 확인됨. 가족 및 활동지원사 직접고용 및 보건의료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조사 응답자들이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 활동지원서비스 외에도 가족의 돌봄이 상시 필요한 것이



확인됨.

- 이에 원활한 지원인력의 직접고용을 위해 주로 공공영역 또는 민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가족고용을 하더라도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3 연구활용방안

○ 선진국 사례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표 20-2〉 지원 인력 및 조직

구분		독일	호주	영국	일본 ¹⁾
채용 및 근로계약 등 지원	채용 및 직접고용 정보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담당기관 • 지원기관(장애인차 여담당기관/보충적 독립참여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IA 기관 • 민간/로컬 코디네 이터 • NDIA 플레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org.uk 웹사이트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서포트센터 • 지자체
	근로계약 등 지원 상담 및 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보조인 • 세무사 등 • ※계인예산제 계획 시 관련 비용 등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IA 기관 • 민간/로컬 코디네 이터 • NDIA 플레너 • myplace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회 • Money Helper • 지역의회에 연락하 여 돈을 사용할 사람을 설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서포트센터 • 지자체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보조인 • 세무사 등 			
근로 관련 법정분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등 • 법원 • 돌봄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서 (BEIS)의 독립적인 공공기관인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기관, 파견회 사 등 • 돌봄기관 (가족 등) • 주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 등 • * myplace에 모 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조정 및 중재 서비스, 이하 ACAS) 기관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서포트센터 • 지자체

1) 샷포로시가 2010년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퍼스널 어시스턴트(PA)제도와 고용주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고용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주로 등록하는 방법과 고용주 책
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도움

구분	독일	호주	영국	일본 ¹⁾
가족고용 정도	• 가능	•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	• 예외적 인 경우만 가능 • 단,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을 PA로 고용하여 직접 지불을 받는 사례를 금지하	• 배우자 및 3촌 이내 친족 제외

○ 첫째,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직접고용을 위한 지원조직 및 인력 등 마련 필요

○ 둘째, 고용주 모델에 대한 모의적용 필요

- 일본의 고용주 모델 사례를 토대로 모의적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의적용은 직접고용에 있어서는 ‘중개기관에서 이들을 등록함으로써 중개기관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직접고용된 인력이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음.

○ 셋째, 지원 인력 고용 시 개인예산 비용 지불 필요

- 독일의 경우 일상생활 제약이 심각하고 개인예산에 대한 지원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예산보조인과 세무사가 지원하며 이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함
- 우리나라도 지원 인력을 개인이 사적으로 선택한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넷째, 직접고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자격 기준 마련 필요

- 돌봄인력에 대한 활동지원사 교육이수를 규정해야 함.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는 직접 고용 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인력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³⁾

○ 다섯째, 사설기관에서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자체 관리 및 운영 역할 강화

- 개인예산제 확대에 따라 지원인력 공급 사설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스웨덴은 사설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경우 돌봄감독기관(IVO)을 통

3)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해 해당 기관이 활동지원사 서비스 공급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조윤화 외, 2023). 우리나라 또한 중개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를 확인해야 함.

○ 여섯째, 가족 돌봄 단계적 허용 필요

-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가족돌봄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긴급돌봄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도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험이 있어 가족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임.
-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사회적 돌봄을 우선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족 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본 연구결과 가족 고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돌봄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돌봄인력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의 매칭은 어렵기 때문으로 확인됨.

○ 일곱째, 정부 주도의 구인 및 구직 및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 마련 시급

- 중개기관을 통한 직접 고용은 단순 플랫폼의 역할만 제공(현재 워크투게더 등 구인구직 플랫폼)하거나 직접고용에 특화된 플랫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고용에 특화된 플랫폼의 경우 신원보증 여부, 활동지원교육 여부, 일반돌봄 제공자, 전문적 돌봄가능자(고령장애인 건강, 차량 지원 가능 인력, 행동지원서비스 가능 인력, 간호사, 영양지원사, 특수체육지원 가능 인력, 안마, 수어 가능, 촉수어 가능 등) 등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
- 현재 인력들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서비스 이용가능성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급여 결제, 정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해 시범사업 이전에 구축되어야 함

2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Service Quality Management of Parent Consultation for Individuals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이혜경, 김성원, 서원선, 이상준, 이문현

❏ 요약

Developmental disability may be defined as a type of disability that causes the development to be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he average and involves the possibility of severe, chronic, and continued presence of the disability in physical or mental or both areas. In general,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are likely to suffer a severe sense of loss, be socially intimidated, or avoid relationships with the heart closed to othe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supportive services for parents of a child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find out ways to facilitate and improve such services, and ultimately, suggest evaluation standards for service quality management.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actual condition of supportive services for parents of a child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was examined. To present suggestions on service quality management, literature review and administrative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Additionally, the actual condition of service providers was examined in addition to the qualitative research o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1 연구배경

- 발달장애인은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칭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심석순, 남정휘, 2016).
-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 때문에 상실감이 커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따라서 부모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역량강화 상담, 가족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을 통해 가족 내 심리적 안정, 상호 신뢰와 협력 분위기 등을 위해 부모상담은 반드시 필요함.
-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비장애 가족들에 비해 훨씬 높음.
- 일반적으로 장애아를 둔 가족들은 비장애 가족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부간 이혼의 확률도 80%까지 추정된다고 보고되었음(최국환, 2016; Cottone, 2012).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형태의 상담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2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사업 제공기관 실태조사와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의 질적조사의 방법을 수행하였음.

1) 연구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님, 사업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탐색하였음.

○ 제공기관

- 제공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전문상담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단가 책정, 상담 기록하는 양식 및 기록 방식의 비효율성이 언급되었음.

○ 품질관리 평가

- 품질관리 평가에서는 부모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담자 만족도의 경우 상위기관에서 실시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본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상담의 시기, 횟수, 기간에서 내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을 제안하였고, 특히 발달장애 자녀의 생애주기의 과업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의 경우에는 양육코칭 및 교육의 비중도 중요하게 다뤄지며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담자가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필요에 따라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심리검사도구 외에 추가적인 심리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인력의 자격

- 상담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는 것과 현장 실무경력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본 사업의 서비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가 이용하는 치료센터의 선생님의 권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권유 등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직접 서비스를 찾아본 경우도 있었음.

○ 상담의 종류, 범위 등

- 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의 기간과 횟수, 시간에 대해 유연하게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발달장애자녀의 영유아기에서 학령기까지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함.
- 지역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기간이 길거나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예산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 대상을 비장애 형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자녀에게 집중된 돌봄으로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심리적 어려움, 장애형제에 대한 양가감정,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한 과도한 노력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 상담자의 양육 코칭 및 교육과 정서적 상담이 병행될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상담과 함께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지자체 지원

-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지도점검 시 어려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개선할 수 도 있으며, 품질관리 체계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다만 제공기관의 인력과 다르게 긴급 상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확대하여 이용자를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3 연구활용방안

- 2022년 10월 기준으로 365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 31.5%인 115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기관으로 승인 받은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음.
- 시도별 예탁금은 총 10억원으로 경기도가 238,97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별로 예탁금이 남거나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 부모상담서비스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며 유동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발달장애인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부모의 개별 욕구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공인력은 상담 고유업무만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업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 복무관리, 서비스 질관리, 기관 고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상담 업무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제공기관에서는 개별 온라인교육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8%로 나타나 보수교육에 대한 실시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함.
-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지원사업 이용자 확보 노력, 바우처 사업 홍보 확대, 제공인력 확대, 환경개선(물리적 접근성, 별도 상담실 마련 등),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함.



- 지원 예산(바우처 지원금액)의 확대, 이용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 제공인력 자격기준 개선(완화), 행정서류 및 문서 간소화 등의 이용가능한 대상자 확대, 기간 종료 없이 상담이 지속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VI. 이동권



22.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개선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Person-Centered Disabled Car Markings

이혜경, 이용석, 김영수, 이선화

요약

This study for improvement of person-centered disabled car markings aims to secure the mobility right and convenience of disabled persons. It includes analysis of overseas cases for the transition from automobile-centered markings to person-centered markings as well as a survey among disability communities, related institutions, and experts to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As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disability communities and expert groups, it turned out that problems included lack and difficulty in use of disabled parking space, misuse and illegal use, etc. To address such problems, person-centered disabled car markings need to be issued. Standards for parking label recipients need to be clarified with continued monitoring to prevent illegal parking in such space. As mentioned in the survey results regarding the system to issue person-centered disabled car markings, there were opinions to increase the amount of penalties and tighten regulations to prevent abuse of markings.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how to utilize disabled car markings based on the marking recipients and marking kinds as well as how to respond to abuse of disabled car markings.



1 연구배경

-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방해 금지와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관리소홀과 불법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관리·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설정, 일시적 장애 주차표지 발급, 광범위한 보행장애 기준의 검토,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표지발급 개편, 자동차표지 단순화 및 표지디자인 변경, 위조나 변조장치 마련 등을 제안(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4)하기도 함.
- 이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 중 사람중심으로의 개편의 이유는 차량중심인 경우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표지발급에 집중하게 되어 이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위법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최근에는 사람중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의 개정안이 제안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표지발급에서 사람중심의 표지발급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외사례 분석, 장애계 및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주요연구내용

1) 장애인 이동권 문제

○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문제

- 우리나라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은 교통수단인 버스, 도시철도, 항공기, 철도차량을 제외한 여객선의 경우 34.3%에 불과하며, 2019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6.2%에 지나지 않아 장애인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 장애인의 이동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없어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의 개선 이외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이동권의 개념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볼 경우, 단순히 이동성 촉진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나 장치,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성 촉진을 포함하여 다루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제

- 201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등급 구분을 없애고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사정하는 것으로 변경.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로 변경된 이후의 문제점은 재심사 대상이거나 중복장애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없다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점수가 부족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2)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현황

○ 국내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에 근거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구분.

○ 국외

- 미국 뉴욕시 장애인 주차 허가증 : NYC PPPD(Parking Perm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과 New York State Permit 등의 두 종류 발급하고 있음.
- 미국 텍사스주 장애인 주차 허가증 : 장애인 번호판(A disabled person license plate)이나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가 표기된 장애인 주차 허가증 게시.
- 호주 장애인 주차 허가증 (ACROD Parking Program) : 개인과 조직을 구분하여 발급하는 제도임. 개인의 경우 보행이 불가하거나 크게 제한되는 경우와 시각장애인이 해당하며, 조직의 경우 ACROD 개인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조직에 발급함.
- 일본 장애인 주차 허가증
 - 도치기현 사례 : 주차 허가증은 2종류로 장애인·난치병 환자 등이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녹색 이용증과 임산부·상병인 등이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있는 오렌지색 이용증임.
 - 야마구치현 사례 : 공공 시설이나 점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야마구치현 내 공통의 이용증 교부.
 - 미야자키현 사례 : 모모리 주차장 제도 운영.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한하여 이용증 교부.
 - 후쿠오카현 사례 : '후쿠오카·마고코로 주차장'으로 등록된 주차장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함.

3 주차표지 발급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

1) 주차표지 발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 83.5%, 뇌병변장애 82.9%, 시각장애

- 64.8%, 지적장애 90.0%, 자폐성장애 100.0%, 호흡기장애 100.0%, 신장장애 100.0%로 나타남.
- 운전 가능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 90.6%, 뇌병변장애 87.8%, 시각장애 46.3%, 지적장애 70.0%, 자폐성장애 85.7%, 호흡기장애 100.0%, 신장장애 100.0%로 나타남.
 - 주차 가능에서 지체장애 70.6%, 뇌병변장애 90.2%, 시각장애 37.0%, 지적장애 80.0%, 자폐성장애 85.7%, 호흡기장애 57.1%, 신장장애 100.0%임.
 - 자동차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개인용무 등 외출시 이용 30.5%, 자녀의 통학이나 치료를 위한 이동 지원 29.6%, 출퇴근용 27.2% 순임.
 - 응답자가 자동차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62.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 3~4회 이용 18.3%, 주1~2회 이용 10.8% 순임.
 - 응답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1순위 자동차 유지 비용 부담 23.5%, 2순위 공유차량 또는 렌트카 이용 시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였음에도 주차공간 이용 불가 18.3%로 가장 높음.
 - 응답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장애인콜택시, 바우처 등)이 33.3%로 가장 높았고, 버스 이용 20.7%, 도보이용 12.7%, 자동차가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함 12.2% 순임.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 표지 발급 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이나 보호자만 이용하는 부정 사용 문제가 24.6% 장애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20.3%,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 소홀 및 처벌 약함 17.9%, 차량 중심의 표지 발급으로 인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17.4% 순임.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표지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사람 중심의 표지 발급(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발급) 25.4%, 미준수 차량 단속 및 처벌 강화 24.1%,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사용 관련 제도의 홍보 강화 19.8%, 장애인(개인)과 시설이나 단체를 구분하여 표지를 발급 15.8%,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 필요 13.6% 순임.
 - 응답자의 현재 자동차 중심의 발급에서 사람중심(장애인 중심)으로 개선하게 될



-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 발급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31.0%,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 확대 16.0%, 오남용(부정사용) 모니터링 강화 15.5%, 표지 부착 방법 개선(탈부착, 소지 가능) 14.1% 순임.
 -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라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개인과 단체 사용 자동차의 표지 구분 29.6%,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 내용을 통일하여 한 번에서 제시 25.8%, 장애인(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기관(단체)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용어 구분 필요 23.0%, 개인과 단체 사용 자동차의 주차가능 범위(기준) 재설정 19.7% 순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에 대해서, ‘사람중심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발급)’으로 개선이 될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7.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16.4%,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16.2%,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13.9%,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0.6% 순임.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람중심으로 발급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 발급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
 - 복지카드와 별도의 차량 탈부착용 표지 발급 51.6%, 복지카드 내에 자동차 표지 추가 28.2%, 기존 차량에서 이용하는 하이패스 카드에 기능 추가 18.3% 순임.
 -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 오남용시 벌금 부과 기준 마련 27.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면 확대 24.9%,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에 대한 인식개선 16.4%, 보행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16.0% 순임.

2) 포커스그룹인터뷰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1차 FGI는 연구목적 및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현황, 조사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부족, 2)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문제, 3)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치 필요, 4) 사람중심 자동차주차표지 제도로 전환 필요, 5) 자동차표지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 등의 주제로 요약됨.
- 2차 FGI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문항으로 진행함. 1)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임. 2)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제, 3) 차량 중심 주차표지 발급과 미준수 차량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4) 발급대상 확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 필요 5) 발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6) 탈부착용 표지발급 방식 선호 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면 확대 및 오남용 벌금 부과 기준 마련 필요 등의 주제로 요약됨.

5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 방안

1. 주차표지 발급 대상

1) 장애인(개인)

- 먼저 현행 자동차 대상의 발급에서 사람중심,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표식을 남겨야 해서 자기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탈부착 형태로 하여야만 제도개선에 따른 올바른 사용이 가능할 것임.

2) 장애인(개인) 외 기관

- 장애인(개인) 외 기관 대상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



급하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함.

- 기관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되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

2. 주차표지 종류

- 장애인 중심으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게 될 경우, 기존의 주차가능, 주차불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즉 현행과 동일하게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3. 주차표지 개선에 따른 활용방안

1) 장애인(개인)

- 통합복지카드로 주차장 요금 결제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인증을 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 제안

2) 장애인(개인) 외 기관

- 관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식은 장애인(개인)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함.

4. 주차표지 오남용 대응

1) 주차표지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용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되, 보행상 장애로 주차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마다 주차표지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취지에 맞게 자동차 표지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2) 오남용 시 벌금 부과

- 현재 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람중심으로 전환시 표지 발급 대상자가 크게 늘게 되고, 탈부착 형태의 표지로 불법사용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3) 오남용 시 강력한 제제 조치

- 유효기간 설정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덧붙여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 2회 위반시 자동차 표지 사용 제한 등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6 연구활용방안

정책 제언

- 사람 중심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현재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에 대한 법적 기준 개정 및 용어사용의 통일이 필요함. 대상자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듯이 확대하되, 사람중심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로 개선하며 대상기준에 맞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따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이 제정되고 과태료 부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로 개선될 경우, 주차장면수 부족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법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충분히 교육하고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법 이행력을 제고하도록 해야할 것임.

- 셋째, 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함.
 - 최대 4%를 적용하더라도 42만면 정도로 대략 300만명의 장애인 사용 주차표지 발급대상자를 고려한다면 많이 부족해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또한 장애인 사용 주차표지를 통한 혜택인 주차감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카드를 활용하거나 단말기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연계하여 GPS를 통해 장애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 연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3. 장애인 이동패턴 분석을 통한 이동권 개선 연구: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A Study to Improve the Mobility Right Based on Movement Patterns of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Floating Population Data

서원선, 김하영, 김영수, 이태현

❖ 요약

Disabled persons suffer various types of mobility constraints in many different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including social activity, education activity, vocational activity, and so forth. Particularly, visually impaired and physically challenged persons experience a lot of inconvenience since no physical accessibility is secured for their mobility. Visually impaired persons experience difficulties in boarding a bus with no voice service and transferring to another subway line with no sufficient announcement. Physically challenged persons experience various types of mobility constraints in boarding a low-floor bus, moving from a subway train to the platform due to the gap.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mo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means such as bus and subway. Among 25 gu administrative units in Seoul, 4 units where the use rates of call taxi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the highest were selected (Nowon-gu, Gangseo-gu, Gwanak-gu, and Gangnam-gu)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obility in buses and subways and to presen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ach of the 4 gu units were individually investigated, particularly at bus stops and subway stations frequently used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hysically challenged persons. Additionally, to examine the accessibility of these bus stops and subway stations, the researcher also personally examined voice service systems and kerb heights of the bus stops and the gap between subway trains and the platform.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many bus stops and subway stations involved



accessibility problem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hysically challenged persons. These bus stops also needed to provide voice service and comply with height difference regulations. Subway stations needed to comply with regulations on the gap between the platform and subway trains.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lso needed to be improved accordingly. This study also analyzed major bus routes connecting districts that were frequently used by disabled persons in these 4 administrative units to check the distribution rate of low-floor buses in those bus routes, an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ncrease the distribution rate.

1 연구배경

-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7년)하였고, 이후 교통약자의 증가와 편의증진법 적용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제정하였음.
-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수립,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보행 환경 개선, 특별교통 수단 도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시도하였고 저상 버스 도입, 휠체어 탑승 설비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이 증가하였지만,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교통편의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교통수단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홍성민 외, 2022).
- 현행 교통약자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서원선 외, 2020).
- 장애유형별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정도에 대해 지체장애인 38.1%, 시각장애

인 37.8%가 어렵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타 장애유형(청각장애인 37.2%, 장루요루 장애인 36.5%, 뇌전증장애인 34.3%, 신장장애인 31.5%)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음(보건복지부, 2021)

- 이처럼 장애인은 이동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동권 보장의 미흡으로 인해 원활한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음. 이에 장애인(시각·지체장애인)의 이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유동인구데이터 및 장애인콜택시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인(시각·지체장애인)의 이동패턴을 조사하였음.
- 구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에서 시각·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4개구(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관악구)의 2022년 10월-2023년 1월 주중과 주말에 다수 장애인이 모이는 지역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방안을 모색하였음.
- 장애인 밀집도 분석은 SKT 유동인구데이터를 활용하였음. SKT 유동인구데이터는 50m 격자 간격으로 장애인이 많이 모여있는 정도를 점으로 표시하여 특정 시간 및 특정 지역에 장애인의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음. 특히 장애인콜택시데이터로는 구내 동단위만 표시되어 동단위 내의 구체적인 위치나 건물 등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SKT 유동인구데이터는 50m 격자 단위로 표시되어 보다 상세한 위치 파악이 가능함.
- 이동경로(장애인콜택시 출발지-목적지) 분석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4개구의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 간 장애인콜택시 이동경로(장애인콜택시 출발지-목적지)를 분석해 대중교통(저상버스, 지하철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유동인구데이터 분석

- 시각·지체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SKT 유동인구데이터를 가공하여 서울시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관악구 4개 구의 시각·지체장애인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같은 기간의 시각·지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공공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음.
- 서울시 4개구(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관악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시 25개구의 시각·지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구를 순위화하여 결정하였음.

〈표 23-1〉 장애유형별 서울시 4개구 주요 이동 지역

구명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노원구	7호선 노원역, 6/7호선 태릉입구역, 월계역, 하계역(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점자도서관 창동역, 중계역 위치, 노원시각장애인지회 노원역 인근,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월계역/인덕대학교 인근, 태릉입구역, 중계역, 상계중학교, 7호선 노원역, 하계역/노원을지대학교병원, 월계역/노원종합사회복지관,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하계역/노원을지대학병원
강서구	까치산, 우장공원입구교차로(강서구청 인근/한국건강관리협회 4거리), 화곡역(강서지회사무실 가양역1번 출구, 강서점자도서관)	신월중앙시장, 마곡센트레빌아파트/신방화4거리, 방화역, 까치산역,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방화3거리/방화4거리
관악구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신림동구센트레빌아파트, 봉천역(낙성대 시각장애인 IL 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신림동, 봉천동 일대, 난곡동 주공아파트 다수 거주)	신림역, 서울신림초등학교 인근, 신림프루지오1차아파트 인근, 서울대입구역, 우림시장, 신림동부센트레빌아파트 인근, 보라매병원, 승연봉일시장 인근, 서울대입구역
강남구	수서역, 삼성서울병원, 선릉역(삼성병원 헬스키퍼 직장, 수서역 임대아파트 하상복지관 일원동 안마시술소 선릉역)	신논현역 인근, 국민연금공단강남역삼지사, 서울세관사거리, 수서역, 삼성서울병원, 선릉역, 수서역

○ 장애인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실제 4개 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음.

〈표 23-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나이	주요특성
참여자1	남성	5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강서구 거주
참여자2	여성	4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노원구 거주
참여자3	남성	3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강서구 거주
참여자4	남성	5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강남구 거주
참여자5	남성	50대	시각장애인당사자, 관악구 거주
참여자6	남성	40대	지체장애인당사자, 강서구 거주
참여자7	여성	40대	지체장애인당사자, 노원구 거주
참여자8	남성	50대	지체장애인당사자, 노원구 거주
참여자9	남성	40대	지체장애인당사자, 강서구 거주
참여자10	남성	50대	지체장애인당사자, 관악구 거주

- FGI 자료 분석결과 장애인당사자들의 대중교통 이용경험 및 대중교통 이용 개선과 관련해 5개의 주요 영역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음.

〈표 23-3〉 FGI 분석결과

영역	주제
버스	(1) 주제1: 버스번호 파악의 불가 (2) 주제2: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소의 연석 단차 문제 (3) 주제3: 버스 내부의 접근성 문제
지하철	(4) 주제4: 지하철과 플랫폼 단차 문제 (5) 주제5: 지하철 안내원의 안내 부족
시각장애인복지콜 및 장애인콜택시	(6) 주제6: 복지콜/장콜 장기간 대기 (7) 주제7: 복지콜/장콜 기사의 불친절/난폭운전
바우처택시	(8) 주제8: 바우처택시 요금 부담 (9) 주제9: 바우처택시 기사의 장애 인식 부족
일반 시민들의 장애 인식	(10) 주제10: 장애인 이동 무관심



2) 시사점

- 시각장애인은 버스 탑승이 가장 어려우며 버스 탑승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지체장애인의 경우 버스정류장 단차는 15cm이 적정하며 지하철과 플랫폼 간격은 5cm이 적절함.
-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공통으로 지하철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4개구 장애인 주요 이동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접근성(저상버스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활용방안

○ 버스

- 버스번호 파악이 불가하고 정확한 버스 탑승의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의 버스 탑승시 요금 결제 편의를 위해 버스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함.
- 지체장애인을 위해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휠체어이용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 안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

- 지하철내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활용과 더불어 지하철 승강장 시간제 안전요원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역사와 시간대에 맞게 이동 및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철 역사내에서 승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4.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이동지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Accessibility to Medical Centers for Health Righ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Mobility Support

한기명, 이정은, 정광진, 이윤경

❖ 요약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hysical and financial difficulties in visits to a medical center in consumer perspectives for mobility and accessibility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in a local community to medical centers and thus to propose rational policies for substantial rights of health. To this end,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First, review of the current condition of mobility support service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t home and abroad; secon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7 individuals including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suffered difficulties in mobility to medical centers in their perspectives; and third, a survey of 15 field experts currently working at institutions related to mobility support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ervice operation, ways of improvement, etc.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pecial transportation means are still insufficient and the waiting time is too long. Besides, using such transportation means is challenging to disabled persons using bed-type wheelchairs. Second, it is difficult even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to use 911 ambulances in a non-emergency situation. Since round-trip service is not available, they should use private ambulances. Third, the research on overseas cases shows that in Japan, costs for transportation in isolated regions are compensated for; in Germany, supportive service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and in Sweden, mobility support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made available by utilizing various types of vehicles. Fourth, in-depth interviews with disabled individuals show that bedridden disabled persons are excluded from the service of special transportation means, and that its use is practically challenging for kidney disabled persons in agricultural and finishing



communities as well. Based on the findings stated above,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for bedridden disabled persons' mobility to medical centers, in a short run, it is suggested to allot budgets for mobility support so that private ambulances of Ulsan 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 can be operated at nationwid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Handover Support C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all taxi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using various types of wheelchairs including bed-type wheelchairs in addition to electric and manual wheelchairs. Third, there are various types of wheelchairs and various forms of mechanisms to fixate wheelchairs to the inside of a vehicle securely.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sts to convert ordinary vehicles into those for disabled workers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families with a bedridden disabled person also can receive the service.

1 연구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욕구를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이민경 외, 2021), 여전히 신체상태로 인한 시간이나 이동상 제약, 경제적 제약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김수진, 2021).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다양한 차별과 거부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음(이정은 외, 2020).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15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신규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나, 양적이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동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도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시에 구급차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비용급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 수준을 장애인 당사자 관점과 이동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상호분석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첫째,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지원 관련 서비스를 분석하고, 운영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둘째,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겪는 어려움을 장애인 당사자 관점과 이동지원을 경험한 관련 기관 담당자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함.
-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동지원방안 시나리오를 제안함. 이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역할, 연계 체계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이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지원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집단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역별 편차(시도, 시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운전 인력 부족, 지역 간 이동의 제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탑승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119 구급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응급 시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상 척수장애 혹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비용급 시에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어렵고, 병원 방문 시 왕복지원이 어렵고, 관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원하는 것도 불가한 상황임.
- 129 사설구급차량의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단위로 설치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함. 또한, 제한 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접이식 휠체어를 제외



한 휠체어는 별도로 수송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음.

- 그러나 119 구급차량에 비해 왕복지원이 가능하며, 119 구급대원보다 장애인 이송경험이 많고,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사와 달리 가정방문 형태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당사자 또는 가족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중증장애인은 건강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잦고, 장애특성이나 2차 장애로 인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요함.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되기도 함.
 -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이동방법과 보호자 동행, 돌봄의 수준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 가족은 신체, 정신, 경제적 돌봄 부담이 크며, 병원 이용을 위한 교통비 및 이동으로 인한 신체 및 심리적 돌봄 부담도 매우 큰 부분 중 하나임.
 - 중증장애인의 키나 몸무게 등 신체상태로 인해 활동지원사로부터 장애인 차량 개조를 요구받기도 함.
- 현장전문가 관점의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을 15명의 중증장애인의 이동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계약직이고, 운전면허나 택시운전기사로 제한됨.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
 - 울산시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콜택시 예약 접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사설구급차 이송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외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높은 상황임. 또한, 예산도 매년 35명 기준으로 약 1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음.
 - 사설구급차량 직원의 경우, 119 구급대원보다 많은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만 지급되면 주거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었음.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보임.
 - 장애인 차량 개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개발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연구개발 및 승인 등에 제한이 있음.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 제언

- 침대형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중증 외상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자차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됨.
-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 거절당하고 있으며, 높은 금액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척수장애 혹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용급 시에도 119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근 의원의 법률안을 사설 구급차량으로 변경하여 전국 광역 단위별로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 서비스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지역 내 사설구급차량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외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사설구급차량을 활용한 의료기관 이동지원서비스는 외상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주거 환경,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의 높은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의료기관 외에도 여행, 정기적인 외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횟수와 장소를 완화하고 있음.
 - 이에 현실적으로 왕복지원이 어렵고, 제한된 운영 대수를 응급 환자 지원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119 구급차량에 비해 관할 지역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사설구급차량 협약 시 이송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다양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쏘라티와 같은 높고 긴 차량을 개조하여 장애인콜택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사설구급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은 단기적인 대안에 불과하며, 접이식 휠체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으로 휠체어를 수송해와야 하는 상황임.
 - 이는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내부 이동 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공용 휠체어



를 사용해야 하는데, 장애유형별로 신체 구조나 상황이 매우 달라 해당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 자의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침대를 활용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따라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를 신고,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차량이나 사설 구급차량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스타리아(현대자동차(주))는 불가능하며,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쏘라티(현대자동차(주))를 개조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대상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비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거절되고 있는 외상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대수 증가, 다양화, 사설구급차량 이용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공급 대수를 지속적으로 부족하며, 지역별 제약이 발생함.
 - 즉, 가족 혹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신체상태와 이용 휠체어에 맞춘 장애인 차량 개조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비는 근로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외상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차량 개조 비용까지 발생하는 상황임.
 - 따라서 외상장애인의 이동지원 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 구매 비용 지원이나 차량 개조 비용 지원 등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VII. 활동지원 및 자립



25.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lf-Reliance of Disabled Persons in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y Leave Housing Facilities

서해정, 송승연, 이미영, 김문규

요약

According to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hich comprehensively specifies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disabled persons' right to be integrated into and live in the local community, not in housing facilities. In 2022 'Guidelin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emergency situations,' the UN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ansition of the paradigm of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facilities' to 'local communities, in Korea as well, 'the roadmap to support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for their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was proclaimed. Yoon Suk Yeol Government as well specified that as one of its governmental projects, it will provide disabled persons with housing and residence services for their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As such,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disabled persons' residence in a housing facility to the local community is of significanc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ir continued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there are no baseline data around the country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after they leave housing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and practical measures for disabled persons' stable and continued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disabled person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y left housing facilities.

To this end, the following analyses were implemented as part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disabled persons' self-reliance after they left housing facilities,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and so forth. Second, this



study analyz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isabled persons who left housing facilities at home and abroad. Thir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13 disabled persons living in local regions (Seoul, Incheon, Gyeonggi, Daegu, Gwangju, Busan, etc.) after leaving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urth,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ir actual condition of self-reliance and factors affecting their independent living were analyzed. Fifth, this study presents policy proposal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table and independent living in a local community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who leave housing fac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disabled persons who left housing facil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vailable self-reliance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specifical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brain lesion disord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ly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with housings for independent living and sup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dependent life support centers for disabled people at facilities and housing facilities. Fourth, various welfare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Fifth, emotional support is also necessary for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Sixth, more jobs need to be created for disabled persons to continue their independent living. Seventh, Each local community needs to increase their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pursuit of their quality of life, right of freedom, and right of option. Eighth, there need to be additional services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for external activity, self-esteem, physical and mental health, etc. Ninth,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for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Tenth, a dedicated department and the coordinating system need to be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1 연구배경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는 장애인을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 현상을 감소시키고,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짐.
- 또한 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폐쇄적 공간의 위험성을 알려줌. 2022년 3월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입소 정원의 35.6%)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대비 48.8%인 2,428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사회자립'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일반논평 5호'(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및 사회통합),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할 권리(제14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장선상에서 2022년 9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국제적 흐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2021년 한국에서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확충과 장애인의 주거권 및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보건복지부, 2021)이 발표됨.
- 거주시설에서 머물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됨.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단위에서의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현황 등의 기초자료는 부재한 상황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현황

- 202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2개소로 27,946명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음.
 - 전국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315개소로 가장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서울(252개소), 경남(98개소), 경북(93개소) 순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5,570명, 서울 3,104명, 경북 2,497명, 충북 1,875명 순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희망 욕구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서울(2009), 부산(2009), 광주(2010), 대구(2012), 인천(2012), 충북(2018), 경기(2022) 등에서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의 시설 거주인이 자립을 희망함. 장애인 거주시설 전주조사(2020)에 따르면, 의사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중 33.5%가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함.
- 거주시설 입퇴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2,332명, 퇴소한 인원은 1,541명으로 나타남.

2)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험과 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산정을 위한 인정조사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급여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따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낮 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자립지원형으로 월 40시간, 의료 및 도전적 행동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집중지원형으로 월 20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자립자금 대여와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하고 있음.
 - 자립자금 대여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성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비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서비스임.
 - 이외에 시설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로 각 지자체에서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주시설에서 퇴소 한 후 지역사회에 초기 정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3) 국내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 국내 선행연구 주요 결과

-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와서와 본격화 됨. 박숙경 외(2021; 2023)는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을 추적 조사함. 분석 결과, 지역사회통합, 자기결정, 삶의 질 향상, 문제행동 개선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광영 외(2016)는 서울, 경기 및 강원,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한 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에 어떠한 지원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그 결과 취업 여부, 주거소유 형태, 장애인편의시설,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최문경(2011)은 생활시설 퇴소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능력수준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고, 심석순 외(2011)는 성별, 결혼, 장애수용, 직원과의 관계 등이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함.

○ 국외 선행연구 주요 결과

- 국외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성과를 다루는 연구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Kim et al., 2001; Bredewold et al., 2018; McCarron et al., 2019), 정책이나 비용(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Irvin et al., 2017),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효과(Kozma, A., et al., 2009) 등으로 구분됨. 1970년대에 시작된 펜허스트 종단 연구 등에서는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자율성 및 주체성이 증가되었고, 도전적 행동 문제행동이 감소되었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시설생활 보다 비용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Conroy, 2015).

4) 문헌검토 시사점

- 첫째, 지역사회 중심인 국제적 흐름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거주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둘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강구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셋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접근 가능성의 현실적 한계로 표집 규모, 다양한 대상자 확보, 상세한 지원체계 요소 반영 등에 있어 한계점이 포착됨.
- 넷째, 국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들의 탈시설 효과성을 증명하는 실증적 근거들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실태조사

○ 조사개요

- 본 조사의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 후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또는 지원주택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임.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부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추출틀을 구성함. 최종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는 213명이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44.6%), 부산(21.1%), 대구(12.7%), 인천/경기(14.1%), 광주(7.5%)로 나타남.

○ 분석결과

- 일반현황
 - 성별은 남성이 59.2%, 여성이 40.8%로 나타남. 평균 연령은 45.12세로 나타났다으며, 50대가 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대(25.8%), 20대(16.9%) 순으로 분석됨.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45.5%), 고등학교 졸업(39.0%), 중학교 졸업(10.8%) 순으로 나타남. 장애특성 중 장애유형은 지적장애(71.4%), 뇌병변장애(18.3%), 지체장애(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정도는 전체의 98.6%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4%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타남. 전체의 95.3%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만이 수급권자가 아닌 것으로 분석됨.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무연고자(58.7%),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27.2%), 가족이 있으나 연락하지 않음(14.1%) 순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조사한 결과, 음성(77.9%), 몸짓(19.2%), 필담

(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설 퇴소 및 자립현황

- 거주시설에 처음으로 입소한 당시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10세 이상 20세 미만'(25.4%), '5세 미만'(24.4%), '5세 이상 10세 미만'(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2021년(36.6%), 2019년(32.9%), 2020년(2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2021년(36.6%), 2019년(32.9%), 2020년(2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퇴소 결정자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 8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종사자(8.5%), 먼저 퇴소한 동료/친구 등(동료 상담가 등)(1.9%) 순으로 나타남. 거주시설 퇴소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살고 싶어서(독립)'가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이 문을 닫아서'(3.8%), '친구 및 동료상담가의 권유로'(1.4%) 순으로 나타남. 거주시설에서 퇴소할 때 주로 도움을 받은 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85.4%), 거주시설(8.0%), 시청 또는 구청 등 지자체(2.3%) 순으로 나타남.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활동보조인 제외)은 평균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1명 이상 3명 미만'(50.2%), '없음(0명)'(48.4%), '3명 이상 5명 미만'(1.4%) 순으로 나타남.

- 자립지원서비스현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5.10시간으로 나타남.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문화체육바우처'(76.1%),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5.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7.1%) 순으로 높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서비스 중 주치의 제도 이용 만족도가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평균 3.49점), 장애인 일자리사업(평균 3.36점) 순으로 나타남. 낮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업재활시설, 주간활동제공기관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낮 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간활동 제공기관 이용 만족도가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교활동(평균 3.61점) 장애인자립생활센터(3.54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사회참여 현황

- 최근 일주일 동안 외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70.0%), '주 3-4



회'(20.7%), '주 1-2회'(7.5%), '거의 외출하지 않음'(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버스'(32.6%), '걸어서 혹은 휠체어로 이동'(25.2%), '장애인콜택시'(16.4%), '지하철/전철'(13.6%) 등이 높게 나타남. 최근 일주일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보기, 라디오 듣기'(35.1%), '집 주변 산책'(14.4%), '컴퓨터 또는 핸드폰(인터넷, 게임 등)'(12.4%), 휴식(9.9%), 운동하기(6.4%) 등이 높게 나타남.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혼자서'(47.4%), '활동지원사'(45.0%), '친구/동료'(7.1%) 순으로 나타남. 지난 한 달 동안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활동'(66.2%), '친목활동'(39.9%), '종교활동'(3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관계 현황

-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09명으로 나타남.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64명으로 나타남. 지난 1년 동안 만남빈도가 높은 관계를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사', '친구' 등이 높게 나타남.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3.67점, 활동지원사 평균 3.66점으로 이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코디네이터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 이용자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 이용자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 등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욕구 및 관심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로 나타남.

- 주거 현황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집에서 활동할 때 또는 이동할 때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편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7.7%로 대다수로 나타남. 거주지 주변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타남. 향후 살고 싶은 주택 점유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

원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 및 의료 현황

-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85.9%로 나타났으며,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3.13점으로 조사됨.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뇌전증(구 간질)'(10.3%), '고혈압, 저혈압'(6.6%) 순으로 나타남.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2%가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가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일주일 평균 2.10일, 하루 기준 평균 59.74분을 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한 달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1%가 해당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래진료 이용 횟수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1.98회, 응급실 이용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1.00회, 입원 횟수 및 일수의 경우 평균 1.25회, 평균 12.50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취업) 현황

- 직장생활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45.1%, 하지 않는 경우는 54.9%로 나타남.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임시근로자'(61.5%), '상용근로자'(34.4%), '일용근로자'(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근로시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근로자가 93.8%, 전일제는 6.3%로 나타남. 주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50시간으로 나타남. 직업을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종사자'(85.4%), '서비스 종사자' (13.5%), '사무 종사자'(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월 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평균 76.64만원으로 나타남. 직장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총 보수, 직무, 직장 내 환경 및 안전,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약간 만족함 이상이 90% 이상으로 나타남.

- 경제상황 현황

-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6.15만원으로 나타남. 주요 지출 생활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식료품비'(49.1%), '생필품비'(25.8%)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생활만족도 현황
 - 현재 주된 걱정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건강악화’(22.8%), ‘결혼’(15.4%), ‘일상생활 지원’(12.5%), ‘직업 및 취업’(10.8%), ‘주거’(7.9%) 등이 높게 나타남. 시설 생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지역사회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일상생활’(37.4%), ‘주거’(24.4%),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음’(16.1%) 등이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주거 지원’(28.4%), 일상생활 활동 지원’(22.3%), ‘소득 지원’(15.3%) 등이 높게 나타남.
- 재산관리 현황
 -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는 경우는 32.4%로 나타남.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28.5%), ‘장애인자립생활센터’(19.4%), ‘공공후견인’(16.7%), ‘신탁’(16.7%) 순으로 나타남.

6)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미치는 요인들

○ 분석개요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외출빈도, 삶의 만족도, 근로여부’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함.

○ 분석결과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외출빈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독립변수 중 사회적 요인 변수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여부($B=.547, p<.001$)가 외출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미취업상태에 놓인 집단에 비해 취업상태에 놓인 집단일수록 외출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삶의 만족도($B=.030, p<.05$)가 유의미하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외출빈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독립변수 중 사회적 요인 변수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출빈도($B=.995, p<.05$)가 유의미하였고, 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퇴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의 변수가 퇴소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퇴소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정신건강상태가 비우울 상태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근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독립변수 중 사회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에서는 외출빈도($\beta=1.853$, $p<.001$, $OR=6.38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시설 퇴소 장애인의 근로여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출빈도가 증가할수록,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갈 승산이 5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방안

-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에 특화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구축 필요
 - 시설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증가 필요
 - 시설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전환되고,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택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함. 추후 더 많은 시설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위해 정책적으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이 긴밀하게 협력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더불어 체험홈이 활성화 된다면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이용 경험이 증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만족한 서비스로는 ‘주치의 제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시설장애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 제공 필요**
 - 시설장애인의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을 위해 동료지원서비스, 자조모임 연계 등의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일자리 지원 확충 필요**
 - 설 퇴소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더불어 중고령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장애인 삶의 질, 자유권, 선택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충 필요**
 -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은 ‘삶의 질, 자유권, 선택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시설장애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외부활동,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지원 필요**
 - 회귀분석 결과, ‘외출 빈도,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강구 필요**
 -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가 67.6%로 분석되었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싶은 욕구’도 78%로 나타남. 이처럼 시설 퇴소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당사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자립생활 유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달체계 구축**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지자체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26.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Project to Support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서해정, 송승연, 이미영, 김문규, 전동일

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pilot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help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start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which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oadmap for support of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its main project. To this en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design were also analyzed to verify its validity.

First of all, a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examined, it was verified that the transition from facilities to local communities is an international trend and many disabled person at facilities hop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 local community, which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various local community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general public h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and their independent living. In addition, the project validity was verified as there is no similar one among existing projects, the level of welfare expenditu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relatively low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xpressed their policy intention in this regard.

To analyze the project effectiveness, the scale, expenses, and benefits of support were estim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unit price per disabled person was also examined. The estimated scale and expenses of support corresponded to existing data. The cost effectiveness was also verified as the project proved to have the following effects: promotion of social activity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expansion of their social network, improvement of their health conditi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mprovement, reduction of challenging behaviors, promotion of human rights, socio-economic effects of their economic activity, and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and self-determination.

For self-evaluation of the project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AHP committee of 10 members was formed including various experts, field practitioners, and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Project to Support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review by this committee, the score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nalysis was 87.3 points on average, that of the project design appropriateness 87.8 on average, and the cost effectiveness 88.7 points on average respectively. The total score of these 3 items was 263.8 points on averag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while this project reflects the government's intention and direction of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specific plans for the process of screening and care service provision are necessary for the project to operate effectively. For this project to be helpful and effective for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ilot project performance more thoroughly and to verify and plan other aspects for its wider application.

1 연구배경

- 최근 거주시설 소규모화, 자립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거주 인원 감소 추세('17년 30,693명 → '21년 28,565명)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약 24,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함.
- 시설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본인응답)이 가능한 6,035명 중 33.5%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자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등)이 26.1%, 살 집(주택)이 18.9%, 일자리가 10.3% 순으로 나타남.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일자리·건강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이 22년부터 진행되고 있음(시범사업기간 '22~'24년).

-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5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됨.
-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타당성, 정책의 구체적 목적 및 목표, 양적/질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환경 분석, 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시행하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및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사전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지님. 예비 타당성 조사의 구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경제사회환경 분석함.
 - 이 분석을 통해 사업을 둘러싼 경제사회 여건을 분석하고,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을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업의 수혜대상, 추진방법, 전달체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비용-효과성 분석을 하고자 함.
 -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 후, 이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함.
 - 넷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표를 구성 후, 자체평가 위원단을 통해 사업 적정성에 대한 종합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개요

- 최근 한국은 거주시설 소규모화, 자립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거주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며 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및 중증장애 대상 전문시설 중심으로 증가함.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이루어짐. 조사 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 중 33.5%(2,021명)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기반이 됨.
- 이에 따라 따라서 정부는 2021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로드맵)에서 향후 3년에 걸쳐 시범사업('22~'24년)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을 계획함. 이후 2025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
-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 시범사업 1년차(2022년)는 '도입기'로 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통합서비스 지원 및 연계 등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 10개 지자체에서 추진함.
- 1년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1,055건의 자립조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03명을 발굴했으며 그 중 29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함.
- 2년차 시범사업은 1년차 도입기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기'로 자립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모니터링하고, 본 사업을 대비해 자립의사 및 수요조사, 서비스 추가 발굴, 지원 모형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자립지원 체계 구축과 자립한 인원들의 만족도가 있음.
 - 1년차 시범사업에서 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원활한 업무협의로 임대주택 확보했으며, 지역 자체 예산 등으로 전세 주택을 확보함.
 - 시설장애인 부모상담 및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며 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지역 기업 연계 및 통합관리서비스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등을 구축함. 자립완료자의 집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설치하고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IoT 센서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담인력이 사업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체계를 구축함.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를 통해 실시된 중단조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이주) 완료 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중단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만족 이상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2)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경제·사회·환경 분석

○ 경제사회 여건분석

- 유럽·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원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거주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1,535개가 있으며, 여기서 생활하는 장애인 약 2만 8천명임(지적, 중증장애인 시설이 전체 거주인의 76.2%를 차지함).
- 시설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31,406명으로 최고점을 나타냄. 이후 점차 감소하였지만 2021년 28,565명으로 아직까지 급격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시설보호정책을 탈피하여,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음.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일자·건강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설거주인에 대한 여러 현황조사 결과, 당사자의 자립욕구가 높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시설종사자들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사업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2021년도 사회보장 인식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문제 관련 유사사업의 검토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과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임.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적집단(이용자)과 서비스 내용을 비교함.
- 장애인거주시설은 표적대상에 있어서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표적육구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주거를 선택하는데 제한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과 차별점이 존재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이라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거전환 지원시 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본 사업이 지니고 있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발전의 수준에서 본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총 38개 국가 중 한국은 34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2년 OECD 국가들의 공공 사회 지출 평균은 21.1%인 것에 비해 한국은 14.8%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2017년 기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6%임. OECD 평균은 1.9%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0%)와 터키(0.5%)에 이은 밑에서 세 번째 순위로 확인됨. 미국(1.3%)과 2배, 헝가리(1.9%)와 3배, 스페인(2.4%)과는 4배 차이가 남.
- 국가발전의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국가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더불어 국제적으로 장애인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UN CRPD(장애인권리 협약), CRPD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함. UN CRPD에서 핵심적인 제19조(지역사회와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CRPD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시설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최근 CRPD위원회에서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취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과 유사하게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 시범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향상, 자유권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서 시설장애인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성이 확인됨.
-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등은 대략 2015년부터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 사

업을 추진해 옴. 이러한 지자체의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였을 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의 제도화를 시행해야하는 근거가 마련됨.

- 윤석열정부 12대 국정과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등 공식적으로 천명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살펴본 결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정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사회 영향 분석

- 본 사업을 통해 어떤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함. 국내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됨으로 인해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e.g., 사회통합, 생산성, 자기결정, 삶의 질, 행동의 개선 등)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들이 확인됨. 국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된 이후 당사자에게는 도전적 행동 감소, 삶의 만족감 증가, 지역사회 참여 향상 등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가족에게도 행복감 및 만족감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확인됨.
-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사업은 시설장애인에게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적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충분한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의견수렴과 갈등회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토론회, 심포지움, 학술대회 등 시설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검토함.
- 앞선 기존의 의견수렴 과정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설장애인의 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들이 제기되었고, 이는 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줌.

○ 재정의 지속가능성

- 본 사업과 대비하였을 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여되는 예산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와 비교하였을 때,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은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점차 감소될 수 있음

-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국제사회의 흐름 및 전반적 여건 등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업의 재원 조달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3)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

○ 사업목표

- 본 사업의 기대효과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 유지 지원을 위한 자립경로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임.
- 본 시범사업의 수혜대상은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차년도 시범사업 대상(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입소대기자) 외에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확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가장애인(발달장애인 중심)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함.

○ 수혜대상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요추정은 '탈시설 로드맵'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시범사업 기간내에는 매년 200명이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이 진행시에는 2025년~2029년 740명, 2030년~2034년 610명, 2035년~2039년 500명, 2040년 450명이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마무리하고, 2041년에는 24시간 요양·돌봄이 필요한 22백명만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시범사업 기간내 매년 200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의사소통 가능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전환을 원하는 장애인은 약2,000명으로 나타났고 10%에 해당되는 200명을 시범사업의 매년 목표로 설정함.
- 시설장애인 24,133명 중 자립희망 대상자는 최소 1,930명(8%)~ 최대 2,172명(9%)으로 2,000명으로 추정됨.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시범사업 목표와 유사하므로 매년 200명씩 자립을 지원하되 세부적으로는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비율은 8:2가 되도록 함.

○ 사업추진 방법

- 현재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꼭 필요한 전환 지원체계, 주택지원, 자립정착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지원, 개개인별 맞춤형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건강검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 보조기기 구입 지원, 야간 및 응급대응, 권리옹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등 현 시범사업 모형에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범사업의 운영체계는 광역 및 기초단체, 수행기관, 제공기관, 자립지원위원회로 구성됨.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에서는 시설장애인 자립조사 및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이용자 선정 및 개별전환지원, 개인별자립지원 및 모니터링을 진행함.
-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규제의 근거가 되는 운영지침,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 사업전반의 관리감독과 평가를 담당함.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지정, 관리·감독하며,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자립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전달체계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훈련,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전문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기관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지역 내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예.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기타 사회복지 법인 등)이 해당 되고, 지역 내 거주시설 관계 형성 및 유지,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 내 자립조사 및 발굴 및 연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운영주체로써 주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설 퇴소 장애인 등의 자립서비스 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예.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대상자 주거전환 지원, 개인별 전환계획 및 지원계획에 따른 개별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자원 발굴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함.

3)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규모와 비용과 편익 항목, 장애인 1인당 서비스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 결과를 토대로 의사소통 가능한 장애인(약 6,000여명) 중 자립욕구가 있다고 한 장애인은 약 2,000명 수준으로 전체 시설장애인 24,214명 중 8.3%로 추정함.
- 복지부 내부 자료에 근거하여 시설 퇴소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입소인원 3,522명 대비 퇴소인원은 2,591명으로 입소인원이 퇴소인원보다 931명 많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입소자와 퇴소자 수가 거의 비슷해지다가 2021년부터 퇴소자 수가 입소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퇴소 사유가 자립인 경우가 200명 이상으로 파악됨.
- 자립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파악을 위해 본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약 2년 기간 동안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조사 3,378명 중 자립희망자는 410명으로 전체 조사인원의 12%¹⁾를 차지함. 이를 근거로 보면 시설장애인의 자립희망자는 시설 인원의 약 8~12%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현재 지원규모 추정에서 시설장애인 중 신규 자립지원대상자가 매년 200명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은 2020년 전수조사 시 자립희망 의사를 확실히 밝힌 이들의 규모가 2,000여명이었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장애인의 약 10% 정도는 자립희망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험적인 근거로 추정함.
- 2030년 이후 시설 기능은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설 내 자립지원 대상 장애인은 점차 감소하여 2040년 이후부터는 그 지원규모가 정체될 것이고, 이에 반해 본 사업의 대상에서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추측됨.

○ 본 시범사업 '25년 600명 기준 본 예산 120억원으로 연간 지원규모 장애인 600명(신규 200명 포함), 전담인력 150명(장애인 4명당 전담인력 1명)으로 전담인력

1) 이들 중 대상자 선정은 173명(5.1%), 자립희망자 대비 42%로

1인당 비용은 70백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시범사업관련 자립완료자를 대상으로 종단연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활동지원 추가지원(약 95시간)과 주거지원서비스(운영비 포함)만으로 계산하면, 장애인 1인당 약 45백만원으로 기존 자료들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또한 본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준으로 실제 지원되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 역시 장애인 1인당 간접비용은 27백만원, 직접지원비용은 23백만으로 총 5천만원으로 기존 자료 결과치와 거의 같음.
- 본 사업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시범사업 과정 중 서비스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함. 이를 위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실시한 종단조사와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데이터, 2022년 기초조사 데이터를 활용함.
-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는 총 8가지로 구분함.
 - 첫 번째 변화는 '시설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증진'임.
 - 분석결과, 1차 종단조사에서는 1주일에 평균 6.82시간 여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종단조사에서는 1주일에 평균 11.95시간 여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됨. 즉 1차년도에 비해 5.13시간 여가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번째 기대효과로는 시설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것임.
 - 시간이 지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자립 후 알게 된 사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종단조사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평균이 약 3.25명이었으나, 2차 종단조사에는 4.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되는 것임.
 - '전반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이전(시설 거주) 평균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 참여 이후 3.19점으로 분석됨.
 - 네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심리, 정서적 효과'임.
 - 우울감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차년도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12.8%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에서 7.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다섯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임.
 - 도전적 행동 여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 공격행동, 자해행동'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섯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인권 증진'임.



- 2차 종단조사에서 시범사업 참여 이전(시설 거주)에는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6.1%였으며, 시범사업 참여 이후(지역사회 거주)에는 이 경험이 있는 비율이 8.1%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곱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경제활동 증진을 통한 직·간접적 경제사회적 효과'임.
 - 평균 한 달 생활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이전(시설 거주)에는 평균 약 19.36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사업 참여 이후(지역사회 거주)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이 약 64.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차 종단조사와 2차 종단조사에 모두 참여한 39명의 한 달 생활비 지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차년도에서는 평균 약 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서는 평균 약 79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전수조사와 2차 종단조사에 모두 참여한 장애인을 분석한 결과, 2020 전수조사 근로참여 비율이 23.9%로 나타났지만, 2차 종단조사의 경우 34.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기초조사와 2차 종단조사에 모두 응답한 장애인을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 22년 기초조사에 월 평균 수입은 약 49.9만원으로 나타남. 지역사회로 전환된 이후 진행된 2차 종단조사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약 135.5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덟 번째 기대효과는 시설장애인의 '삶의 질 및 자기결정권 향상'임.
 - 1차 종단조사 삶의 만족도 평균은 57.48점으로 나타남. 2차 종단조사에서는 평균이 60.76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3.28점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1차 종단조사 자율성 평균은 67.23점으로 나타난 반면, 2차 종단조사에서는 평균이 69.97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1년 사이 2.74점 자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4) 자체평가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현장실천가, 이해관계자 등 총 10인을 AHP 위원으로 구성함.

-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평균 87.3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평균 87.8점, 비용-효과성은 평균 88.7점으로 나왔으며, 3개 항목에 대한 총점 평균은 263.8점으로 확인됨. 평가자별 종합의견을 취합한 결과 A(원안 추진) 9명, C(사업 재기획) 1명으로 종합 집계 '원안 추진'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설장애인을 지원하려는 의지와 방향을 담고 있으나, 사업이 작동하여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대상 선정 과정 및 돌봄 서비스 제공과정에 세부적인 수행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엄밀하게 검토하고 확대 방향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로 검증 및 계획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설장애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추진이 필요함.
- 추후 사업 진행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먼저,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부분임.
 -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비율,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두 번째 사항은 '사업 예산 추계'와 관련된 것임. 특히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4:1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됨.
- 이러한 평가의견들을 참고하여,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연구활용방안

1)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부 사업의 타당성 제시를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가의 발전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혜대상과 사업추진 방법, 전달체계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기대효과와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향후 본 사업 진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27.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1차년도)

A Study on Monitoring and Modeling of the Pilot Projec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1st Year)

서해정, 박경애, 박광옥, 이호선, 김현지, 조윤화, 한기명, 송승연, 이미영, 신미화, 김문규,
유병우, 박시은

❖ 요약

This study includes research 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ilot project monitoring at home and abroad, longitudinal analysis, and pattern research. To monitor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ilot project, the input-process-production-achievement steps of the logic model were examined. For longitudinal analysis on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survey conducted among 41 individuals who left facilities in the 1st year.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 longitudinal stud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inally, the modeling subjects were selected and procedures were improved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advisory meetings with experts specialized in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Two supportive models— independence support model and focused support model—are suggested.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s and major policy issues of the 1st year pilot project are as follows: establish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system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work division among metropolitan, basic,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trengthe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policy supplementation in various ways to facilitate cooperation of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curing residences and supportiv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structuring the independent living service system for their relocation and initial settlement; detailed plans for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and additional governmental supports.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발적 퇴소희망자부터 단계적으로 거주전환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1차년도 사업으로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2년 1차년도에는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지역 상황과 장애 특성 유형에 맞는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실시되었던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1차년도 운영('22. 7~'23. 3)과 성과 및 보완점을 분석하는 것임. 특히 거주전환 이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들의 변화를 통해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회의, 문헌조사, 모니터링, 중단조사, 심층인터뷰,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지역자원조사 병행함.
- 첫째,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정부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중단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문항 참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모형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지원모형 재구성하였음.
- 둘째,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시범사업 초기 운영의 핵심요소를 근거로 모니터링 지표 개발하였고,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2차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향 제안하였음.

- 셋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조사를 위해 종단연구 계획 수립 및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1차년도 종단연구(양적조사 41명, 질적조사 19명) 실시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실천적 함의 제시하였음.
- 넷째,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모형’을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 종사자 대상 포커스그룹인 터뷰,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2회,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였음. 시범사업 진행 상황 등에 기반하여 시설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탐색하여 지원 설계 제안, 적절한 지원방향과 지원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1) 이론적 배경

- 정부의 시범사업은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전국화를 대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모니터링 분석 틀을 구성하였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종단연구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전반적인 변화, 자립생활 성과를 파악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조사문항을 기본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문장을 수정하여 41명의 거주전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시범사업에서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시 지원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따라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자립지원모형에 따른 차이점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원모형을 재구성하고, 모형에 따른 대상구분, 운영주체, 지원인력, 지원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모형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연구한 강정배 외(2020)¹⁾ 연구결과를 검토함. 운영주체별로 모델을 구성하였으

1) 강정배 외 (2020).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며 지자체주도형, 민관협력형, 공공전담기관 주도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2)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의 목적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 지자체 공모, 대상자 특성별 모형 마련,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 지원의 추진방향을 가짐
- 시범사업 운영모형은 지자체 주도형과 민관협력형으로 구분하며, 지자체 주도형은 자치단체가 직접 자립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협력형은 지자체가 시범사업 운영 총괄, 수행기관 선정하여 시범사업 위탁,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거주전환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함.
- 시범사업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정책 총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지침 마련, 교육 개발, 평가 및 모형 개발, 종단연구 등), 광역기초단체는 시범사업 총괄, 시범사업 홍보 및 거주시설 협조체계 구축, 사업시행 지자체 관외지역 시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협조, 주거확보 추진,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 운영, 시범사업 직접 운영 및 수행기관 위탁, 위탁기관 관리, 감독,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및 거주시설 자립조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제공기관은 자립대상자 발굴 및 지원, 복지제도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함.
- 시범사업 대상자는 거주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서비스 필요도 기준에 따라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자립조사 및 이용자 선정, 개별전환 지원, 개별자립지원서비스이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는 소득보장, 일자리 활동, 일상생활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식사지원, 사회참여활동, 보건의료 지원, 권익옹호지원, 야간 등 긴급상황 대응 등임.

○ 1차년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표 27-1〉 모니터링 분석틀 및 지표

투입	(자립지원 체계 구축) 운영 주체 적절성, 예산 적절성, 수행기관 적절성, 전담인력 수
과정	(자립조사 및 대상자 발굴) 지자체 협조체계, 거주시설 참여, 자립조사 및 부모상담 건수 (대상자 선정)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수, 대상자 선정 여부 (자립지원 사업홍보)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건수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여부
산출	(지역상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조성) 조례 제정 및 개정 여부, 전담조직 신설 여부, 주택확보 수(노력)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 서비스 지원) 자립장애인 수, 자립지원서비스(자원) 수
성과	(자립 경로 조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노력, 자립지원서비스(자원) 연계, 자립장애인 만족도(시설생활/자립생활)

- (투입)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지원체계 마련(장애인복지과 내 전담팀 신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 신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 우선 대상자 선정 검토) 및 거주시설과의 협력 등이 이루어짐.
 - 단, 지자체별 주택확보 여건, 수행기관 선정 여부, 전담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등에 따라 계획된 시범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과정) 자립과정에서 거주시설과의 협력 및 연계는 대상자 발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거주시설 참여 비율은 서산, 전주, 경주, 제주는 1차 자립조사는 전수조사하였고, 그 외 지역도 관내 거주시설의 50% 이상이 참여함.
- (산출)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특성 및 입주수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 2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동 사업을 운영할 지자체를 선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 10개 지역에서 203명의 자립희망자 발굴, 지역별 자립지원위원회의를 통해 41명이 지역사회로 거주 전환, 주택확보는 전체 79호이었고, 관련 조례가 제정(서울, 광주)되었고, 기존의 조례를 개정(전주, 화순)함.
 -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로 나타났고, 기초 대비 광역자치단체가 주택확보, 자립 희망 대상자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지역자원 연계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성과) 1차년도 시범사업(도입기)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경로 구축
 -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 선정, 전담 인력 배치, 주거확보 등의 지원체계는 구축되었음.
 - 다만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시기 상 자립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대상자의 선호도와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3) 시범사업 종단연구 결과

○ 시범사업 종단연구 설계

- 종단연구의 목적은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생활을 이전한 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장애인의 권리 차원과 거주시설에서의 삶과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함.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종단연구 설계를 위하여 2022년 6월 기준으로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를 시작한 장애인을 코호트로 설정하여 추적조사하는 모형인 고정패널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함.

○ 지역사회 자립생활 조사(양적연구) 주요 결과

〈표 27-2〉 종단연구(양적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대상	자립을 희망한 장애인 중,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41명 대상 조사
연구내용	일반현황, 자립현황,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지역사회 사회참여 현황, 사회관계, 주거, 건강 및 의료, 고용(취업),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재산관리 등 11개의 항목을 조사

- (연령·장애) 평균 39.1세, 발달장애 31명(75.6%), 심한 장애인 41명(100%)
- (만족도) 자기결정, 외부활동, 음식, 사생활 만족도 등 문항에서 ‘ 좋음 ’ 80% 이상
- (주거) 방음, 난방, 화재 발생 대비시설, 방법 등에 거의 모두 만족(95% 이상)
- (지역사회) 생활환경(체육시설, 편의점 등), 대중교통, 의료서비스(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여건에 80% 이상 만족
- (일자리) 16명(39%) 취업(장애인 일자리 81%, 직업재활시설 19%), 1주 평균

근로 16.7시간

- (수입·지출) 월 평균 수입 135만원*, 평균 지출 80만원**

*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일자리 월급 등

** 식비 33.9%, 주거관리비(전기, 수도, 냉·난방 등) 25.0%, 의료 16.1% 등

- (외출, 사회관계) 매일 외출 35명(85.4%), 자립 이후 새롭게 친해진 관계 2.4명 (시범사업 참여 전 평균 0.9명)

○ 지역사회 자립생활 조사(질적연구) 주요 결과

- 시범사업 대상 장애인 5명, 지원자(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등) 14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거주지역은 2개의 광역시에 해당함. 장애인 당사자는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였으며,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소요됨.

〈표 27-3〉 질적조사 결과

구분	장애인	지원자
주거·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깨끗한, 혼자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매우 만족함 • 마트, 식당 등의 가까운 인프라에 만족함 • 이웃과 마주칠, 불편한 일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신만의 집, 물건을 취향대로 구입 가능에 만족함 • 주거를 고를 수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움 • 주거환경에 만족(운동, 산책, 상가 등) • 낙후된 지역은 아님, 언덕 위치로 신체장애인의 주변 이용에는 어려움
일자리·주간 활동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직장 유지 중이거나 취업을 위하여 건강관리 중임 • 하고 싶은 운동, 취미활동을 하여 만족함 • 고령으로 인한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외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할 경우 별도의 평일 활동은 비선호 • 일부 일자리 욕구에도 연계 어려움 • 복지기관 통한 주간활동 진행 및 계획 • 일부 사설기관 통한 활동 연계 • 부모의 욕구에 맞춘 다수의 활동 연계 • 활동지원시간 부족 등으로 주말 주간활동의 어려움, 개별지원이 아닌 주간활동서비스 차선의 선택
지원 인력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과 잘 지내며 만족함 • 지원인력의 위험성 판단에 따른 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에 따른 지원에 이용자 만족함 • 가능한 이용자 스스로 해보도록 함 • 친근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함 • 이용자가 자신의 생각 전달에 막힘없어 소통이 잘 됨 • 활동지원사와의 초기 성격 차이로 갈등 • 활동지원사의 말에 따른 불필요한 소비, 의존 또는 눈치 보는 경향 • 야간지원 부족 시 용변처리, 폭식 등 어려움



구분	장애인	지원자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거주시설에서의 관계 유지 • 동건물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과 어울림 • 복지관 이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맺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거주시설의 이용자 및 시설장애인과 의 관계 중심 • 제공자 중심의 관계 •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표현함
소득 지원과 재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음 • -퇴직 예정으로 소득 감소 걱정 • 지적장애인 대부분 신탁관리 • -신탁에 대한 비설명과 개입에 불만 • 일부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돈관리 경험 후 결정 예정 • 지체장애인 자신이 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신탁관리 또는 제공기관에서 지원 • 일부 생각할 시간을 줌 • 가능한 경우 자신이 돈 관리
자립 후 생활과 장애인 (자신)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외출제한이 없어 자유로워 스트 레스 감소함 • 확실적 식단이 아닌 당뇨에 맞춘 음식으로 건강해짐 • 안 싸워도 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음 • 마음대로 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 말이 많아짐 •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해보고 느낌, 적극 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생활, 핸드폰 사용제한 없음 • 1:1 활동지원 서비스 매칭 • 표정이 밝아지고, 놀람이 줄고 짜증이 줄고 편안해짐 • 해보려는 의지가 보임 • 자신감이 증가함, 주체적 생활 • 이용자의 선호가 명확해짐, 고집스러운 면 도 보임
자립 결정 당시의 기대와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외출 • 거주시설에 비해 소득지원 증가 • 한번 나가서 또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 혼자 있을 때 해코지나 사기 등 걱정 •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걱정 	
자립에 대한 만족도 (걱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만큼 좋음 • 너무 조용한 것, 사람들이랑 대화가 감소 함, 밤에 혼자 있는 것 • 그래도 여기가 나음, 다른 장애인에게도 권 유함(하고 싶음) • 힘든 면도 있어서 선불리 권하긴 어려움 • 걱정 없음, 아직 계획 없음 • 돈의 가치, 사기예방 등 금전교육 필요 	

○ 중단연구 조사표 재구성

〈표 27-4〉 조사영역의 신·구 대조표

조사 영역	
변경 전(사전조사)	변경 후(본조사용)
〈PART A〉 일반현황	〈PART A〉 일반현황
〈PART B〉 자립현황	〈PART B〉 자립 전환 현황
〈PART C〉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PART C〉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PART D〉 지역사회 사회참여 현황	〈PART D〉 지역사회 사회참여 현황
〈PART E〉 사회관계	〈PART E〉 사회관계
〈PART F〉 주거	〈PART F〉 주거
〈PART G〉 건강 및 의료	〈PART G〉 건강 및 의료
〈PART H〉 고용(취업)	〈PART H〉 고용(취업)
〈PART I〉 경제상황	〈PART I〉 경제상황 및 재산관리
〈PART J〉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PART J〉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PART K〉 재산관리	〈PART K〉 재산관리

4) 모형개발

〈표 27-5〉 모형개발 방법

초점집단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종사자 총 4명(총 1회) • 모형개발 시 고려해야 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방향, 정책대상자, 지원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자원 등
지역자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지자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자원개발 및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자 7명 대상 • 자산기반 개념에 따른 지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강점 자원조사 • 자원조사지 작성 후 비대면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장애인 지원 관련 전문가(관련 기관, 지자체 관계자, 학계) 총 5명 대상(총 2회) • (1차) 지원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반적 의견 조사(예: 지원 방향, 정책대상자, 지원 방법,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등) • (2차) 지원모형 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보완의견 수렴

○ 자립지원형은 공공 및 민간일자리 참여 등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이며,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연계를 통해 일정 소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집중지원형은 간헐적 돌봄서비스, 전문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며, 개인의 욕구에 따라 낮 활동, 보호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표 27-6〉 모형별 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대상		• 일자리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한 장애인	• 지역사회 정착 초기 적응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대상자 발굴		• 자립지원 관련 정보제공 • 욕구조사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 준비 단계	주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 당사자 계약에 따른 1인1가구, 주거비용 자부담 원칙 • 주거환경개선비 (1인 6백만 원)	
	자립정착금	• (지자체 사업) 자립정착금 지원 (5백만~15백만 원 수준)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및 공공신탁제도, 재무관리 교육 지원 등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등	자립지원 인력	• 지역별 장애인 4인당 1인 기준으로 배치(지자체별 추가배치 가능) •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시간~480시간 지원)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시간~100시간 내외) • 시범사업 별도 지원 (4명당 지원기준) ▶ 자립지원형(3명) : (기준) 월 20시간 → (확대) 월 40시간 ▶ 집중지원형(1명) : (기준) 월 150시간 → (확대) 월 200시간	
	주간활동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등)	
	일자리 참여	•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 (본인 희망 시) 직업 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 참여 신청 시 선발 우대(가점 10점)
	보건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건강검진비 1인 40만 원 • 보조기기 구매 지원 1인 30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방문 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주민 조직활동 등 민간사업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야간 및 긴급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 사업 	

3 정책방안

1) 정책방안

- 지자체 역할 분담 및 강화 필요
 - ▲ 광역단위 지자체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주거확보 등의 역할 수행, ▲ 민관협력형 지자체는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등 점검, ▲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가능하여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활용
- 대상자 발굴과 시설접근 강화를 위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구체적으로 실시
 - ▲ 시설 내 자립전담조직 신설, ▲ 지역사회 자립생활센터와 일대일 연계프로그램, ▲ 단기자립생활체험 프로그램 확대, ▲ 시설 소규모화 계획 이행 등
- 거주시설의 협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보완 필요
 - ▲ 거주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1차년도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의 종사자 고용 유지'가 추가됨)
- 장애인 주택확보 필요
 - ▲ 보건복지부, 지자체, LH지역본부와 주택운영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 법적 근거 마련, ▲ 시스템화(사회적 경제 주택 공모 및 선정, 주택 운영관리 등), ▲ 공공임대주택에 결합 된 주거지원서비스
- 거주전환 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 시설장애인 대상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 등의 단기체험 필요, ▲ 시설장애인의 거주전환 및 초기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 자립지원 모형 중 집중지원형 대상자의 세분화 필요
 - ▲ 24시간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상시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등 고려



○ 중앙정부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 ▲ 자립 초기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공공일자리 등 공적서비스 제도권 내에서의 시설장애인의 포지션 확대

2) 개선방안

○ 2차년도(2023년) 모니터링은 투입의 요소로 살펴본 인력, 예산 집행 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계량화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비교평가, 지역별 비교평가, 장애인 당사자의 변화 파악 필요함.

○ 2차년도(2023년)에는 자립지원 모형개발을 위해 자립지원 모형에 따른 대상자의 욕구별 서비스 지원 여부, 지역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검증이 필요함.

- 2차년도에 추가된 학대피해 쉼터와 단기거주시설 대상자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등을 도출을 통해 대상자별 지원모형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복지 인프라 또는 자원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모형 제안도 필요함.

○ 1차년도(2022년)에 자립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귀납적으로 내용분석하고, 시설거주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분류함으로써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8.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erson Support System for Mentally Challenged Persons' Daily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조윤화, 배진영, 이지호, 윤삼호, 오윤지, 김미령

요약

The lack of services to assist social activities of mentally challenged persons is a serious social issue. In fact, mentally challenged persons receive less support than other types of disabled persons. While mentally challenged persons may seem to suffer less physical and cognitive constraints, they are in significant need of emotional support and interest as well as family support. This study aims to derive ways to reorganize the existing system to support disabled persons' social activity for mor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challenged persons. Particular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spect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comprehensive questionnaire of the service support system. To this end, overseas cases were first examined, and in-depth and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support practitioners and mentally challenged persons to analyze their service experiences and actual conditions. In addition,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opinions and thoughts of disabled persons regarding the service questionnaire and new services, based on which, long-term alternatives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the use rate of activity support services was low and the use time was mostly limited. Among users, 39.3% stated that the service time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the survey on aspects of support services to be improved shows that there was high need for daytime activity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86.3% agreed on the need to expand support services. Major needs included support for housekeeping activity (45.0%) and support for social activity (32.5%). Particularly among overseas cases, evaluation items of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Japan focused on mental disability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behavioral disability group included various items of



mental disability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In France, human service mainly for mentally challenged persons has been strengthened by revising the law in 2023. In reflection of above-stated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o add indexes in three areas to the comprehensive questionnaire of the service support system: emotional aspects, thinking aspects, and relational aspects of mentally challenged persons.

1 연구배경

-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함.
 - 현행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은 정신장애에 맞지 않고, 급여량도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됨.
 - 해당 문제는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평가 지표와 제도적 한계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며, 정신장애인은 지적 및 발달 장애인에 비해 지원이 더 부족함.
-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이 비교적 적어 보이지만,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가족의 지원 욕구 높은 편임.
 - 현재의 서비스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함.
-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특히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조사 결과

○ 연구방법

- 첫째, 활동지원서비스 개념과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등 분석함.
- 둘째,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일본 및 프랑스) 검토 통하여 우리나라 활동지원서비스 개선방향과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개선사항 분석함.
- 셋째,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주체와 주변인인 당사자, 가족, 활동지원사 등의 다층적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및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경험과 실태를 분석함.
- 넷째, 양적 연구를 실시하여 서비스 인정 조사표와 신규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생각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함.
- 다섯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개선안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양적조사 결과

-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필요도는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지원 필요도는 장애인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음.
- 일부 활동에서는 높은 지원 필요가 나타나며, 특히 고령 정신장애인과 20대 이하 집단에서 지원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장애인은 장애전체 평균에 비해 외출 빈도가 낮고, 통근 또는 통학 등 사회활동 참여는 저조하나, 병원 및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 외출 활동은 활발하며,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 없이 외출이 어려워짐. 따라서 활동지원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시사됨.

○ 질적조사 결과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 당사자는 신체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응용적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 위생관리, 적절한 의복 입기, 약물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함.
- 스스로 이동하거나 간단한 기구부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구매행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
- 정신과적 증상이나 인지·행동적 어려움으로 혼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회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인지행동 영역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 환청, 환시, 돌발행동, 주의력 산만함,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남.
- 이러한 어려움으로 정신장애인은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고립되거나 학대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활동지원사는 영양관리, 위생관리, 적절한 의복 착용을 지원하는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특성 관련된 지원도 제공하고 있었음.
- 감각 과민/둔감, 인지행동 어려움으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체건강 관리와 운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었음.
- 이동지원, 동행, 금융 및 행정업무, 금전 관리, 구매 지원, 기기 조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지원에 힘쓰고 있었음.
- 특히,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여 야외 활동을 촉진하고 대화를 통한 소통을 도모하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의사 표현을 지원하고 갈등 및 복잡한 상황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음.

2) 시사점

○ 양적 및 질적조사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를 원하며,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희망.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는 지속적 관찰과 정서적 지원이 선호됨.
- 활동지원서비스 개편방안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남.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자기돌봄서비스

에 대한 수요도 존재함.

○ 선진국 사례

- 일본의 장애인 지원구분 평가항목은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에 특화되어 있으며, 행동장애 그룹에는 다양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에 특화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달리 한국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ADL, IADL 등의 항목에 대응하고 있지만,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프랑스는 2023년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 중심의 인적 서비스를 강화하였음. 특히 행동조절, 스트레스 조절 등을 포함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음.
-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정신적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방안

○ 첫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가점 지표 추가 필요.

- 정신장애인이 수급하는 활동지원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으며 활동지원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 활동지원사가 담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임.
- 또한 현재의 서비스종합조사표 체계는 정신장애인의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8개 항목(인지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정서적 측면과 사고적 측면, 관계적 측면의 3가지 영역에서 추가 지표를 제안함.



〈표 28-1〉 주요 제안 지표

구분		항목
수단적 일상생활		전화사용
		물건사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이용
인지항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환각·망상
		조울상태
		문제행동
		공격행동
		자해행동
		집단생활부적응
가점지표	수단적 일상생활	대화하기
		수면조절하기
	정신장애 특성 지표	(정서)과도한 공허감 및 불안감
		(사고)지나친 염려와 중단되지 않은 사고(혼란스러움)
		(사고)피해적·거부적 생각
		(관계) 타인과의 관계맺기의 두려움
		(관계) 대인 불안·긴장 및 이해하기 어려움

○ 둘째, 정신장애 관련 활동지원사 교육 필요

-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배치가 어렵고, 활동지원사들이 서비스 제공에 거부감을 느끼며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별도 교육 부재와 관련 있음
- 급성기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선임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서비스 급여확대와 가산수당 고려가 필요함

29.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과정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 연구

A Study o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Residence Relocation Process for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송승연, 이미영, 김문규

요약

In reflection of recent changes in needs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roadmap to support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for their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in 2021.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pecified as part of its major government projects (No. 47) the plan to provide disabled persons with housing and residence services for their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Such governmental policies indicate that supporting reloc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will go along with a series of supportive policies to 'change' such facilities as well. Regarding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the 'Pilot Projec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is in progress. 'The Consulting Project for Transition from Housing Facil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e Local Community' also was once conducted. The main goal of consulting projects is to promote 'changing existing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cess of changing 3 residence facilities with the goal of relocation to the local community as part of the 'consulting project for facility conver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policy plans to stably implement 'the roadmap to support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for their self-reliance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promote housing facilities' cooperation with and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o support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long run.

Specifically,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First, it investigates the



concept of facility conversion and barriers to the conversion process. Second, it analyzes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cases related to conversion of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it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conversion among domestic housing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urth,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3 facilities that have continued conversion.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regions selected for the 2nd year pilot project and the case of Gunsan which was selected as the executing organization. Fifth,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promote transition from housing facilities to local community residence service provider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as below: First, a foundation for facility conversion needs to be established by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main project' of the Pilot Project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succession and transition of employment among facility workers. Fourth, education and training are necessary for transition of facility workers. Fifth, policy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help disabled persons at facilities live a stable, independent life after their relocation into the local community. Sixth, various exit strategies need to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conversion of existing facilities. Seven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users' sense of commitment and facilities' autonomy for facility conversion. Eigh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local community so that facilities and corporations are motivated to participate voluntarily.

1 연구배경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 욕구 변화와 대규모시설 운영의 한계로 인해 정부는 2021년 8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함. 로드맵에 의하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이라 명시되어 있음. 즉,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이슈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에 있어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전국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거주시설 변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음. 분석결과,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은 ‘(매우)필요하다’ 비율이 8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로드맵에서 언급된 시설 변화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임. 이에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사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아니라 장애인만이 모여 사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의 변환’이라 할 수 있음.
- 시설 변환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측면도 존재함. 종사자, 당사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시설 변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설 전환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중심 기관으로 변환을 추구해온 3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2차년도 시범사업 신규 지역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군산 지역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안정적 이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현존하는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시설변환의 개념

- ‘장애인거주시설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기존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국내에서 시설변환은 서울시 2차 탈시설 추진 계획에서 최초로 사용된 바 있으며, ‘시설변환’이란 탈시설 적극 추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은 시설변환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2가지를 예시로 제시함. 첫 번째는 일상생활동작(ADL), 자해·타해 등 인지행동, 의료적 필요 등 24



시간 전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한해 ‘전문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임.

-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시설변환 원칙은 없지만, 김현승 외(2019)는 시설변환의 기본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첫째, 시설 장애인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둘째, 시설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셋째, 시설변환의 대상은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포함되어야 함. 넷째, 시설변환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다섯째, 기존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창출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함. 여섯째, 시설변환은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최대 3년 이내) 내에 완료되어야 함. 일곱째, 신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야 함.

2) 시설 변환 관련 해외사례

- 최근 유럽 국가들의 시설 변환 및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황을 파악함. 크로아티아는 지속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을 진행하여,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거주시설의 변환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체코의 경우 장애인 정책을 ‘시설보호모델’에서 ‘지역사회기반지원모델’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시설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덴마크는 자체적으로 탈시설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같은 거주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스토니아는 시설변환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이후 케어 빌리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대다수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그룹홈에서 주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됨.
 - 프랑스의 경우 현재 대다수 시설이 폐쇄되고 집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MAS(전문주택)으로 변환된 것으로 나타남.
 - 아일랜드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확립한 국가로 현재 거의 모든 시설장애인이 자립한 것으로 확인되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집단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몰타의 경우 시설변환 과정에서 기존 시설이 ‘커뮤니티센터(소규모시설)’로 변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스웨덴의 경우 대다수의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개인지원(활동지원)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중증 및 심각한 발달장애와 같이 복합적인 의존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그룹홈과 같은 ‘숙박과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경우 대형 거주시설과 유사한 대형정신의료기관이 폐쇄되면서, 지역사회정신건강체계가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된 것으로 나타남. 트리에스테에 위치했던 산지오반니 정신의료시설이 폐쇄된 이후 물리적 공간은 ‘장미공원, 극장, 공연장, 레스토랑’ 등으로 변환한 것으로 확인됨.

3) 시설 변환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사례

○ 시설변환과 관련되어 진행된 국내 주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유동철 외(2018)는 기존 시설 변환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감액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기본재산 처분 절차의 개선, 법인세 감면을 위한 혜택, 해산을 선택하는 법인을 위한 법제 개선, 시설직원의 고용보호 방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 법제 마련, 불필요한 기존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법제 마련 등을 제시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을 연구한 김현승 외(2019)는 기존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던 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에 초점을 두고 시설단위로 접근하여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서해정 외(2022)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해 시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파악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도출함. 또한 시설 변환 모형에 따른 수요인원을 추정해 비용추계 분석을 통해 시설 변환과 관련하여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도출함.

○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도 사례는 다음과 같음. 먼저 거주시설 인강원의 경



우 2020년 11월 서울시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변환 사업 타당성 연구 진행, 실행방안 컨설팅 착수, 지역사회 지원주택으로 이전 및 고용전환(지원주택 1차 입주)을 진행함. 대구 청암재단은 거주시설 폐지에 따른 기능전환 사업으로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의 낮생활지원센터 신규사업(이용시설 '청암낮생활지원센터')을 시작하였고, 지역사회에 법인 체험홈 4개소로 확대 운영함. 2021년 3월 이사회를 통해 2025년말까지 대구시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통해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거주시설을 폐지하기로 결의함.

4)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현황

-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현황을 위해 로드맵(2021) 일환으로 시작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사업을 검토함. 컨설팅사업은 2022년 4개 거주시설((해맑은마음터(서울), 평화의집(부산), 더숨99지원센터(전북), 메종드로제(충남))을 대상으로 시작됨. 1차년도 컨설팅사업에서는 3가지 영역(법무, 노무, 시설(건축))으로 컨설팅 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법무영역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며, 노무 영역 컨설팅을 위해 노무사의 자문을 받음. 시설(건축) 영역 컨설팅을 위해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자문을 받아서 진행함. 2차년도 컨설팅 사업은 3개 기관(더숨99지원센터, 평화의 집, 해맑은마음터)이 보다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더숨99지원센터는 주거전환사업 및 재가장애인 사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평화의 집의 경우 체험홈 등 지역사회 내 서비스 단기 체험에 초점을 둬. 해맑은 마음터의 경우 체험홈 및 IL센터 연계서비스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컨설팅에 참여한 시설 중 군산에 위치한 더숨99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변환을 도모함. 실제 많은 이용자가 시설 밖(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음. '거주장애인 보호 중심'에서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모델은 탈시설 로드맵에 의거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유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사료됨. 본 연구에서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3개 시설 중 군산 사례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2021년 발표된 로드맵 이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됨. 2차년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가 새로운 시범사업 진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수행기관으로 기존에 장애인거주시설인 더숨99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세상이 선정되었고, 실질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나눔세상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군산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센터'를 새롭게 구축함. 시범사업 17개 지역 중 최초로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변환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5) 질적연구

- 본 질적연구의 목적은 시설변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 및 인식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설 변환 과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 과정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과 요구되는 정책적·실천적 함의 등을 도출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질문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변환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가?'임. 이를 위해 시설변환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함.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성과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군산형 모델 제시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존하는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총 7그룹, 15명을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수행함. 분석결과 5가지 상위범주 및 19개 하위범주가 도출됨. 첫 번째 상위범주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변환 원동력'으로 나타남. 시설변환 과정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니고 있는 철학 및 이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설의 특성(철학, 이념, 방향성, 미션, 가치 등)은 시설변환과 밀접한 고용 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변환 과정에서 시설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으로 드러남. 두 번째 상위범주는 '시설에서 주거서비스제공기관 변환 과정에서의 강점'으로 분석됨. 시설이 지역사회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의 부드러운 지역사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음. 또한 지역사회 내 타 장애인거주시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형성하는데에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더불어 시설장애인 주거전환 과정에서 시설종사



자의 높은 활용 가능성이 나타남. 세 번째 상위범주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변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임. 먼저 시설종사자의 고용전환(고용승계)을 위한 적절한 인건비 보장이 필요함이 나타남. 더불어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제공기관 변환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직무 및 역할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설서비스와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의 차이점이 드러났으며,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이 나타남. 더불어 변환 과정에서 시설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타 장애인거주시설 및 보호자들과의 협력이 있어서 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됨. 네 번째 상위범주는 ‘시설변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경험’으로 나타남. 당사자들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지닌 장점에 대해 언급했으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시설이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되는 것은 시설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드러남. 다섯 번째 상위범주는 ‘시설변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실천적 대안들’로 나타남. 우선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중요한 이슈로 드러났으며, 시설변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남. 또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시설변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함이 제시됨.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방안

○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한 시설 변환 근거 마련 필요

- 연구결과, 시설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시설 변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법안에서는 시설변환의 법적 정의가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시설변환을 위해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의 명확한 정의, 기능,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사례의 홈링크(HomeLink, 주거전환 팀)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장애인의 주거지 확인 및 제공 과정을 지원함.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전담인력의 주요 업무를 참고할 수 있음. 자립 이전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관련하여 ‘자립조사, 개별전환지원 계획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사전지원 서비스 연계, 퇴소절차지원, 입주 준비’ 등의 업무들이 포함된다. 자립 이후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관련하여 ‘주택 입주 지원,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 정착지원’ 등의 업무들이 포함됨.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종료될 것이 아니라, 본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현재 시설변환에서 중요한 장벽으로 드러난 낮은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본사업 전환 이후 시설입소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도화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연구결과, 시설변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로 ‘종사자 관련 이슈들’이 드러남. 변환 과정에서 거주시설 역할 및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시설에서 근무하던 종사자의 직장이 지역사회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전환 혹은 고용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변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연구결과, 고용전환(고용승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고용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인건비 보장으로 나타남. 고용전환 과정에서 인건비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본 연구를 통해 시설변환 과정에서 시설종사자의 고용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연속적 지원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의 역량을 시설장애인 전환과정 및 자립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종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시설에서 존재했던 종사자와 장애인의 권력관계가 지역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종사자 고용전환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지원 및 권익옹호서비스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설종사자 전환 교육 및 훈련 지원 필요

- 본 연구결과 기존 시설 종사자의 고용전환은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역할 및 직무에 대한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함이 제시됨. 시설에서의 종사자 업무는 안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만, 시범사업 수행기관(지역사회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보다 새롭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음. 이는 특히 정교화 된 매뉴얼과 프로토콜에 익숙한 종사자 입장에서는 더욱 낮설 수 있음.
- 이처럼 시설변환에 따른 종사자 고용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인권기반, 사람중심’이라는 철학 및 가치에 기반한 교육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이후 안정적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

- 연구결과, 오랜 기간 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된 이후 생활환경 및 공간의 변화, 시설화가 미친 영향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이 나타남. 이 과정에서 시설종사자가 적극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에서 머물다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로 전환된 장애인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요구됨. 하나의 정책적 대안은 시범사업 참여자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우선권(우선순위)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존 시설들의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

- 연구결과, 시설 변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기존 시설 건물 및 공간의 활용 방안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설 변환 과정에서 공간, 부지, 건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출구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출구전략을 위한 대안으로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음. 첫 번째는 기존

시설을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임.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로드맵(2021)에서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과 연결됨.

- 두 번째는 24시간 상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집중형 전문기관으로 변환되는 것임. 로드맵(2021)에서도 대다수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가운데, 여전히 24시간 상시돌봄과 간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향후 상시적으로 전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전문주거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경우 거주시설 전환 중 하나로 ‘중증 외상장애, 의료연계 및 집중 행동교정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추진’이 명시되어 있음.
- 세 번째 출구전략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변환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거주시설 전환 모델 중 하나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제시하고 있음. 이 경우 기존 시설 건물 및 부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환할 수 있음.
- 네 번째 출구전략은 기존의 시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원주택(혹은 케어주택)으로 변환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김포 석암메테스 다요양원이 폐쇄된 공간에 새롭게 구축되는 장애인 자립지원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임. 시설 변환 과정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하나의 타당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시설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몇 가지 우려할 사항들도 존재함. 유럽국가들의 시설변환에 검토하였을 때, 여전히 재시설화(re-institutionalisation) 및 변형된 시설화(trans-institutionalization)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설변환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혹은 ‘시설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이라는 개념의 연속선상이기에 출구전략으로 제시되는 대안들이 ‘시설화’의 속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통합 및 독립적 삶 보장’이라는 속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시설변환 촉진을 위한 이용자 책임성 강화 및 시설 법인 자율성 강화 필요

- 시설변환에 있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시설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시설들의 과도한 책임주의를 덜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과도한 보호가 아닌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는 힘, 실패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설 및 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체험 기회 제공 필요

- 본 연구결과, 시설 및 법인이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변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됨. 시범사업 참여 이전부터 추진했던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체험 사업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 지속적 지역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 형성된 시설의 특성은 종사자의 고용 전환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이 적극적으로 입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변환과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 및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점진적 과정에서 시설장애인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

VIII. 편의



30.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Current Conditions of Installed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of 2023

안성준, 김인순, 이주형, 윤영삼, 임은정,
김태훈, 박서현, 박지영A, 강병곤, 김나현, 최혜은 박지영B

요약

The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installed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Factual Survey)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and Article 4 (Contents and Procedures of Factual Survey, etc.) of the same Act. The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installed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convenient facilities at locations where such facilities are obligator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ways to manage such convenient facilities efficiently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mobility and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The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installed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conducted for every 5 years since its initiation in 1998. Survey results are reported in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In 2023, the 6th survey was conducted, 5 years after the 5th survey in 2018. In principle, this survey is conducted on the entire facilities where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obligatory and includes buildings and parks whose purposes of use were altered or those that were constructed (new construction, expansion, and reconstruc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on April 11, 1998. (It is not allowed to selectively include or exclude certain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urvey in 2023, the installation rate was 89.2%, and the rate of



proper installation was 79.2%. In 2023, 190,991 building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and 6,440,413 convenient facilities in these buildings were examin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efforts will be put forth to promote proper installation and proper inspection (conformity check, etc.) of convenient facilities and to improve supportive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Such continued effor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persons to spaces and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1 조사 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의거하여 실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이 되는 2023년에 실시하는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전체 시설에 대해 전수로 실시하는 조사임.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수로 하도록 하고 있음.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여 조사를 추진함.

- 첫째, 조사 대상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시설 전체로 함.
 - 둘째, 조사 결과는 편의시설의 종류별, 건물용도별, 지역별,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지자체의 편의시설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넷째, 이용자 및 수요자 측면의 이용 수준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편의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조사 내용 및 결과 정보의 DB화를 통해 공공정보의 활용성 향상을 도모함.
- 이 조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편의시설 관리에 기여하며,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보의 제공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 및 지역의 편의시설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및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 아울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을 기대함.

2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2023 현황조사 결과: 설치율 89.2%, 적정설치율: 79.2%
(2018년 현황조사 결과: 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

○ 편의시설 종류별·용도별·주체별 설치 현황

-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의 분석 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며, 분석 대상 편의시설의 수는 6,440,413개임.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높은 시설은 관광휴게시설(R), 운동시설(J), 자동차관련 시설(N), 의료시설(F)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원(T), 제1종 근린생활시설(A), 노유자시설(H), 방송통신시설(O), 수련시설(I), 기숙사(V) 순으로 나타남.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큰 시설은 교정시설(P), 방송통신시설(O)과 기숙사(V), 노유자시설(H) 순으로 나타남.
- 공공 성격 대상 건물수는 9,891개소, 설치 기준 항목 수는 594,430개로 설치율은 85.3%, 적정 설치율은 73.5%로 나타났으며, 민간시설의 대상건물 수는 181,100개소, 설치 기준 항목 수는 5,845,983개로 설치율은 89.6%, 적정 설치율은 79.8%로 나타남.
- 특히, 위생시설에서 공공 성격 시설이 민간 성격 시설에 비해 적정 설치율이 7%p 정도 낮게 나타나 공공 성격 시설에서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안내시설의 경우 공공이 민간 대비 설치율이 7.7%p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임.

〈표 30-1〉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 대분류 항목별

(단위: 개, %, %p)

구 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대상건물	기준 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설치-적정차이
매개시설	190,991	2,153,933	2,011,613	93.4%	1,812,782	84.2%	9.2%p
내부시설	190,991	2,858,498	2,549,814	89.2%	2,273,371	79.5%	9.7%p
위생시설	190,991	1,109,576	942,438	84.9%	817,632	73.7%	11.3%p
안내시설	190,991	212,829	156,938	73.7%	121,658	57.2%	16.6%p
기타시설	190,991	80,304	69,730	86.8%	60,444	75.3%	11.6%p
비치용품	190,991	25,273	13,363	52.9%	13,363	52.9%	0.0%p
계	190,991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10.0%p
A	39,490	1,093,733	940,527	86.0%	828,618	75.8%	10.2%p
B	16,910	318,018	280,497	88.2%	253,430	79.7%	8.5%p
C	1,669	108,993	98,602	90.5%	88,470	81.2%	9.3%p
D	4,586	123,996	111,862	90.2%	99,826	80.5%	9.7%p
E	1,504	75,857	68,584	90.4%	61,358	80.9%	9.5%p
F	2,619	202,971	187,048	92.2%	168,367	83.0%	9.2%p

구 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대상건물	기준 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설치-적정차이
G	13,240	849,633	772,834	91.0%	685,629	80.7%	10.3%p
H	17,968	837,708	727,696	86.9%	637,968	76.2%	10.7%p
I	588	38,143	33,966	89.0%	29,938	78.5%	10.5%p
J	1,075	31,072	28,904	93.0%	26,983	86.8%	6.2%p
K	13,987	760,783	687,850	90.4%	609,636	80.1%	10.3%p
L	2,170	105,803	94,988	89.8%	84,444	79.8%	10.0%p
M	4,850	193,409	171,360	88.6%	156,740	81.0%	7.6%p
N	3,353	30,590	28,632	93.6%	26,124	85.4%	8.2%p
O	76	4,576	4,071	89.0%	3,578	78.2%	10.8%p
P	10	535	485	90.7%	422	78.9%	11.8%p
Q	135	4,644	4,166	89.7%	3,787	81.5%	8.2%p
R	191	8,409	7,980	94.9%	7,339	87.3%	7.6%p
S	292	19,031	16,716	87.8%	14,702	77.3%	10.5%p
T	2,488	53,777	42,298	78.7%	37,955	70.6%	8.1%p
U	63,194	1,548,422	1,407,681	90.9%	1,250,048	80.7%	10.2%p
V	596	30,310	27,149	89.6%	23,888	78.8%	10.8%p
계	190,991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10.0%p
공공	9,891	594,430	506,879	85.3%	436,863	73.5%	11.8%p
민간	181,100	5,845,983	5,237,017	89.6%	4,662,387	79.8%	9.8%p
계	190,991	2,153,933	2,011,613	89.2%	1,812,782	79.2%	10.0%p

A:1종 근린생활시설 B:2종 근린생활시설 C:문화·집회시설 D:종교시설 E:판매시설 F:의료시설
G:교육연구시설 H:노유자시설 I:수련시설 J:운동시설 K:업무시설 L:숙박시설 M:공장 N:자동차관련시설
O:방송통신시설 P:교정시설 Q:묘지관련시설 R:관광휴게시설 S:장례식장 T:공원 U:공동주택 V:기숙사

공공: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K1, K3, K4, K5, K6, P1
민간: A1, A2, A3, A4, A14, A15, A16, A17, B1, B2, B3, B4, C1, C2, C3, C4, C5, D1, E1, F1, F2, F3, G1, G2, G3, G4, G5, G6, G7, G8, G9, H1, H2, H3, H4, H5, I1, I2, J1, J2, K2, L1, L2, M1, N1, N2, O1, O2, Q1, Q2, R1, R2, S1, T1, T2, U1, U2, U3, U4, V1

○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시도별 설치율의 전체적인 경향은 80~90%대, 적정설치율은 70~80%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7~13%p를 나타내고 있음.
- 설치대상 항목 수는 대상 건물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172,564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시(747,930개)로 나타남.



- 설치대상 항목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53,897개)이며 다음으로 울산시(92,885개)로써 두 지역 모두 10만개 이하의 항목 수로 파악됨.
- 17개 시·도 중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93.7%)이며 이어서 서울시(92.1%), 경기도(91.2%) 순으로 나타남.
- 설치율의 평균인 89.2% 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90.6%), 인천시(90.3%), 부산시(90.1%), 대전시(90.1%), 대구시(90.0%), 광주시(90.0%)의 9개 시도로 나타났으며, 주로 도시 지역이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6.7%)이며, 서울시(84.0%), 경기도(82.7%) 순으로 나타남.
- 적정 설치율의 평균인 79.2%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울산시(82.6%), 대전시(81.6%), 대구시(81.2%), 부산시(79.4%)로써 7개 시도로 나타남.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7.0%p)이며, 울산시(7.9%p), 대전시(8.5%p) 순으로 나타남.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차이의 평균인 10.0%p보다 적은 지역은 세종시, 울산시, 대전시, 서울시(8.0%p), 경기도(8.5%p), 대구시(8.8%p)의 6개 시도로 나타남.

〈표 30-2〉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 시도별 현황

구 분	대상건물	기준 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설치-적정차이
서울	29,957	812,487	747,930	92.1%	682,738	84.0%	8.0%p
부산	14,545	440,244	396,768	90.1%	349,422	79.4%	10.8%p
대구	6,923	263,653	237,186	90.0%	214,106	81.2%	8.8%p
인천	11,302	358,048	323,222	90.3%	282,107	78.8%	11.5%p
광주	6,471	227,541	203,779	89.6%	178,692	78.5%	11.0%p
대전	3,513	134,611	121,277	90.0%	109,774	81.6%	8.5%p
울산	2,396	92,885	84,107	90.6%	76,757	82.6%	7.9%p
세종	1,386	57,530	53,897	93.7%	49,854	86.7%	7.0%p
경기	40,575	1,286,189	1,172,564	91.2%	1,063,908	82.7%	8.5%p
강원	7,556	288,648	245,749	85.1%	213,159	73.9%	11.3%p

구 분	대상건물	기준 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설치-적정차이
충북	6,637	231,005	203,961	88.3%	179,874	77.9%	10.4%p
충남	9,511	343,658	303,847	88.4%	269,117	78.3%	10.1%p
전북	10,129	391,752	341,557	87.2%	294,994	75.3%	11.9%p
전남	9,348	361,499	305,110	84.4%	258,609	71.5%	12.9%p
경북	12,646	468,721	406,321	86.7%	359,225	76.6%	10.1%p
경남	13,335	523,647	456,515	87.2%	393,964	75.2%	12.0%p
제주	4,761	158,295	140,106	88.5%	122,950	77.7%	10.8%p
계	190,991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10.0%p

2)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율이라는 양적 증가와 적정설치율이라는 질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비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설치유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의 항목별 조사 결과에서 매개시설의 경우 93.4%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적정 설치율도 84.2%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설로의 접근성과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정책은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의 항목별 조사 결과 중 내부시설의 경우 설치율은 89.2%로 나타났고 적정설치율은 79.5%로 나타나 전체 조사결과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계단의 경우 주요 피난 경로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설치 유도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위생시설의 경우 설치율은 84.9%, 적정설치율은 73.7%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미흡하게 나타났고,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14.1%p, 적정설치율은 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치율의 증가에 비해 적정설치율의 증가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 안내시설의 경우 설치율은 73.7%, 적정설치율은 57.2%로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났고,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2.6%p, 적정설치율은 3.2%p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기타시설의 경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평균보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모두 양호하게 증가



(11.5%p, 7.3%p)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치용품의 경우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결과를 보면 특광역시가 더 높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시설의 유형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은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시설 이용에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됨.
-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결과를 통해 민간 주체의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공공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공공이 민간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공공과 민간의 시설주체 구분은 건축물 용도상 공공 성격인 경우 공공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 용도는 민간으로 분류하였음. 민간으로 분류한 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공공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공공 운영주체인 학교, 도서관 등) 등 운영 주체가 공공인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공공과 민간의 시설 주체 구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용도상으로만 구분한 것은 건축물별로 건축주와 시설주를 공공 또는 민간 등과 같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조사의 한계에 기인한 것임.

3 연구활용방안

1) 정책 방안

-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는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의 유도과 적합한 검사(적합성 확인 업무 등), 지자체별 지원 정책 등과 같은 개선 노력을 통해 개선될 것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향후 장애인 등의 지역 사회 내 공간 및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함.

- 편의시설 설치 및 확인 업무는 전문성, 통일성, 일관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인증, 종사자의 전문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중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수직과 수평의 이동 등)는 어느 정도의 높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한 반면, 부가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시설 및 피난·경보 시설 등은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 및 건축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현장에서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문손잡이, 작업대 하부공간, 위생 설비 등)이 다수 목격되었고, 적정설치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제품의 범주가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한 제품 관련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현행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에 설치 원칙과 세부 기준이 혼재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활용시 항목별로 모호성과 지나친 구체성에 따른 경직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원칙 중심의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 등은 고시나 표준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각 항목별 연관성을 갖는 건축 및 소방 등 주요 참조 기준은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편, 현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실제 편의시설 설치 현황 결과가 한국의 접근성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의 접근성 수준의 실제적인 파악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설치율 보다 적정설치율을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의 대표 값으로 정책의 주요 활용 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개념과 기준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위해 그 개념과 기준이 발전 및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준 개발(시청각 중복, 장루/요루, 성인용기저귀 교환 가능 화장실, 동반자 동행 이용 가능 화장실, 음환경 및 빛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의 BF인증 확대 방안 연구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A Study on Wider Application of BF Certification to Life-friendly Facilities (large-scale outlet, department store, movie theater, etc.) for Disabled Persons'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김인순, 이영환, 이규일, 허명, 김광일, 김윤희, 윤고운

❖ 요약

Convenient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building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in 1998, but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persons to such convenient facilities is low in reality.¹⁾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convenient facilities that are necessary for existing buildings such as large-scale outlet, movie theater, and department store to obtain the BF Certificate. This study also examines actual expenses of installation and expenses estimated right from the step of design.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make known the benefits of BF certification for all, not only for certain facilities, and contribute to its perception in the general society.

To address this problem, the government-authorized 'barrier-free life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to comprehensively assess each building's accessibility improvement by removing obstacles, etc.

However, the BF certification is obligatory only to certain buildings newly construct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Many disabled persons request to expand the scope of certification and include private buildings so that life-friendly facilities such as large-scale outlets and movie theaters also can obtain the BF Certificate for disabled persons' cultural life.

1) Percentage of properly installed convenient facilities (74.8%), 2018 complet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1 연구배경

-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공공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큰 폭으로 설치율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체감하는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설 접근성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 자발적 참여제도로 시행된 BF인증제도는 일부 공공기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할 뿐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201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인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모두가 인증을 받으며 인증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한정²⁾되어 있으며, 민간시설(건축물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임.³⁾
-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장애인당사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실생활과 연계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인증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2021년 12월 4일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의무시설의 범위가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일부 공공성이 강한 민간⁴⁾부분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장애인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⁵⁾(마트, 문화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경우에도 인증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형마트와 장애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영화관 등의 건축물이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 대상 건축물이 민간으

2) 2015년 7.29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민간건축물 교부건수는 2019.12.31. 기준으로 전체 교부건수의 5.5%(333개소)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 증축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 생활밀착형 시설이라 함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상점 등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말하며,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영화관 등)로 정의하고자 함

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기존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의 건축물에 BF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분석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과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어 계획된 비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BF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통하여 BF인증제도가 제한된 일부의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1) BF인증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추정공사비산출

- BF인증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
 -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를 의미함.
 - 백화점은 대규모 점포 중 현대적 판매시설을 갖추고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를 의미함.
 - 영화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됨.
 - 본 연구에서 BF인증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는 영화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시설(제3조 관련)'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영화관으로 한정함.
- BF인증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을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의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대상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분류하는 작업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함.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모든 시군구 총 시설 수는 257,886개소이며, 1차



주용도(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로 분류 함.

- 2차 작업으로는 면적을 구분하였으며, 명칭과 주소, 세부 용도 등을 검증.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브랜드의 시설 수를 전수 조사하여 작성함.
-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영화관은 456개소, 대형마트는 일반형과 창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형은 502개소, 창고형은 42개소이다. 백화점은 85개소로 분류함.
- 이에 따른 전체 대상 시설의 수는 1,085개소임.

〈표 31-1〉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의 시설 현황

구분	대상 시설 수					합 계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타	456
	199	143	110		4	
대형마트 (일반형)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기타	502
	132	104	132	77	57	
대형마트 (창고형)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메가마트			42
	21	18	3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기타	85
	16	32	13	4	20	
합 계						1,085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BF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등편의법의 준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하여 추정공사비를 각 공정별, 항목별로 추정함.
-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BF인증 취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14,416,104원으로 산출되었음.
- 영화관의 경우 BF인증 취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8,908,356원으로 산출됨.
-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추정공사비가 산출된 구간은 다음과 같음
- 내부시설로 나타났는데 전체 공사비의 44.9%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이어서 기타시설이 21.8%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안내데스크와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비인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이용자가 계단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인증

- 으로 인한 추가 설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대형마트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 비율을 보인 항목은 안내시설이었는데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준수로 인해 BF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증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영화관에서도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은 내부 시설이었으며, 위생시설과 안내시설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표 31-2〉 BF인증 편의시설 추가 공사비 및 비율

편의시설의 종류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사비	비율	공사비	비율
1. 매개시설	992,451	6.9%	992,451	11.4%
2. 내부시설	6,474,452	44.9%	4,885,072	54.6%
3. 위생시설	1,224,378	8.5%	-	-
4. 안내시설	949,212	6.6%	-	-
5. 기타시설	3,139,811	21.8%	3,030,833	34.0%
6. 기타설비	1,635,800	11.3%	-	-
합계	14,416,104	100%	8,908,356	100%

- 전국의 대형마트 544개소 및 백화점 85개소, 영화관 456개소가 BF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총공사비용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1-3〉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의 BF인증 공사비 산정

구분	시설 수(개소)	개별 시설 공사비	전국 시설 총 공사비
대형마트 (일반형 및 창고형)	544	13,066,104원	7,107,960,576원
백화점	85	14,416,104원	1,225,368,840원
영화관	456	8,908,356원	4,062,210,336원
합 계	1,085	-	12,395,539,752원



- 조사대상 시설인 백화점의 경우 BF인증 취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14,416,10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대형마트는 장애인용카트의 비치에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비용 1,350,000원을 제외한 13,066,104원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함.
- 영화관의 경우 BF인증 취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8,908,356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 이에 따라 대형마트 544개소의 BF인증 취득을 위한 총 공사비는 약 7,107,960천원, 백화점 85개소의 총 공사비는 약 1,225,368천원, 영화관 456개소의 총 공사비는 4,062,210천원으로 추정됨.

2) 비용효과 분석

- 각 시설별 공사비, 운영비 등의 현금유출과 추가 영업이익의 현금유입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작성하고, 수익성 지수법(Profitability Index, PI),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적용하여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
- 각 시설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대형마트의 현금흐름 분석 결과, 공사 후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누적 순이익은 95,000천원이고, 손익분기점은 운영 후 3년으로 추정되었음.
- 백화점의 현금흐름 분석 결과, 공사 후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누적 순이익은 32,683천원이고, 손익분기점은 운영 후 5년으로 추정됨.
- 영화관의 현금흐름 분석 결과, 공사 후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누적 순이익은 10,183천원이고, 손익분기점은 운영 후 9년으로 추정되었다. 영화관의 손익분기점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원인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이 16~24% 수준으로 적어 방문객 추가 소비금액에 대한 이익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대형마트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PI 3.30, NPV 95,000천원, IRR 48.2%, 손익분기점 운영 후 3년으로 추정되었고, 백화점은 PI 1.33, NPV 32,683천원, IRR 24.2%, 손익분기점 운영 후 5년이고, 영화관은 PI 1.36, NPV 10,183천원, IRR 13.9%, 손익분기점 운영 후 9년으로서 모두 사업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표 31-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PI	NPV (천원)	IRR (%)	손익분기점
대형마트	3.30	95,000	48.2	운영 후 3년
백화점	1.33	32,683	24.2	운영 후 5년
영화관	1.36	10,183	13.9	운영 후 9년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의 인증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외에 인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편의시설의 공사비를 추정하고, BF인증을 받아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민간 시설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였음.
- 비용추계를 통한 인증 대상건축물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인증지표의 항목별 소요비용을 추계하였으나 대상시설별 조사를 표본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건축물의 입지에 따른 추가비용은 제한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음.
- 조사결과, 비용추계를 통한 용도별 추정 공사비는 최저 8,000천원에서 최고 14,000천원이었으며, 단기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여 기존 대상 시설의 BF인증을 추진할 경우 대형마트 544개소의 BF인증 취득을 위한 총 공사비는 약 7,107,960천원, 백화점 85개소의 총 공사비는 약 1,225,368천원, 영화관 456개소의 총 공사비는 4,062,210천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민간)의 인증 의무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에 맞춰 BF인증제도가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용 추계를 통한 대상 건축물의 소요비용을 분석하여 BF인증제도가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말하고 있음.
- BF인증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화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생활



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BF인증 대상 시설로의 편입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위 예산 확보 마련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민간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 KODDI 연구요약집

2024년 4월 인쇄

2024년 4월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 02-3433-0600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인쇄처 : 유-파트너

ISSN
